2022

#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2022
국정감사
백서

2022
국정감사
백서

국민의힘

2022
#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 목차


제1부
**발간사**

원내대표 6
정책위의장 8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회운영위원회 11
법제사법위원회 17
정무위원회 21
기획재정위원회 29
교육위원회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7
외교통일위원회 67
국방위원회 77
행정안전위원회 8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5
보건복지위원회 117
환경노동위원회 125
국토교통위원회 135
여성가족위원회 149

제3부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국회운영위원회 155
법제사법위원회 163
정무위원회 171
기획재정위원회 181
교육위원회 19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99
외교통일위원회 207
국방위원회 215
행정안전위원회 2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3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9
보건복지위원회 261
환경노동위원회 271
국토교통위원회 277
여성가족위원회 289

2022
# 국정감사 백서

제1부

## 발간사

# 원내대표 발간사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호영

우리 국민의힘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열린 국감, 품격 국감'의 4대 원칙 하에 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권교체 후 치르는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을 고발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역화폐 사업의 부작용,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앗아간 부동산 참사, 공공 부문 방만 운영과 혈세 낭비, 국가부채 급증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과 국가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구성과 태양광 사업의 비리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둘째, 국민 생활밀착형 민생 국감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高 현상으로 민생부담이 큰 만큼 과도한 휴게소 음식값 문제와 입점 수수료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학생 100원 학식 확대 방안 마련,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발찌 감독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마약 범죄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셋째, 야당의 정치 공세에 팩트로 철저히 대응하며 정쟁 국감 차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진실 왜곡,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정치 프레임 씌우기 같은 정치 공세에는 팩트로 대응했으며, 공영방송의 악의적 조작방송 실태를 지적하는 데에도 앞장 섰습니다. 의도적인 국감 진행 방해에는 의사진행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품격 있는 국감을 만들어 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현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필요한 법을 제·개정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거나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야당은 새 정부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 민간 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안,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 인하 법안 등에 일단 반대부터 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 핵심 공약과 정책 예산은 무조건 깎고 보는 예산 칼질을 자행하는 등 사실상 대선 불복에 가까운 과도한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 정책위의장 발간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정정당당 국감', '민생 국감', '열린 국감', '품격 국감'이라는 국정감사의 4대 기조 아래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법과 상식, 공정이 회복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마련과 민생고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한다'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살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실정을 낱낱이 살펴 잘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앞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는 데만 매달리며, 준비된 트집잡기와 편가르기 정책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 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 폐해를 감추어 온 국민 기만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이란 미명 아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방만 운영, 한전 적자 사태 및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 및 산업경쟁력 저하 실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각종 기금 고갈과 공공기관 방만 운영, 알박기 인사 등을 밝혀냈습니다. 여전히 진행중인 이재명 게이트의 실상, 좌파 시민단체들의 혈세 낭비, 문재인 정권 낙하산 인사의 강성 노조와의 공생 문제, 부정 부패, 무능력 등 추악한 실상을 알렸습니다. 또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밝혀 문재인 정권이 국민 구조를 포기하고 심지어 은폐하려 했음을 알리고 진실을 바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집중했습니다. 특히 3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민생 금융 및 각종 금융지원책 대안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과 카카오 먹통 사태 등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국민 보호책 마련에도 앞장섰습니다. 안보파탄, 한미동맹 훼손 등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등 국가 안보 기둥을 바로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성장 동력 지원을 위한 대안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백서 제작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국민의힘이 국민께 한 약속도 함께 남겨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거야의 발목잡기 국정감사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문재인 전 정권의 무능, 위선, 실정을 밝혀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수준 높은 정책 국정감사를 이끌어준 당 소속 모든 의원님들과 보좌진, 당 정책위 및 사무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

국민의힘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국회운영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이태원 참사의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 희생자 애도와 재난대응매뉴얼 마련 등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촉구
- 참사의 실제적인 원인규명보다 대통령 책임을 부각하여 반사이익만을 얻으려는 야당과, '가짜뉴스·음모론'의 문제점 지적
-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에, 희생자에 대한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주문

### □ 장애인 탈시설 과정의 문제점 확인 및 대책 마련 촉구

- 장애인 스스로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한 채 무리하게 진행된 탈시설정책
- 탈시설화를 지향하는 정치편향적인 일부 시민단체에 유리한 제도를 마련한 국가인권위의 문제점 지적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탈시설화 정책 마련 제시

### □ 불편부당해야 할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정치편향성 지적

-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편향적 시민단체 등에 국민혈세로 보조금 지급해온 국가인권위의 행태 지적
- 특정 시민단체 출신 사무총장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 부각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 이태원 참사의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이태원 참사의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대책 지적

- 대규모 인파 관련 재난대응매뉴얼 마련 등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촉구
-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및 경찰·소방·지자체의 협력체계 작동 미비 지적

### □ 원인규명보다 대통령 책임 부각하려는 야당과, '가짜뉴스·음모론' 문제점 지적

- 참사의 원인을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 용산 대통령실 경비 경력 배치로 돌리려는 야당의 주장이 견강부회(牽強附會)이자 본질호도임과, 행안부장관 사퇴 요구는 오히려 책임소재 파악에 장애가 됨을 지적
-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보다, 전국민적 슬픔을 정치적·정쟁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책략임을 지적
- 혐오와 분열만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가짜뉴스·음모론에 대한 방지책 마련
-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영 및 총괄 조정, 비상대비 등 국내의 모든 안전사고를 총괄 대응'하도록 한 국민안전처를 폐지한 사실 지적

### □ 국가인권위 상대로, 참사의 2차 가해 방지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주문

-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은 국민적인 슬픔을 정치적인 선동에 이용하려는 것임을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참사와 관련하여 성역없는 감찰 및 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 약속

장애인 탈시설 관련 문제점 지적

## 장애인 탈시설 과정의 인권침해 사실 확인 및 대책마련

### ▌주요 내용 및 성과

□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한 채 무리하게 진행된 탈시설정책**

- 정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사실상 '인권침해'를 자행한 국가인권위
-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당사자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마련 요구
- 장애인 편의시설의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권고활동 지적

□ **탈시설화를 지향하는 정치편향적 일부 시민단체에 유리한 제도를 마련한 인권위의 문제점 지적**

- 탈시설화 정책의 근거가 된 17년 인권위 용역보고서가 사실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에 의해 작성
- 19년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탈시설 로드맵 마련'이라는 정책권고를 함으로써, 탈시설을 원치않는 장애인들을 사실상 지역사회로 내모는 행위를 했음을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국내현실에 부합하는 탈시설화 정책 마련 제시**

- 시설에 속해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의사를 인권위 차원에서 파악하는 등 탈시설 로드맵을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재검토할 것 촉구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준수 권고
- 국회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제고 필요 촉구

국가인권위의 정치편향성 문제

## 불편부당해야 할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정치편향성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법적 근거 없이 정치편향적 시민단체 등에 국민혈세로 보조금 지급해온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의 행태**

- 지난 3년간 6억3,08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지원받은 단체중 민변, 세월호특별조사위원이었던 자가 대표인 단체 등 정치편향적인 단체 다수 포함
- 인권위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19년 기재부의 '국고보조금사업 연장평가', 20년 '국회운영위', 21년 '국회예결위' 등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반복적·연속적으로 '쏠림 지원'

□ **특정 시민단체 출신 사무총장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 박 진 인권위 사무총장, 지난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 작성·게시 행위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감사원 감사 요청**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민단체를 지원해오고, 기재부와 국회 등에서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적을 무시해온 인권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
- 박 진 사무총장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엄중조치 촉구 – '적절성을 판단하여 그 조치를 취하겠음' 답변

국민의힘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법제사법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민생침해범죄 국가 대응역량 강화 주문

-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 저하 지적
  - 일방적인 검경수사권 조정, 위헌적인 검수완박법 처리 등
-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 대응 주문
- 조두순, 김근식 등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 증원 등 철저한 전자감독 운영체계 마련 촉구

### □ 권력형 비리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 불법 대선자금, 대장동 및 성남FC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원전, 농지법 등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 그 외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을 이용해 지연시켰던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 촉구

### □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과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국가운영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법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
- 탈원전, 태양광비리,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잘못된 정책과 불법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철저 감사 촉구
- 공공기간 방만 및 불법, 탈법 운영에 대한 철저 감사 촉구

### □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사건 처리 촉구

- 각급 법원들의 재판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지적하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적
- 헌재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지연으로 헌법수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 주문

#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예산 지원 강화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 저하

- 일방적인 검경수사권 조정, 위헌적인 검수완박법 처리 등으로 인해 형사사법체계 혼란 가중 및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 불편 극대화
- 이에 수사체계 개편, 검찰 기능 정상화 등 국가의 민생침해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문

### □ 스토킹법 등 민생범죄 엄단을 위한 관련 입법 조속 처리

- 반의사불벌죄 폐지, 긴급 및 잠정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속 처리
- 디지털성범죄 대응강화, 범죄피해자보호 강화 등 관련 입법 조속 처리

### □ 보호관찰소 전담인력 및 예산 확충 필요성 제기

- 신당역 살인사건, 아동 상습 성범죄자 출소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 증가로 보호관찰(전자감독)에 대한 중요성 날로 증대
-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 전담인력 및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적극 지원 약속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보호관찰소 전담인력 및 예산 확충

#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감사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 촉구

- 불법 대선자금, 대장동 및 성남FC사건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당부
- 탈원전, 농지법 위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등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지연된 수사의 신속한 처리 촉구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 □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탈법적인 정부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 탈원전, 태양광비리,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철저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지속 촉구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 문재인 정부 5년 국정 난맥상 재강조 및 실효적인 민생 정책 제시

## ▌주요내용

**□ 윤석열정부 1년차 출발선에서 맞이하는 국정감사로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 정부 5년 동안 국정 난맥상 및 문제점 등을 제대로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나라 바로세우기 희망국감,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들을 우선하는 살피는 국민 퍼스트 민생국감 실천**

**□ 문재인 정부 각종 불법 집행 및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방만한 운영 실태 및 불법적인 집행 등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 및 결과에 철저한 수사 강조
- 이스타항공 관련 채용비리, 운항비리, 개인비리, 탈세비리, 심사비리, 인수비리 등 6대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촉구
- 권력형게이트 성격의 금융사고, 사모펀드 사태(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가 전정권 실세와 관련,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관련 당국의 조사 촉구 및 합리적인 피해자 보상 대책 강조
- 불법외화 송금 및 대북코인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 강조

**□ 전임 정부 임명된 정무직 인사들의 내로남불 이중적 행태 및 방만 기관운영 집중 부각**

-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정권 편향적 대응, 적극행정 위원에 지인 가족 추천 등 정치편향적 행보가 있었음에도 말로만 기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 운운하는 권익위원장의 이중적 행태 집중 지적
- 경사연 이사장 등 전정부 임명 국책연구기관장들(현정부 국정철학 부재 등)의 책임지지 않는 자세 및 자리 알박기 행태 비판
  - 특히, 경사연 등 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과도한 특정업체 커피값 지출, 과도한 행사비지출 및 쪼개기지출 의혹 등) 지적 및 시정 조치 촉구
-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의 내부 비위 사실 인지 가능성, 관리 부실 인정됐음에도 연임 성공 이면에 윗선 봐주기 의혹 제기

**□ 각종 정책 집행 및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부각 및 제도 개선 강력 촉구**

-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대책, 의무고발제 사건의 철저한 사후관리 감독, 테라루나 사건 등 가상자산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안심전환대출 활용도 제고, 저신용자 보호를 위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안전망 대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방안, 실효적인 동의의결제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

## 문정부 인사들의 정권편향적 행태, 방만한 기관 운영 집중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민권익위원장의 편향적 행태 집중 지적**

-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여부 및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서 정권편향적 유권해석, 이재명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편파적인 답변 등 정치편향적 행보 지적
- 전임 권익위원장 재임시보다 현 권익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권익위 내부에 대한 감사원 제보 증가했으나, 감사원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
- 권익위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 위원장 관련자 임명 관련 위원장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비판

**□ 국책연구기관장의 방만한 기관운영 등 지적**

-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주요정책이 심판을 받고 폐기됐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자세 지적
- 경사연 등 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특정업체에 과도한 커피값 지출, 불필요한 행사비 지출 및 쪼개기 지출 의혹 등), 연구기관별로 들쑥날쑥한 통신비 지급 기준 등 지적
- 경사연 소속기관장이 기관 내부 각종 비리의혹과 늑장 겸직신고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한 이유가 민주당 고위직과의 관계 등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국감 증언 과정에서의 위증 의혹 등 문제 제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감사원 감사청구 등 검토**

- 국감 증언내용에 대한 위증 고발 검토
-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제보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적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관련자 징계 검토

## 문정부 인사 관련 각종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비리백화점 이스타항공의 6대 비리에 대한 조사 촉구**

- 이스타항공 관련 채용비리, 운항비리, 개인비리, 탈세비리, 심사비리, 인수비리 등 6대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촉구

**□ 권력형게이트 성격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촉구**

- 사모펀드 사태(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가 전정권 실세와 관련되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 제대로 된 조사 촉구 및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보상대책 마련 촉구
- 쌍방울이 상장사라는 프리미엄을 악용해 전환사채를 발행해 특정인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이 과정들이 이재명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조사 요청

**□ 대북코인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필요성 강조**

- 불법외환송금 사건 관련 전문업체 의뢰 결과 북한 가상자산 흐름 관련 비공식 자료 확보, 아태협이 태국에서 대북코인을 발행했다고 알려졌으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바 없음을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사모펀드 피해자 보상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 3高시대에 맞는 민생금융 개선방안 현황 점검 및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민생금융 개선방안 개선 필요성 강조

- 예대금리차 확대 억제, 보험민원 처리기간 축소 등 금융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촉구, 대형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첨단기법에 의한 처리방안 강구 요청
- 선불충전업체 악용 보이스피싱 사례 급증, 법제도 개선 요청
-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나 폐지 등 서민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검토 요청

#### □ 각종 금융지원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 안심전환대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상주택 가격 상향 적극 검토 요구
-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필요
- 전세자금대출 대위변 제중 절반 이상이 2030 청년층, 맞춤형 지원대책 요청

#### □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성 강조

- 테라루나 사건에서 보듯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 강조
-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그림자규제로 오히려 거래소의 독점성만 강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상폐기준의 모호성 등이 문제가 되는데 과연 자율규제만으로도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지 등 제도개선 관련 효과성 문제 제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민생금융 관련 법안 및 제도개선 추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구제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상향 조정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제), 금융위원회 설치법(개)
  -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자율감시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 공정거래정책 운영상 문제 지적 및 실효적인 제도개선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 동의의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의의결 이후 이행과정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점검 필요성 제기
- 특히 거대플랫폼 기업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독과점기업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했음을 지적

#### □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개선 요청

- 국회 차원의 법안 논의 이전 단계에서라도 공정위가 지침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
- 거대 플랫폼 기업의 업권별 독과점 실태조사 요청
- 시장지배적지위 관련 심사지침 및 기업결합 심사지침 마련 등 조속한 대응책 마련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플랫폼기업 관련 심사지침 개정 추진

- 독과점 심사지침 연말까지 개정 완료 예정
- 기업결합 심사지침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 예정

#### □ 동의의결 이행과정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문정부 5년간 정책 집행상의 특혜성·편향성 문제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태양광 사업에 대한 방만한 지원행태 사례 지적**

-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방만한 운영 실태 및 불법적인 집행 등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철저한 수사 강조
- 신보의 태양광 발전시설자금대출 규모가 09~22.8월까지 13년간 1446건에 7천억원 규모인데, 그 중 2017년~202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49.5%)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집행됨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마저도 그 절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집행됐다는 것은 문정부의 태양광 광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라고 지적

**□ 신용보증기금 ESG추진위원회 외부위원의 편향성**

- 'ESG 추진위원회 외부위원 현황'을 보면 외부위원 6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연관된 이력 보유, 정치적 편향을 지닌 이상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임명 이후 단 두 차례 회의만으로 신보 ESG 경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태양광사업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촉구**

- 특히 보증사업에 대한 부실가능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각종 위원 선임 과정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요청**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기획재정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 실정을 국민께 알리는 국감

-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재정주도 경제 운용으로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부동산 가격 급등.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 5년간 87.3%(16년 말)에서 104.3%(22년 3월)로 급격하게 증가
-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28차례나 발표했으나, 서울아파트 중위평균가격은 5.1억원에서 9.2억원으로 상승.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77.8% 상승(중위 매매가 기준)
  - 징벌적 부동산 세제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3배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11배로 늘어나 OECD 회원국 중 재산과세 비중이 2위를 기록
- 법인세 인상 등 국제 추세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으로 국제조세경쟁력 10단계 하락
-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103.5% 증가. G7국가 중 독일(138.3%)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
- 무너진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지난 5년간 일자리는 양적으로 확대되어 187.1만개 늘고 8.1% 증가. 이중 공공부문 일자리는 38.2만개, 늘어난 일자리의 20.4%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
- 공공기관 조직·인력과 부채 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은 크게 악화

### □ 현 경제 상황 진단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국감

-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민생고, 경기침체 우려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한 국감
- 3高로 고통받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 정책국감

### □ 향후 개선과제

- 거대 야당의 무례한 언행과 동료 의원·참고인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이 다수 발생하였음. 수적 우세를 내세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횡포에 소속 위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강력히 대응할 필요
-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성 질문에 대해 피감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 민주당이 미화한 소득주도성장의 '진실'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국민 혈세로 분식된 '고용'

- **(취업자 수 증감)** 2018년 취업자수 급감(△21.9만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6.3만명) 때문이 아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 정책실패 숨기기 위해 재정 투입을 통한 초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려 통계를 분식하고, '포용성장'으로 간판 갈이
- **(고용률)** 고용률 상승폭은 朴 정부(+2.6%p)보다 文 정부(+1.8%p)에서 더 축소. 文 정부 고용률 상승 역시 재정일자리 증가와 인구 감소로 나타난 허상
- **(실업률)** 정권별 연평균 실업률은 MB 정부 3.5%, 朴 정부 3.6%, 文 정부 3.8%
- **(청년실업률)**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양산으로 청년실업률이 하락 ('17년 9.8% → '21년 7.8%)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고용의 질 악화.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중 급등('17년 20.3% → '21년 28.1%)
- **(고용의 질 악화)** 文 정부 비정규직 규모 : '16년 648.1만명 → '21년 806.6만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비율 : '16년 3.4% → '21년 5.5%, 주요 업종별 일자리 수 : 공공행정·보건복지 분야 +81만명 vs. 제조업 △21만명, 연령대별 일자리 수 : 3040세대 △93만명 급감 vs. 60대 이상 +156만명 급증

### □ 재정 투입으로 왜곡 해석된 '소득 양극화'

- **(임금 격차)** 가장 취약한 저임금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임금 격차 통계에서 누락. 수치가 개선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실업자 급증('17년 1.4만명 → '18년 5.0만명)
- **(소득 분배)**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도 재정투입을 통해 개선된 것처럼 보여지나 가처분소득이 아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오히려 분배가 악화

### □ 정치적 논리로 망가진 '거시경제 지표'

- **(성장률 둔화)** 성장을 임금 인상과 소비 증대라는 총수요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에 실패하고 성장률 둔화를 고착화
- **(재정 악화)**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비율 급등('16년 36% → '21년 47%)
- **(공공기관 비대화)** 5년간 공공기관 부채 +83.6조원, 공기업 이자보상배율은 급락('17년 2.7 → '21년 0.1)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정치적 편향성과 포퓰리즘 정책의 근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무너뜨린 소득주도성장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연구 필요

**현 경제 상황 진단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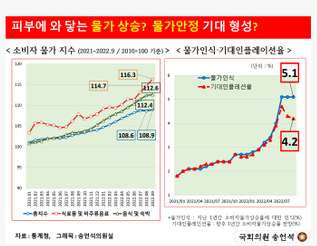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 우려

## ▌주요 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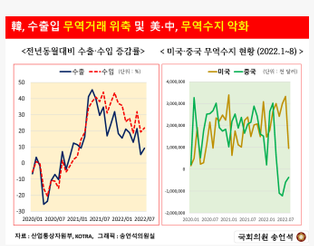
### □ 국내외 경기 진단

- **(물가)** 식료품, 비주류 음료 등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 피부에 와닿는 수준. 기대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으나 향후 물가 안정 내지는 하락 추세라는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
- **(수출입)** 2020년 코로나로 무역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후 그 기저효과로 2021년 상반기 정점을 찍고 계속 하향 추세. 구조적으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있어 수지도 좋지 않다고 지적
- **(에너지)** 두바이유 가격은 하락 추세이나 에너지 등 공급망 외부 충격은 물가, 수출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피부에 와 닿는 물가 상승? 물가안정 기대 형성?




韓, 수출입 무역거래 위축 및 美·中, 무역수지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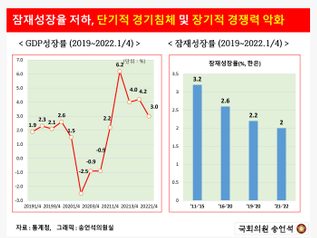

에너지 위기 등 공급망 외부충격 계속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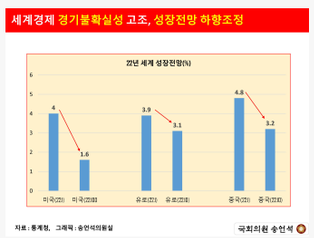

### □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 **(잠재성장률)** 결국은 우리의 경제 체력이 중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성 제고, 규제 완화, R&D 지원 등을 통해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

잠재성장율 저하, 단기적 경기침체 및 장기적 경쟁력 약화




세계경제 경기불확실성 고조, 성장전망 하향조정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 인플레이션 vs 스태그플레이션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한국 경제, 특단의 대책 강구할 필요

- 경기 상황 진단에 따라 경제에 대한 대응자세가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진다고 강조. 내년 상반기는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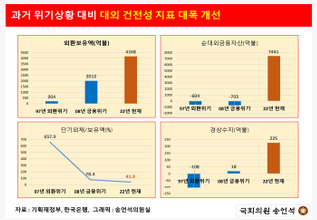
현 경제 상황 진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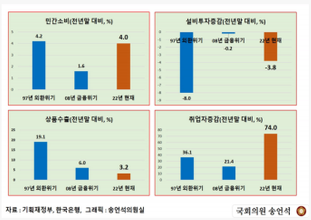
# 민주당의 지나친 경제위기 조장 경계,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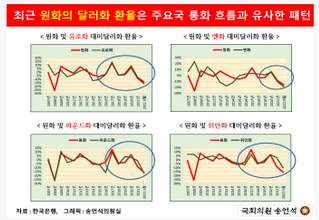
## ▌주요 내용 및 성과

### □ 한국 경제, 정말 위기인가?

- **과거 위기 상황 대비 대외건전성 지표는 큰 폭으로 개선**
  - 97년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에 비해 외환보유고는 양호한 상태로 대외건전성 지표 나쁘지 않음. 순대외금융자산, 외환보유액에 대한 단기외채 비율도 상당히 낮아 유동성 문제도 상대적으로 작고, 경상수지도 괜찮아 보임
-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경제지표 흐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강조**
  - 민간소비·설비투자·상품수출·취업자 증감 등을 확인해본 결과, 민간소비는 코로나 기저효과로 두 위기 때보다 양호한 수준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님. 더 큰 문제는 설비투자 감소. 97년 외환위기보다 낫지만 08년 금융위기보다 나쁜 상황.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품 수출도 좋지 않음. 취업자 수 증가도 기저효과의 영향이 큼




- **최근 원화의 달러화 환율 패턴은 주요국 통화 흐름과 유사**
  - 환율은 다른 주요 기축국 통화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음. 하지만, 과거 두 번의 위기 시에는 환율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내려왔으나, 최근엔 환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우려. 다른 주요국 통화와 비슷한 패턴이나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불안한 요소가 있는 만큼 한은과 공조해 면밀한 체크 필요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정부에 경제지표 흐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주문

-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한 당정간 정보 공유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당부

경고등 켜진 재정건전성

#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시급

## ▌주요 내용 및 성과

### □ 文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급속히 악화

- 지난 5년간 선심성 재정 정책으로 재정적자는 매년 100조원을 기록. 文 정부 채무 증가폭은 13.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올해 국가채무 역시 1064조원으로 역대급
- OECD 38개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뿐. OECD, IMF 등 국제기구도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강조

### □ 코로나 이후 재정지출을 다시 줄이는 글로벌 추세와 달리 역주행한 한국

- 작년 4월 IMF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과 이머징마켓의 경우 코로나 이후 늘어난 정부지출을 다시 줄이며 1~2년 사이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늘어난 재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유지. 이는 文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코로나 극복 외에 경제정책 운용 실패,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기인했기 때문
- 文 정부의 재정정책을 지속할 경우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197만원에 달하나, 尹 정부의 재정준칙 반영 시 1인당 4917만원으로 8280만원의 채무부담액 감소

###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와 즉각적인 적용 촉구

-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재정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으며,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악어 입' 그래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되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에 대해 우려
- 尹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로 되돌려 재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지준칙 도입과 채무지표 활용을 통해 증가 속도를 관리함으로써 재정 통제를 강화. 이는 미래세대에 돌아갈 막대한 청구서를 최소화하기 위함

퇴보한 공공부문 개혁

# 文 정부 5년간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 부담만 폭증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전무후무한 공무원 수 증가로 국민 부담 급증

- 역대 정권 중 공무원 수가 단기간에 10만명 이상 늘어난 건 사상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4년간 공무원 재직자 수 비교〉

| 구 분 | 2013 ~ 2017년 | 2017 ~ 2021년 |
|---|---|---|
| 증감 | 47,848명 | 140,963명 |
| 증감율 | 4.5% | 12.6% |

- 과거 10년간 인구 대비 공무원 수 비율은 1.2%를 내내 유지해오다 文 정부 들어 1.45%까지 상승
- 국민의 떠안아야 할 연금충당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비교〉

| 구분 | 2013 ~ 2017년 | 2017 ~ 2021년 |
|---|---|---|
| 군인연금기금 | 58조6000억원 | 63조1000억원 |
| 공무원연금기금 | 190조9000억원 | 229조3000억원 |
| 연금충당부채 | 249조5000억원 | 292조4000억원 |

### □ 부실 경영으로 재정 상황은 최악 : 조직·인력·부채 ↑ 수익성·생산성 ↓

- 정권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 구분 | 이명박 정부 (2008~2012) | 박근혜 정부 (2013~2016) | 문재인 정부 (2017~2021) |
|---|---|---|---|
| 증감인원 | 11,263명 | 64,685명 | 114,298명 |
| 증감율 | 5.8% | 24.5% | 34.8% |

- 줄어들던 공공기관 부채, 文 정부 들어 다시 급등

| 구 분 | 2013 ~ 2017년 | 2017 ~ 2021년 |
|---|---|---|
| 증감액 | -25.4조원 | +87.9조원 |
| 증감율 | -4.9% | 17.8% |

- 공기업 영업이익 급락 : 13.5조원(17년) → 0.7조원(21년)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부실 공기업 급증 : 5개 기관(17년) → 18개 기관(21년)
- '사회적가치 구현'이라는 정치 편향적 배점(22점)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마저 왜곡되어 자발적 재무관리 유인마저 감소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 순차적으로 추진

- 공공기관의 효율성, 생산성, 재무건전성 등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기능·조직 인력·예산·자산관리·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중점 추진

**공공기관 방만 운영**

# 경영 악화에도 수 백억원의 성과급 잔치한 한국조폐공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소득주도성장 몸소 실천 중인 조폐공사사장(전직 靑 일자리수석)

-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으로 지난 5년간 663만개의 일자리 증발. 30대 취업자 수는 31만명 줄었고, 40대 취업자도 49만명 감소. 소주성과 일자리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초대 일자리 수석이 조폐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인사
- 조폐공사는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확대로 대규모 손실을 내고,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했음에도 사업을 재편하거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수 백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비판

### □ 국민 기망한 조폐공사의 경영 혁신안

- 조폐공사는 정원의 7.9%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실상은 22년 6월 기준 정원(1486명)과 현원(1368명)의 차이(118명)를 현원에 맞추는 단순 수치 조정에 불과. 결원 축소를 마치 대폭적인 인력 감축인 양 눈속임

### □ 재무 상황은 최악인데 수백억 성과급 잔치한 조폐공사

- 지난 5년간 조폐공사의 재무상태도 계속 악화되어 부채비율이 2017년 28%에서 2021년 104.71%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직원들은 수백억원의 성과급 잔치(경영평과 평가급 80억원 + 내부평가 성과급 108억원)에만 몰두

국민의힘

**재무 악화에도 수백억 원 씩 성과급 파티**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경영평가 성과급 | 112억 | 105억 | 109억 | 131억 | 82억 |
| 내부평가 성과급 | 116억 | 116억 | 112억 | 109억 | 108억 |
| 기타 성과급 | 86억 | 85억 | 84억 | 83억 | 84억 |
| 합 계 | 314억 | 306억 | 306억 | 322억 | 274억 |
| 경영평가 등급 | B | B | A | B | C |
| 인 원 | 1,340명 | 1,352명 | 1,319명 | 1,285명 | 1,304명 |

※ 출처 : 한국조폐공사

국회의원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옹진

국민의힘

**한국조폐공사 재무상태, 점점 나빠져**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자산총계 | 3,912억 | 4,046억 | 4,831억 | 5,951억 | 6,345억 |
| 부채총계 | 871억 | 965억 | 1,668억 | 2,909억 | 3,246억 |
| 자본총계 | 3,040억 | 3,082억 | 3,162억 | 3,042억 | 3,099억 |
| 부채비율 | 28.65% | 31.32% | 52.75% | 95.62% | 104.71% |
| 매출액 | 4,849억 | 4,810억 | 5,249억 | 5,314억 | 5,500억 |
| 영업이익 | 130억 | 139억 | 177억 | △107억 | 50억 |
| 당기순이익 | 116억 | 105억 | 146억 | △79억 | 37억 |

※ 출처 : 공공기관 알리오

국회의원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옹진

### □ 사업 능력도, 인적 역량도 안 되는 조폐공사. 막대한 손실만 키워 국민 부담↑

- 조폐공사의 화폐류·비화폐류 연도별 영업실적을 보면 2020년 각각 32억원, 120억원의 손실을 냈고, 최근 5년간 13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
  - 20년 불리온 메달 사업 공급업체 경영난으로 194억원의 대금 미수, 결국 대손상각 처리. 해당 업체는 19년 말 부채비율이 1800%에 달하는 부실 업체인데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건 공사 직원들의 업무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
  - 2020년 인도네시아 은행권 수출사업에서도 8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 발생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조폐공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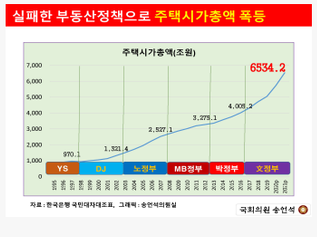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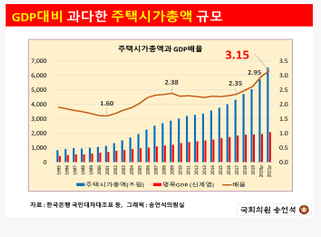
#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폭등, 국민 세 부담만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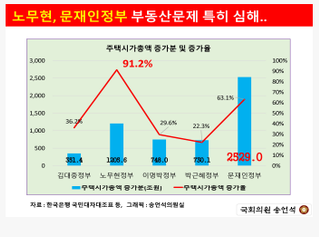
## ▌주요 내용 및 성과

### □ 文 정부 5년간 주택시가총액 GDP의 3배 초과

-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21년 주택시가총액은 6534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정권별로 봐도 부동산 문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 연 100조를 넘긴 부동산 세수 … 결국 국민만 독박

- 지난 정부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과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2017년 59조원에서 시작했던 세수는 2021년 108조원으로 폭증

| 연 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부동산 세수 | 59.2조원 | 64.1조원 | 65.5조원 | 82.8조원 | 108.3조원 |

  - 국세는 23.6조원에서 57.8조원으로 2.4배 증가. 이중 종부세가 1.7조원에서 6.1조원으로 증가율(3.6배)이 가장 높았고, 양도세 증가분이 36.7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상증세 또한 5년간 8.3조원으로 크게 늘었음
  - 재산세, 취득세 등 재산세 역시 2017년 35.7조원에서 2021년 50.5조원으로 1.4배 증가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지난 5년간 왜곡된 부동산 세제, 법 개정 통해 국민 부담 완화

-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 가액 기준에 따른 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세율 인하 등 추진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 野 '초부자 감세' vs. 與 '경제 마중물'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법인세 인하 … 대기업 편향 과세 vs. '세계적 추세'

| 민주당 | 국민의힘·정부 |
|---|---|
| • 수혜 기업 : 상위 0.01% 초대기업<br>• 감세 효과 : 대기업(80개, 과표3천억 이상) 4.1조/ 중소·중견(9.8만개) 2.4조<br>• 과표 2억원 이하 기업 3.4만개는 세금 증가<br>• 낙수 효과 불분명. 영국도 감세안 철회<br>• 일괄적 인하 아닌 투자·고용 기업에 한정 | • 수혜자 : 시총 상위 10대 기업 소액주주 99.9%<br>• 세 부담 경감률 : 대기업 10.2%, 중소 12.8%<br>• 각국 투자 증대·외투 유치 목적 세율 인하<br>• 文 정부를 제외한 역대 모든 정권에서 인하<br>• 영국의 감세안 철회는 '재정건전성' 때문 |

###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 부자 감세 vs. '저소득층 혜택'

| 민주당 | 국민의힘·정부 |
|---|---|
| • 감세 효과 :<br>총급여 3천만원 이하 : △8만원 (△27%)<br>총급여 1억원 이하 : △54만원 (△5.3%) | • 하위 2개 과표만 조정. 서민·중산층 집중<br>• 세 부담 귀착 : 서민·중산층 △2.2조/ 고소득층 △1.2조<br>• 총급여 1.5억원 초과 구간, 공제 혜택 축소<br>-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54 → 24만원) |

### □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도입 … 내년 시행 vs. '2년 유예'

| 민주당 | 국민의힘·정부 |
|---|---|
| •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br>- 야당, "조세저항이 적은 지금이 도입 적기"<br>• 꼼수 부자 감세<br>- '20년 상위 1%가 과세대상 소득 70% | • 2년 유예 필요<br>•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증시 위축<br>- 추경호 장관, "제도 변화, 지금은 때 아니다." |

* 일반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세 폐지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 증세에 1400만 개인투자자 반발 심화 : 2020년 대규모 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2022년 국회 국민청원 5만 돌파 기재위 회부('22.10.27)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2022 정부 세제개편안 입법 추진

- 정부가 국회 제출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 통과

지역화폐 실효성 의문

# 고비용, 저효율 입증된 지역화폐

## ▌주요 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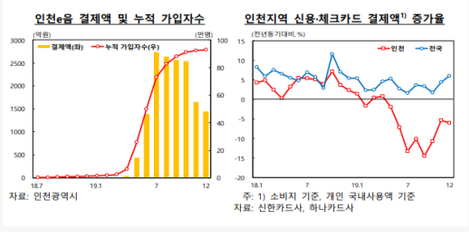
### □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발행된 지역화폐만 약 5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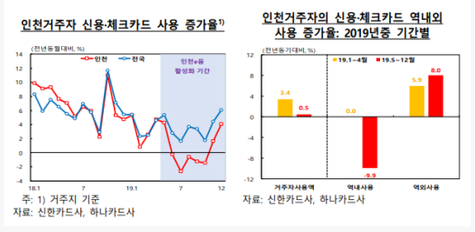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 분 | 전 체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발행규모 | 586,300 | 1,264 | 31,812 | 133,216 | 235,871 | 184,137 |

### □ 한은 인천본부의 '지역화폐 경제 효율성 분석 결과' 인용, 실효성 비판

- 인천시가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상품권 '인천e음'은 2019년 4월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최대 90만명 가까이 급증하고, 발행액도 1.5조원에 달하는 등 전국 지역상품권 발행액의 65%를 차지
- 인천e음 활성화 기간 중 인천 거주자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증가율은 크게 둔화(3.4% → 0.5%) 되었고, 소비지역별로 보면 역내 사용액은 크게 감소(0% → -9.9%)반면, 역외 사용액은 그 증가세가 확대(5.9% → 8.0%)




-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니 역내 소비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대체되어 버렸고, 주머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역외 소비를 했다며 지역화폐가 역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의문. 역외 거주자들의 인천 소비 유인율도 감소
- 지역화폐 국비 지원으로 인한 경제 손실, 부대 비용 과다 발생
  - 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기준 지역화폐 9조원 발생을 위한 정부 보조금 중 경제적 순손실은 46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 행안부, 지역화폐 발행의 부대비용은 발행 액면가의 2%로, 지역화폐 9조원 발행 시 부대비용은 1800억원으로 추정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한은에 지난 5년간 전국 단위의 지역화폐 실효성 분석 주문

- 지난 수년간 文정부가 엄청난 지역상품권을 지역에 배포했는데 지역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 본부 차원의 조사 요구
- 지역화폐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고유 사무, 지방교부세 등 활용 필요

**공익법인 회계 공시 위반**

# 공익법인 관리에 구멍 뚫린 국세청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엉터리 회계 처리 및 부실 공시

- 정부 보조금, 각종 후원·기부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 시민단체의 회계 공시 내용을 보면 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부실투성이
- **(사례 1)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 연루된 '아태협'의 부실 회계 검증 필요**
  최근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된 이후, 쌍방울 김○ 회장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안○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석연치 않은 커넥션 제기
  - 2018년 11월 이재명 지사 시절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 경기도가 3억원의 보조금을 내고 부족한 자금 5억원을 아태협회에서 후원. 이 아태협회를 후원하는 유일한 기업이 쌍방울.
  -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공시를 통해 결산 서류, 기부금 모집액 및 사용 실적, 외부기관 감사실적 등을 제출해 공개. 아태협은 2018~2021년 보조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유치했으나 수익지출 내역을 보면 증빙자료, 용처가 빈번하게 누락되어 있음
  - 아태협 충청포럼의 경우, 이재명 대선활동을 적극 지원한 조직.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은 상증세법 상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으며, 내부거래 역시 엄격하게 제한하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국세청의 면밀한 회계 검증 필요성 제기
- **(사례 2)** 21년 8월 당시 공익법인을 운영하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국세청 지침을 위반하고 회계 공시에서 기부금 사용 내역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재공시
- **(사례 3)** 정의연은 20년 5월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후 결산서류 등을 재공시
- 국민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선의로 후원금을 기부하지만, 공익법인은 공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적 유용, 횡령·배임, 부당 지출 등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공익법인 등의 부실 공시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 감독 강화

- 재공시를 언제든지 허용하는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사항 검토

文 정부의 노골적인 통계 분식

# 정치적 논리에 뒤틀린 국가통계, 축소·은폐에만 급급했던 통계청

## ▌주요 내용 및 성과

### □ 文 정부 5년 내내 끊이지 않았던 통계 조작

-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조속히 입증하겠다며 여당 간사 명의로 관련 예산을 소관 기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
- 2018년) 조사 결과 소득분배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황수경 통계청장을 즉각 경질하고, 친문 인사로 교체
- 2019년) '통계청 업무계획'에도 없었던 새로운 소득지표를 개발·공표하고, 표본체계를 바꾸는 등 조사 방식을 정권 입맛대로 변경
- 2020년) 강신욱 청장,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하며 "통합조사에 대한 시계열은 2019년 이후부터 비교할 수 있다"며 시계열 단절 선언

### □ 가계동향조사 조작으로 '소비자물가지수'까지 왜곡

- 2021년)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시계열 연계 연구' 용역사업까지 발주했으나 두 차례의 조사 방식 변경으로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 데이터들간 직접 비교가 불가능함을 재확인
-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단절로 이를 근거로 산정되는 소비자물가지수도 시계열 단절 발생.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가 경기를 판단하고 물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국민연금·기초연금·최저생계비 등 각종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활용. 물가지수에 연동된 법안만 18개 달해 정책 수립 오류 발생 우려

### □ 국가통계품질 저하, 숨기기에 급급했던 통계청

- 통계청, 2020년 「정기 통계품질 진단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성과 일관성이 있어 우수한 것으로 진단되었다'고 자평
- 통계청장, 여당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조사의 단절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가 크지는 않지만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文 정부 5년간 왜곡된 국가통계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 표본체계 및 조사 방식의 정상화, 비정규직 일자리·재정지원 일자리 등 제대로 된 고용통계 지표 산출을 통한 정책 지원 강화 필요

국민의힘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교육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 역사교육과 통일교육, 비리인사 알박기 임용과 코드인사 등 인사전횡, 혈세를 축내는 한전공대 부실개교 등을 비판

-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역사적 편향성과 왜곡된 성교육 우려를 지적하고, 안보가 실종된 통일교육의 허구성을 비판함
- 각종 비위 의혹이 있는 방송대 총장의 임용과 끝없는 조희연 교육감표 '코드인사'는 알박기 인사전횡임을 문제시함
- 건물 1개동으로 개교한 한전공대는 정치적 일정에 맞춘 졸속 개교이며, 국립대 교수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관련 비리 사실을 지적함

### □ 대학생 '천원 학식' 확대, 기숙사 확충,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대한 대처를 정부와 대학, 교육청에 요구하며 학생복지와 안전, 학습권을 챙기는 민생국감에 주력

- 대학생 식비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 학식 확대와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을 촉구함
-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단호한 대처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입법 조치와 대책 마련 요구

### □ 기초학력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원 확충, 지방대 육성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 제시

-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된 학생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과거 일제고사/서열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맞춤형 수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평가확대를 촉구
-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교육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재정혁신을 위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등 관련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 지방대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대학혁신을 지적

**교육재정 혁신**

# 시도교육청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교육재정과 고등교육 혁신 강조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교육청의 방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실태 지적 및 초중등·고등교육간 균형 잡힌 재정 투자 촉구

-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과 '입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7,569억원 지출하는 등 교육감들의 교육 포퓰리즘 정책 우려 지적
- 시도교육청 이월, 불용액이 5년간 연평균 5조 6천억원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배분과 집행의 적시성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예산 편성을 촉구
- 작년 기준 5조원에 머물던 교육청 적립금이 올해 약 15조원이 추가돼 누적액 총 20조원 돌파

### □ 지방대 위기와 고등교육 혁신

- 문재인 정부, 지방대 육성 정책 사업비 총 5조8,417억원 투입했으나,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은 매년 증가해 20%에 육박하는 등 지방대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
- 10년간 15만명 양성하는 반도체 인력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데, 지방대를 우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한편, 대학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부와 대학의 지원으로 대학생이 '천원 학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교육재정 혁신을 위한 입법 조치 및 예산 확보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 3법, 사립대학구조정법 제·개정 추진
- 지방대 육성 및 대학생 천원 학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

# 전 정부 알박기 및 진보교육감의 코드인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한전공대 졸속 개교’, ‘한국형뉴딜 비리’로 혈세 낭비

- 금년 3월 개교한 한전공대는 건물 1개동만 완공된 상태이며 연간 31억원 넘는 임대료를 지불. 또한, 2031년까지 총 1조 6,112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예정으로 호남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대선 전 개교’라는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개교
- 전북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졸속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편승해 온갖 편법을 동원, 사업 수주 후 중국에 7천여 억원을 받고 기업을 매각한 건에 대해 교육부 감사 요구

### □ 알박기 인사전횡 및 코드인사

- 끝없는 조희연 교육감표 ‘코드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수처 1호 사건인 불법 특별채용 의혹, ▲전 청와대 대변인과 교육비서관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과 대외협력담당관으로 채용,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통진당 측 변호인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뒤 임기만료 후 재임용
- 현 방송대 총장의 각종 비위(겸직금지 위반, 세금 체납 등)에도 문정부 임기말 총장으로 임용된 사실은 알박기 인사의 전형적인 행태임

### □ 전교조의 전유물로 전락한 교장공모제

-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금년 22개교 중 17개교(77%)가 전교조 출신으로 임용하는 등 진보교육감 코드 보은성 인사 통로로 활용
- 인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비리사건 : 전교조 출신 교사를 공모 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 사전 유출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개선대책 마련 및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

- 한전공대 설립 특혜 여부 조사 및 향후 운영 관련 국가부담 경감대책 마련
- 방송대 총장의 비위 및 전북대 교수의 한국형뉴딜 비리에 대한 감사 요구



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

# 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촉구

-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악화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과거 일제고사/서열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IT 활용 등을 통한 맞춤형 수업을 보장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를 촉구함
-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 분석결과, 8개 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평가 등을 금지·지양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적발

### □ 학교 폭력과 교원침해 심각성 부각

- 학교폭력은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바 교육청의 단호한 대처와 학교폭력대처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촉구
- 교권침해로 인한 ‘위기의 교사’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 교육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최근 3년간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평균 1만 3천여명 발생, 윤석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초등전일제 교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모델도 적극 검토
- 장애아동 중 유치원 공교육을 못 받는 아동들이 16%인데, 국가에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증가하는 고려인 학생(22년 17,529명, 18년 대비 67.5% 증가) 대상 한국어 학급에 대한 인력 및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방지,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을 위한 입법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3법, 학업 성취도 평가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

# 초중등 교육과정 정상화 및 안보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문재인 정부가 졸속 추진한 2022 개정교육과정 전면 수정 촉구

- 좌편향 논란 빚은 역사과 개정안 내용 지적 및 포괄적 성교육 내용 담은 보건과 개정안의 위험 지적
- 국민들이 교육과정 교과서를 수용할 있는 수준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교 한국사에 있어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적절한 비중이 필요함

### □ 안보에 기반한 통일교육

- 문재인 정부는 일시적인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안보'를 삭제하고 '평화통일교육' 기조로 완전히 변경한 우를 범함. 여전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군사대치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편향된 통일교육이 아닌 균형 잡힌 안보통일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함을 촉구
- 2020년 통일강원연구원 주도로 개발한 '중고생 북한지역 현장학습 가이드북'은 편향된 역사관, 북한 미화 등 교육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2022 개정교육과정에 올바른 역사관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

# 중국의 역사왜곡 및 공자학원 문제점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중국의 역사공정, 문화공정 이제는 '고서공정'까지

- 중국은 각국 한문 고전을 자국 고전으로 편입시키는 '역외한적진본문고' 총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고전인 '국조오례의' 등 349권에 달하는 고전도 포함시킴. 이에 대응하는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총간 사업 인력은 겨우 12명에 불과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무한 상태임
- 중국의 동북공정 편향성에 대해 연구자료 발간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련 자료를 영어, 중국어 등으로 발간하여 외국 잡지에도 게재하는 대응이 필요함

### □ 문재인 정부의 친중·반일 기조가 역사 왜곡 대응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 문재인 정부의 반일선동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의 역사왜곡에는 침묵. 중국의 역사왜곡 건수는 5배 급증했지만, 대응 예산은 오히려 반토막인 반면, 일본의 역사왜곡 건수는 14%로 감소했지만, 대응 예산은 약 3배 증가

### □ 22개 대학내 공자학원 운영 및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운영 부적절

-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던 공자학원은 문제시되어 많은 국가에서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한국은 만연된 상황임
- 서울대 도서관내 시진핑 자료실(14,790권)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는 지도자의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 서울대에 폐쇄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전문가 충원 및 예산 확대 추진

- 동북아역사재단의 '전략적 국제화사업' 및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총간 사업' 예산 증액

국민의힘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MBC의 조작 및 편파적 보도를 비판하고,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촉구

- 대통령 미 순방시 사적 발언과 김건희 여사 관련 PD수첩의 재연 미고지 등 조작 보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촉구
- '월성원전 1호기 오염수 샌다' 방송의 허구성 지적하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허위 보도에 대한 기관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

### □ 문재인 정부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부실과 방송정책의 편파성 의혹 제기

- 문정부의 플래그십 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 사업의 예산 집행 등 추진 과정상의 난맥상을 질타하고, 세계 최초 상용화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지난 정부의 5G 정책의 한계점을 비판
- 방통위 방송 재승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촉구하였으며, 대통령과 철학이 다른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쇄적 심의와 심의 결과의 개별성을 비판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

### □ 문재인 정부 5년, 탈원전 정책의 실패 및 알박기 인사 비판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실패로 한전 적자가 확대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됨을 비판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 및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지적
- 탈핵 인사인 김제남 이사장의 부적합성 지적하고 자진 사퇴를 권유

### □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 방지·신속 보상 및 빅테크의 공정경쟁 촉구

- 전국민을 불편하게 만든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라 기술적, 법·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고, 신속한 보상과 무료서비스에 이용자에 대한 보상 촉구
-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의 망 이용료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앱마켓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기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구

### □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비판하고 효율적 경영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 MBC의 허위 조작 및 편파적 보도 강력 비난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대통령 미 순방시 사적 발언에 대한 MBC의 허위 조작 보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 보도를 촉구

- 허위 자막 보도는 '언론윤리헌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기자연합회 강령' 및 스스로가 정한 'MBC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위반한 언론의 자유가 아닌 방종이며, 국익을 해하는 행위임을 지적
- 2008년 광우병 선동, 2021년 도쿄올림픽 방송사고 등에 이은 또 다른 보도 참사로 그 편파성은 MBC 최고의 흑역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질타

### □ MBC PD수첩의 재연 미고지 방송의 편파성 및 보도 조작 질타

- 재연 등을 미고지한 PD수첩의 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위반임을 지적하고, 대통령 발언 조작 보도에 대한 고발 등에 대한 MBC 보복 방송임을 질타
-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MBC의 조작 방송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규탄

### □ 포항MBC '월성원전 1호기 오염수 샌다' 방송의 허구성 지적 및 대처 요구

- 국정감사를 통해 월성원전에 대한 MBC 방송의 내용이 상당 부분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임을 지적하고, 국민 불안만 야기함을 비판
- 국민과 지역주민의 불안을 야기한 허위 보도에 대해 원안위와 한수원이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임을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MBC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 □ MBC의 원전 관련 허위 보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니터링 및 원전 관련 비밀 보호 등을 위한 장치 마련을 촉구

# 문재인 정부, 플래그십 정책 부실 비판 및 방송정책 공정성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 과정상의 관리 난맥상 질타

-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NIA가 집행한 1.7조원에 대한 의원실 중간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예산집행의 난맥상을 비판
  - 4천여 건 자문 중 불필요한 자문, 3줄짜리 보고서, 결과물 없는 자문, 캠코더 인사 자문 등 집행의 부실에 대한 대대적 조사의 필요성 지적
- 1조3천억원이 투입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매출은 투입 대비 0.28%(25건 36억원)로 매우 부진한 수준이며, 데이터바우처 사업도 인건비 횡령 의혹 등 관리가 부실했음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 □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앞세운 5G 정책의 한계점 비판

- 5G 활성화를 통해 '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일자리 130만개 창출을 제시하였으나, 측정도 어려운 수치를 목표로 정한 성과 부풀리기임을 비판
- 5G 서비스의 접속율이 도시와 지방간 격차가 크며, 지하철은 지난달 공사를 시작한 곳도 있는 등 커버리지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질타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 촉구

- 방통위는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효율적 정책 조율도 중요함을 지적, 대통령과 정치 철학이 다른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

### □ 방통위 방송 재승인 정책의 부당성 지적 및 제도적 개선 촉구

- 종편PP 재승인시 만점의 과반이 넘는 비계량 점수(570점/1000점) 과다는 방통위의 자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재허가·재승인 시 과다한 조건 부과가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강조
- 일부 종편PP의 경우 재승인 계획상 기준과 다르게 승인 기간을 단축한 것은 직권 남용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고발을 검토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적 심의 절차 질타

- 방통위 심의 결과가 외부에 보고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점검 절차도 없어 공정성에 의혹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
- 현재 심의 결과에 대한 처벌이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누적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방송사 등에 대한 가중제재 필요성을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디지털 댐 등 데이터 구축사업 실태조사 및 내실화 방안 모니터링

### □ 방심위 심의결과 보고 의무화의 법제화 추진

#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 실패 및 알박기 인사 비판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로 한전 적자 확대 및 국민 부담만 가중

- 실패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금년 한전 적자가 약 30조원이며 그 중 약 10조원이 에너지 수입 증가 비용임을 지적하며, 정책 실패로 인한 비용이 국민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음을 비판
-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전문가와 원전을 반대하는 비상임위원을 둔 원안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짜 원전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

### □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 붕괴 및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음을 지적
- 해외 강국들은 4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국내 건설은 없이 수출만 주장하다 국내 원전 생태계가 고사된 상황을 비판
  - 생태계 복원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에 민관 합동의 범정부적 투자가 필요함을 지적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이며 갈라파고스 정책이라 지적하고, 전정부 탈원전 정책이 실패임을 비판

### □ 탈핵 인사인 김제남 이사장의 직위 유지 부적합성 지적 및 사퇴 촉구

- 원자력 안전이 탈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탈핵 인사의 이사장 임명은 한우협회장에 채식주의자가 온 격이라며 부적합성을 비판
  - 신정부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고 원자력 이용도 부인하던 인사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합함을 지적, 자진 사퇴를 촉구

# 카카오 먹통사태 신속 보상·재발 방지 및 빅테크의 공정경쟁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카카오 장애에 따른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촉구

- 이용자 증가 및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비해 장애에 대비한 이중화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음을 비판
- 카카오 모든 서비스의 기반이 무료서비스인 카카오톡임을 지적하며, 무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
  -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이슈를 지적하며, 중소·자영업 분야 진출 자제 촉구

### □ 국내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 취약성을 지적

- SK C&C 데이터센터가 화재에 대한 재난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음을 집중 질타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오너들이 나서줄 것을 요구
- 향후 데이터센터가 급증할 것임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
  - 전국 데이터센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

### □ 국민적 재난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 과거와 달리,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재난 대비가 제도적으로 되어있지 않음을 지적
  -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
    * 현재 박성중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기제출

### □ 구글 등 해외 빅테크의 공정경쟁 촉구

-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트래픽이 1/3 수준이나, 국내CP와는 달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CP의 비용지불 의향을 질의
- 애플 신제품의 국내 가격이 미국에 비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하고, 적용 환율 등이 높음을 비판하여 적절한 조치를 촉구
- 해외 빅테크의 기술적 앱외부결제 방해를 비판, 공정 생태계 조성을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카카오의 피해보상방안 마련 현황 점검

□ 과기정통부 전국 데이터센터 전수조사 현황 점검

□ 서비스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출된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추진

##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공영방송(KBS, MBC)의 투자 및 비리 의혹을 지적

- 일부 지역 MBC가 태양광 사업에 수십억원 이상 투자한 의혹을 지적하며, 급히 정관을 변경한 것 등은 지난 정부에 코드를 맞추려 한 정황이라고 질타
- KBS 박성제 사장이 관련된 PPL광고 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경위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KBS 남북협력업무 담당 간부의 아태평화교류협회 대북코인 연루에 대하여 단독 인터뷰 대가로 KBS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의혹을 지적, 만약 KBS가 관련되었다면 심각한 문제이므로 향후 반드시 책임져야 함을 지적

□ 한국연구재단(NRF) 등 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부실 등 질타

- NRF의 '우주정책연구센터 유치기관 및 센터장' 공모시 항공우주연구원보다 부실한 신청서를 제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선정된 것에 의혹을 제기
  - 과기정통부에 선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구
-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문제라고 하나 자기소개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취업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기관의 채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 한국수력원자력(주)

- 현재 중단된 상태이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한수원의 투자 계획이 있었음. 공공기관의 투자 약속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을 질타하며, 투자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와 적절한 대응을 요청

□ 한국시청자미디어재단

- 방통위 소유의 팩트체크 사업결과물을 주관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민간재단법인으로 소유권의 무단 이전은 권한 남용임을 지적, 조사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우주정책연구센터 공모 과정에 대한 과기정통부 조사 점검

□ 산하 출연연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촉구 및 관련 법안의 발의 추진

□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외교통일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구조 노력 방기 및 은폐 시도

- 감사원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서해 공무원 생존 당시 북한이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통일부가 관련 사항을 인지한 시점을 이대준씨 피살 이후 시점으로 짜맞춰 은폐했다는 지적

### □ 문재인 정부 UN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 초래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외교부는 올해 UN기구 입후보 목표를 14개로 과다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다른 국가와 상호 지지를 위한 가용표를 일찍 소진하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외면 및 소극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 탓에 UN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하는 결과를 초래
  - 향후 외교부는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적극 참여하고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향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

###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해외 국감에서 교민보호 강화를 위한 영사기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많은 경험이 축적된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 사례를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

###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한국의 기여확대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감안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 「담대한 구상」 이해도 제고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재외공관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 먼저 재외공관의 인식 제고를 통해 주재국을 상대로 홍보력과 설득력을 향상시켜 다른 국가의 호응도를 높일 것을 촉구

### □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

- 해외 국감에서 재외 공관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분발해 줄 것을 당부

#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구조 노력 방기 및 은폐 시도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경과

- ’20.9.21.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및 수색 실시
- ’20.9.23. 국방부 실종사건 경과 및 당국 조치 언론 발표
- ’20.9.24. 국방부 발표(실종 공무원 사망) 및 NSC 상임위 성명 발표
- **’20.9.24. 통일부 성명 발표**
  -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 규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 ’20.9.25. 청와대 브리핑 (북측 통지문 관련)
- ’20.9.27.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 관계장관 회의

### □ 통일부 문제점 (감사원 감사결과)

- 통일부는 9월 22일 18시경 국정원으로부터 실종된 서해 공무원 발견 정황을 전달받은 후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이대준 씨가 해상 부유물을 잡고 표류 중이며 북한의 구조활동 정황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상황을 파악
  - 하지만,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억류·위해 등이 발생하면 통일부는 주관기관으로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송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 미이행
- 2020년 9월 24일 14시경 통일부 장관 주재 간부회의에서 ‘통일부가 이대준 씨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최초 전달받은 9월 22일 18시경이 아닌 이대준 씨 피살 이후이자 통일부 장관이 최초로 인지한 9월 23일 01시 ‘관계장관회의’로 하기로 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가능한 방안을 강구

# 문재인 정부 UN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 초래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개요

- 10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UN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는 아시아에서 8개 국가들이 입후보하여 경쟁
  - 선거 결과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이 2023~2025년 임기의 아시아 배정 이사국에 당선되었고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다섯 번째 순위를 기록하면서 연임에 실패
    ※ 아시아 국가 득표 현황
    ▲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
    ▲ 한국(123표) 아프가니스탄(12표) 바레인(1표) 몽골(1표)

### □ 낙선 원인

**① 문재인 정부의 과다한 UN기구 입후보 결정**

- 외교부는 매년 제2차관이 주재하고 관련 국장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서 다음해 국제기구 입후보 계획을 수립
  -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2021년 12월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서 올해 2022년에 14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 하기로 결정
  - 예년보다 많은 국제기구 입후보로 인해 다른 국가와 상호 교환지지 용도로 활용할 가용표가 소진되어 대외교섭력을 약화
    ※ 한국의 국제기구 입후보 연도별 현황
    ▲2018년(9개), 2019년(11개), 2020년(11개), 2021년(10개), 2022년(14개)

**② 북한 인권 외면 및 소극적 대응**

- 문재인 정부는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지연시키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여 UN인권사무소와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
  -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외면 및 소극적 태도가 악영향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외교부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적극 참여
- 통일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
- 2023년 6월 예정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 대비에 만전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기본 목표 및 방향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 보완적인 상생의 기틀 형성
  - 통합적·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외교정책 추진방향에 맞는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네트워크 강화
- 재외국민을 위한 편익 증진과 함께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실현
  -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 재외국민 보호 예방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

### □ 실천 방안

- 재외동포사회와 소통 강화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행사 개최
- 차세대 동포, 해외입양 동포 등 권익 신장 및 모국과의 유대 강화
-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개선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발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전원 공동발의)
  - 2022. 10. 7 국회 제출되어 행안위 계류

### □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

-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
  -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1. 9. 24 국회 제출되어 외통위 계류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기본 목표 및 방향

- 국제사회에서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와 함께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등 분야별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형성과 강화를 주도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
  -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등

### □ 추진 현황

- 제2차 글로벌 코로나 정상회의 연설 (5.12)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 연임 (6.10)
- NATO 정상회의 참석 (6.29~30)
- 제21차, 제22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 (7.7, 9.22)
-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 장관회의 참석 (7.19)
-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 연임 (8.4)
- 제77차 유엔총회 대통령 참석 (9.19~22)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연임 (10.3)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연임 (10.4)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

-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제기금인 '글로벌펀드' 재원 마련 위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3년에 걸쳐 총 1억불 기여 공약
  - 2023년(5천만불), 2024년(2천5백만불), 2025년(2천5백만불)
  - 5천만불 반영된 2023년 외교부 예산안 처리
- 2023년 외교부 '글로벌보건기여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안
  - 글로벌펀드 5천만불, 감염병혁신연합(CEPI) 2400만불, 글로벌소아마비퇴치이니셔티브(GPEI) 350만불

# 「담대한 구상」 이해도 제고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이해 결여

- 북한이 김여정 담화(8.19)를 통해 「담대한 구상」이 과거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 왜곡하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며 우리 재외공관에서도 인식이 부족
  - 비핵·개방·3000은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담대한 구상은 경제지원뿐 아니라 정치·군사 분야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구상
  - 비핵·개방·3000이 비핵화 합의 이후 남북 양측이 동시에 이행하는 계획이라면, 담대한 구상은 협상 개시 단계부터 북한의 민생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계획

### □ 「담대한 구상」 기본방향

- **(추진목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의 통일기반 구축
- **(추진주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며,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남·북·미 3자 중심의 협상 추진
- **(추진방식)**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 등 비핵화 전과정을 포괄적으로 먼저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

### □ 주요내용

- 초기 협상 과정에서 경제지원 조치 적극 강구
- 비핵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 도출
-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조치 단계적 이행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담대한 구상」 구체화 및 인식 제고 노력

- 통일부에 전문가·관계기관 회의체 '전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담대한 구상」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자료 발간 (외국어 자료 포함)

#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

## ▌주요 내용 및 성과

### □ 활동방향

-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2023년 11월 투표시까지 범국가적 역량 결집하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 활동 전개
  - 전 세계 지역별 특수성 고려한 대외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개최지 투표 연도인 2023년까지 유치활동을 점진적으로 강화
  - 국제박람회기구(BIE :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상 회담, 장·차관 회담 등 고위급 대상 외교 활동 계기 시 유치 교섭을 적극적으로 전개
  - 고위급 유치사절단 구성하여 BIE 회원국에 특사단 파견
  - 재외공관을 통해 170개 회원국 본국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
  - 프랑스 파리(BIE 사무국 소재지) 주재 각 국 대표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 전개

### □ 추진현황

- **(정상외교)** NATO 정상회의 계기 BIE 회원국과 양자회담(네덜란드, 스페인 등), 한-가봉 정상회담 등
- **(총리외교)** 제170차 BIE 총회 참석,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 유럽·아프리카·아주 주한대사 간담회 등
- **(장관외교)** 아세안·G20 외교장관회의,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양자통화(헝가리·요르단 등), 주한대사 접견 등
- **(특사외교)** 대통령 특사, 외교장관 특사 파견 계기 시 유치 활동 전개

### □ 향후일정

- 제171차 BIE총회 및 3차 PT ('22.11월)
- BIE 현지실사 ('23.상반기)
- 제172차 BIE총회 및 4차 PT ('23.6월)
- 제173차 BIE총회 및 최종투표 ('23.11월~12월)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회의원 외교 활동과 연계하여 초당적 지원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 문재인 정부는 안보실정으로 점철된 안보파탄정권이었습니다

##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 안보실정을 자행한 안보파탄정권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북 핵·미사일 대응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문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역대급 안보실정을 저질렀음을 확인했습니다
  - 국군의 정신적 기둥을 뿌리째 훼손시켰습니다

### □ 9·19 군사합의는 우리 안보태세의 근간을 허문 이적성 합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북한은 이번 국감기간 동안 총 9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였습니다

### □ 야당의 “안보공백” “친일국방” 정치공세는 극단적인 내로남불이자 악성 포퓰리즘입니다

- 현무2 낙탄사고에 대한 안보공세는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 한미일의 동해 대잠훈련에 대한 친일몰이는 국제정세에 대한 극단적인 무지에 기초한 악성 포퓰리즘입니다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천인공노할 몰양심적 행태인 월북몰이를 지속하였습니다

**文정권 = 안보파탄정권**

#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 안보실정을 자행한 안보파탄정권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북 핵·미사일 대응에 큰 구멍이 뚫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 구축 예산 부족
- 킬체인의 핵심 타격전력인 F35의 수리부속 부족 및 기관포 실탄 미확보
  - 북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TEL 등) 실시간 타격 및 24시간 지속 임무가 제한

### □ 문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역대급 안보실정을 저질렀음을 확인했습니다

- 국군의 정신적 기둥을 뿌리째 훼손시켰습니다
  - 육사의 「6·25 전쟁사」, 「북한의 이해」 등 군인의 국가관·대북관 전략적 사고에 직결되는 교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교과 개편 및 인생의 마지막을 공산주의자로 산 홍범도 흉상과 홍보공간을 설치
- 문정부 육군은 노후경비정 장기방치, 해군은 214급 잠수함 부품결함 장기방치, 공군은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 부족방치 등 안보공백이 일상화
  - 과도한 ROC 및 경직된 시험평가로 주요무기체계 전력화 차질
  - 기무사 해편 시 과도한 조직 축소로 방산 보안사고 급증
  - 방사청, 자문위원 부실운용 및 정치편향 인물 선임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위원장: 한기호 의원) 구성 및 운영
  - 「북 핵공격 가시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세미나 개최
  - 국가적 차원의 「북핵종합대비백서」 발간 추진
- F-X 2차 사업 및 철매-Ⅱ 성능개량(천궁Ⅱ) 2차 사업, 23년도 예산 확보

### □ 육사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국방부 자체감사 요구와 당정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육사 자체감사 결과 반영한 육사 교과 정상화 추진
- 장병 정신전력 강화방안 세미나 추진

9.19군사합의 = 이적성 합의

# 9·19 군사합의는 우리 안보태세의 근간을 허문 이적성 합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및 성과

### □ 9·19 군사합의는 우리 안보태세의 근간을 허문 이적성 합의로 파기를 통한 안보태세 재건이 긴급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북 우위의 휴전선 일대 감시정찰 자산 무용지물로 수도권 장사정포 대비에 결정적 차질 초래
- 서북도서에 해괴한 '평화수역' 설정으로 NLL 사실상 무력화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북한이 NLL 인정했다" 발언은 전국민 상대 기만 확인
    ※ 북한, 2017년 이후 NLL해역에서 연평균 5,000회 내외 부당통신 실시
- 남북간 최전방 GP운영과 구조의 특성 무시한 산술적 同數 철거로 비무장지대 내 주도권 상실
- 한강 및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으로 유사시 수도권 무방비

### □ 북한은 이번 국감기간 동안 총 9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였습니다

-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내에 방사포·해안포로 사격을 실시
  ※ 9·19 군사합의 당시 한미연합사는 검토 및 의결을 한 바가 없음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북한의 공식파기선언(2020.6.17.) 및 위반 일상화로 사실상 사문화된 9·19군사합의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관련 세미나·당정협의 통해 정부 결단 시 여건 뒷받침 및 우리 안보태세 재건의 전기로 삼을 것



야당의 정치공세 = 최악의 내로남불·포퓰리즘

# 야당의 "안보공백" "친일국방" 정치공세는 극단적 내로남불이자 최악의 포퓰리즘입니다.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야당의 "안보공백" "친일국방" 공세는 국제관계 무지에서 비롯된 최악의 내로남불이자 포퓰리즘입니다

- 현무2 낙탄사고에 대한 "안보공백", "강릉지역 주민 불안" 공세는 내로남불의 극치
  - 이번에 낙탄된 현무2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제조된 것이며, 강릉지역 낙탄은 9·19 군사합의마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마차진 사격장을 폐쇄한 것에서 기인
- 한미일의 동해 대잠훈련에 대한 "극단적인 친일행위" "친일국방" 공세
  - 문정부때도 했으며, 동 훈련을 강화키로 합의한 것도 문재인 정부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천인공노할 몰양심적 행태인 월북몰이를 여전히 지속 및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월북'에 동의했다" 왜곡
  - 당시 공개 속기록과 국방위 의결 대북규탄결의안의 "원인불명" 등 사실에 기초해 야당의 주장이 왜곡임을 입증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야당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 악성 이슈화를 차단하겠습니다

- 야당의 안보 정쟁화, 안보공세에 적극 대응
  - 필요 시 소속 국방위원 공동기자회견 및 당정협의 추진

국민의힘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행정안전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행안 위원장 및 간사를 중심으로 모든 여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및 인사의 개선을 촉구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 ▌주요 내용

#### □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

- 국민 혈세로 정치편향적인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
- 부실한 지방하천 정책으로 지난 여름 호우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발생
  - 포스코 경영진이 태풍내습 상황에서의 방재 대응 미흡사례도 지적
- 엄중한 안보상황에도 민방위교육 시 안보교육 제외, 안보경찰 인력 및 조직 축소
-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중국제품 조립업체에 불과한 '에디슨 모터스' 에 재정 지원

#### □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수사 및 지난정부 알박기 인사 개선 촉구

- 성남FC 뇌물사건,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사건, 광주 서구청장 성폭행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등 수사 촉구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등 정치편향적인 지난 정부 알박기 인사 개선 요구

#### □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정능력 강화, 진화위의 조사편향성 개선 촉구

- 지난 대선 시 관리부실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감사원 감사 촉구
- 제멋대로인 선거법 해석 시정 및 소규모 여론조사업체 난립 방지대책
- 진화위 보상이 민주화운동에 편중, 6.25 인민군 등에 의한 피해자 보상 노력 미흡

#### □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 지방자치경찰제도 개선(조직형태, 인사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 촉구
- 모바일운전 면허증 보안 강화, 보이스피싱, 마약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책, 수사인력 부족 및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4년) 단축, 전기차 및 데이터센터 화재대책 강구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 정치편향적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치편향성을 지적하고 관리 개선을 촉구

- 행안부 및 지자체 국감에서 정치편향성을 가진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
  -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저소득층 경제자립 목적의 비영리 법인인 '희망살림'이 네이버를 이용하여 성남FC에 39억원을 광고비로 지급한 사실을 지적
  - 비영리 민간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정치적 활동 개선 요구 등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비영리법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 시행

- 전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행안부)
- '희망살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고발조치할 예정(서울시)
-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시 봉사활동 불인정 방침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엄중 조치 예정(교육부, 서울교육청)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 지방하천 관리 부실로 침수피해 증가 및 재난지원금 지원 확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태풍 '힌남노' 내습시 지방하천 관리 부실문제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실질적 일상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금이 부족

- 지난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 일원화 정책, 지방으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하천 시설 투자 감소 등이 이번 피해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
- 태풍 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스코의 경우 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사전대비기간에 골프를 치는 등 경영진의 미흡한 재난대응을 질타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지방하천 관리대책 점검 및 개선, 재난피해자 실질적 지원대책 강구

- 지방하천 관련 정책(물관리 일원화, 투자 감소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대책 마련(환경부, 행안부)
-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및 지원대상 확대, 관련 법령 개정(행안부)
  -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 및 대상 확대(기 조치) : 전·반파, 침수 상향, 소상공인 신설
  - 인명피해 지원금 상향(추후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대통령령) 개정

지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인사난맥

# 현 정부 주요 자리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개선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촉구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주민) 드루킹사건 편파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 역임
-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강희용) 정치편향성과 근태문제를 가진 前 정부 알박기 인사
-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친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문민통제가 아닌 수사통제를 하고 있음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문제 인사에 대한 각 기관별 조치사항 모니터링 및 법령 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알박기 인사 근절방안 마련

비리혐의 야당인사 수사 촉구

# 지난 정부의 비리혐의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 성남FC 뇌물사건,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사건, 김혜경 씨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 경찰에 최근 출소된 '유동규'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요구하여 시행중
- 광주 서구청장 성폭행 사건을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사건'으로 명명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 문 대통령 사위와 민주당 실세들이 관여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사건 철거 수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각종 비리혐의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관심표명으로 여론 환기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및 자정능력 강화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지난 대선 시 부실한 선거관리를 한 선관위에 대하여 뼈를 깎는 쇄신 요구

- 대선 과정의 관리부실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위하여 내부 인사로 구성된 자체 감사 대신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정성 확보 촉구
- 선거법 및 선거 문구 해석 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해석으로 공정성 상실 지적
- 소규모 여론조사업체(예, '리서치 뷰')의 난립과 왜곡된 조사와 공표로 선거결과 및 사회혼란 부채질, 법을 통한 규제 필요성 강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관위 조치결과 모니터링 및 법령 개정

- 대선 관리부실에 대한 조치 등 공정성확보방안 마련 및 실행(선관위)
- '공직선거법' 개정 : 여론조사업체 난립 방지 방안 마련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9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국정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관심과 개선 요구

-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는 현행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의 개선 요구
- 최근 지방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강원 레고랜드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재정 건전성 이슈가 제기되는 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교부세 차등지원 등)
-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등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며, 전북·충북 등 많은 시도에서 요구 중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분권위와 균형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추진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추진 정책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령 제정

- 이원화모델 시범 시행('24년, 제주·세종·강원), 제도 개선 방안 마련(행안부, 경찰청)
-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마련(행안부)
-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 관련 지자체 동향 모니터링 및 검토(행안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행안부, 국회 제출 11월)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불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실정과 무능 질타

- 해외 방문을 위해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한 문제를 지적하고 조사를 요구
- 남북 평화쇼를 위해 이루어진 무책임, 불공정한 사례 지적
-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선심성 예산 비판
-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낭비 및 문화재 훼손 지적

### □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미흡한 운영 실태 지적 및 개선안 제시

- 예술인 경력 정보시스템 등 예술인 지원시책의 부실한 관리 상황 지적
- 문체부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대한 평가 관행 개선 지시
- 언론지원사업의 편파적 운영 사례 지적 및 개선 요구
- 장애인 예술 창작 및 향유를 위한 불합리한 사례 및 대안 제시

### □ 콘텐츠산업의 불합리한 행태 지적 및 미래 지향적 대안 제시

- 콘텐츠진흥원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진행 부실 지적
- 해외 저작권 보호 현실의 문제점 지적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 OTT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산업 실태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메타버스 등 새로운 매체 환경에 부응한 정책 변화 요구

### □ 국내스포츠의 불합리한 관행 질타 및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제시

- 스포츠혁신의 비현실 권고안에 대한 비판 및 개선 방안 제시
- 선수 지원을 위한 열악한 현실 지적 및 지원 방안 제시
- 스포츠인권센터의 운영 부실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대안 강구
- 체육계의 불합리하고 비리 관행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

**불합리/불공정 실태**

#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실정 비판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의 비합리적 예산 편성 등 상식을 벗어난 실태 지적 및 조사 지시

- 2018년 11월 이루어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의 적절성 비판하고, 예비비의 긴급 편성 경위, 타지마할 관련 사항 출장보고서 누락 등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요구

### □ 남북 평화쇼를 위해 이루어진 무책임, 불공정한 사업 진행 지적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를 활용 사례 강력 비판
-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면서도 UN 대북 제재 위반을 포함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제안서의 내용 등 실태 지적

### □ 코로나 기간 졸속 기획되어 방만하게 예산 편성 강력된 부실 사업의 적시비판

-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급조하여 부실하게 집행된 공공예술사업의 비판
- 미성년자 대상 숙박쿠폰 지급 등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국민여행사업의 부실한 사업 운영 질타 후 재발 방지 조치 요구

### □ 태양광 난개발 등으로 인해 세금 낭비 및 문화재 지역 훼손 지적

-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설치된 태양광 시설의 유지비가 생산비를 초과하는 등 낭비 발생 지적 및 개선 요구
- 문화재 지역에 태양광 난개발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사례를 적시하고 개선방안 마련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영부인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에 대한 문체부 감사 실시 요구

불합리/불공정 실태

#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부실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예술인 지원체계의 부실 및 관리 상황 지적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불편 등 예술인 복지지원체계의 부실한 운영 지적 사례를 하고 개선을 요구
- 국립이라는 명칭에도 민간보다 못한 국립단체의 열악한 실상에 대해 질타하고 국립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및 인력체계를 갖춰 나갈 것을 주문

### □ 불합리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운영 질타하고 개선 촉구

- 문체부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대한 평가 관행을 질타하고 평가제도에 대한 대폭적 개선 요구
- 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독단적 운영 및 방송중계권자 비합리적 선정 의혹 등 비상식적 관행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요구
-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해외 파견직원의 수당의 과도한 집행을 지적하고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

### □ 지원사업의 편파지원 사례 지적 및 개선 요구

- 지원사업을 문재인 정부 인사에게 편파적으로 운영한 뉴스통신진흥회와 MBC에 편중 지원한 언론진흥재단를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

### □ 미비한 장애인 예술 창작 및 향유를 위한 조치 및 사례를 분야별로 낱낱이 제시하고 대안 제시

- 불편한 장애인 문화시설, 미흡한 장애인 친화(Barrier Free) 프로그램 실태를 적시하고 개선대책과 장애인문화예술원 법정법인화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엄밀한 실효성과 성과 분석에 기반한 예산 편성 추진

### □ 집행 점검 실시



불합리/불공정 실태

#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진흥 사업 진행 부실 지적 및 개선 요구

- 콘텐츠진흥원의 주먹구구식 인사자료 관리 등 부실한 운영을 질타하고,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부실한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 지시

### □ OTT 시대에 대응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점검 및 정책 대안 제시

- 넷플릭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공정 보상 등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
- OTT 콘텐츠 자율규제에 따른 후속 입법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촉구
- 영상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촉구

### □ 해외 저작권 보호 현실의 문제점 지적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

- 저작자, 제작자가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 받는 저작권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작권법 보호 체계의 개편을 요구
- 중국 내에서의 웹툰 사이트 차단 미흡 등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으로 부실한 실태 등 질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요구

### □ 메타버스 등 새로운 매체 환경에 부응한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 P2E 게임, 메타버스용 게임 등 신종 산업의 발전에 부응한 융통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 및 심도있는 대응 정책 마련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콘텐츠 및 저작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추진

### □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 확대

무능력/불공정 실태

## 체육 정상화를 위한 부실 실태 지적 및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및 성과

□ 스포츠혁신위의 비현실 권고안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 학교 스포츠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스포츠혁신위의 운영 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 권고안으로 학생선수들의 진학 이탈 등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 선수, 코치,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바로잡을 것을 강력 요구

□ 선수, 코치들의 열악한 현실 지적 및 선수 지원을 방안 제시

- 국가대표 선수, 코치의 처우 개선 및 은퇴 선수의 전생애에 걸친 맞춤형 지원시책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
- 스포츠정책과학원의 정보독점 및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른 기관으로 확대, 조직 정비 등 선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

□ 스포츠인권센터의 운영 부실 지적 실효적 운영을 위한 대안 강구

- 신고 대비 지나치게 낮은 처리와 처리에 대한 실제 집행의 미흡 등 선수인권을 위해 신설한 스포츠인권센터의 부실한 운영 실태을 적시하고
- 질높은 상담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책 강구 요구

□ 체육계의 불합리한 비리 관행의 개선 요구

- 중학생 조정대회의 승부조작 사례를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 요구
- 성남FC가 비장애인 체육팀인데,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선수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시 점검

□ 선수 인권을 위한 실효성 있는 스포츠인권센터의 인력, 예산 체계 구비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간 문정부에서 추진한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국 농산어촌의 황폐화 실상 및 태양광 관련 각종 비리 및 의혹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불명확한 정황증거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월북몰이 ▸문정부 시절 누적된 정책실패로 나타난 쌀값 폭락 책임 및 공공기관 방만운영 및 알박기 행태, 각종 사업 비리 및 특혜 의혹 등 누적된 5년간 실정 폐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대책 마련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

□ 먼저, 전국에서 발생된 무분별한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관련, 비리온상이 되어 버린 농촌태양광 문제, 산지태양광 허가 남발로 산림훼손 문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 설치 허가, 어민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해상풍력 등 그 피해가 농어민들의 생계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상을 밝혀 농어민들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문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 지적

□ 지난 문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이 부실한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월북몰이였음을 밝혀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에 대한 구조·보호의 의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며, 당시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이루어진 월북조작이었음을 한 목소리로 질타

□ 지난 문정부 시절 쌀 과다 방출, 시장격리 규모 미흡 및 격리 타이밍 실기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쌀값 정책 실패가 누적되어 올해 쌀값 폭락사태가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현 정부에게 모두 돌리며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국정감사 중 3연속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 행태 강하게 질타

□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방만운영 질타 및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현 한국마사회 회장이 과거 적폐청산위원장 및 상임감사 재직 시절 제대로 된 성과없이 오히려 경영평가가 하락했음에도, 문정부 3개월 남기고 회장으로 임명된 것은 대표적 알박기 사례로 사퇴 촉구. 또한, 임원 4인 황제승마 혜택, 5억원 골프회원권 보유, 마사회와 전혀 관계없는 YTN 주식 보유 등 방만운영 질타
- 농협중앙회의 무리한 농촌태양광 대출 증가로 인한 부실 우려 및 성남FC 후원금 우회 지원 의혹, 농진청의 쿨링하우스 사업 실적 저조 및 원천기술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 문정부 5년간 실정 지적 이외에도 국감 중 갑자기 발생한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농식품부 산하기관 피해상황 점검 및 유사상황 발생시 대응책 마련 촉구, 시대변화 흐름에 맞춘 공공기관들의 정책추진 필요성 지적 및 대안 제시, 소나무재선충 등 각종 병해충 철저 대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농어민 보호 대책 수립 위한 선제적 노력 주문 등 여당으로서 정책국감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 병행

- 특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에 대비 수산물 안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도 촉구

탈원전 참사

##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농산어촌 황폐화

### ▌주요 내용 및 성과

□ **태양광·해상풍력 등 문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국 농산어촌 훼손 사례를 다수 지적하고, 농어민들의 생존터전까지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강력 촉구**

- 문정부 5년간 ▸경사도 기준 완화 조치 등 산지태양광 허가 남발로 안전기준 무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풍력발전시설 허가로 약 1,700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는 등 산림훼손 피해 발생 ▸농업보전부담금의 50% 감면 정책으로 여의도 35배 면적의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전용 ▸태양광 설치로 여의도 2.7배 규모의 염전 폐업 또는 폐쇄 등 대한민국 전 국토에서 발생된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인한 피해 지적
- 해상풍력 또한 철저한 제도설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민간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입지선점에 나서면서 현재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해상풍력사업지 94%, 해상교통망 내 풍황계측기 설치 비율이 68%에 달해 향후 어민생계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 지적
  - 여의도의 827배 이상 면적에 해상풍력이 들어설 상황에서 어민 피해방지 위해 출범한 수협 해상풍력 대응지원단 활동 미비도 함께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산지태양광 허가 안전 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농촌 불법태양광 등 관련 시설 전수조사 필요**

□ **해상풍력 관련 어민수용성 최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

위기관리 무능

##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조작 책임 질타

### ▌주요 내용 및 성과

□ **서해공무원 북한 피격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중간수사 발표가 정황증거만으로 성급하게 월북으로 결론내린 것임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지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월북조작이었음을 한목소리로 질타**

-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월북판단의 근거인 구명조끼 착용, 슬리퍼, 월북의사 표명 등을 조작·은폐하고, 도박빚과 부정적 사생활 정보 등을 공개한 전 정권의 자진 월북 수사 결과 발표의 문제점 지적
  - 새롭게 드러난 '한자'가 쓰여있는 구명조끼에 대해 前 해경청장이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언급, 표류예측 분석결과 왜곡,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에 의한 월북 관련 범죄심리 전문가 자문 과장, 고인의 유언으로 보이는 컴퓨터 문서작업 존재 등을 통해 과거 의도된 월북몰이 수사 결과를 이번에 바로잡은 것임을 강조
-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소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에 대한 구조·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당시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이루어진 월북조작이었음을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故 이대준씨 명예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 병행**

민생·경제 참사

## 농업·농민의 미래 망치는 양곡관리법 문제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올해 쌀값 폭락 원인은 지난 문정부 시절 쌀 21만톤 과다 방출, 시장격리 규모 미흡 및 격리 타이밍 실기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쌀값 정책 실패가 누적되어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현 정부에게 모두 돌리며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 질타**

-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확기에 과감하게 쌀 45만톤 격리 등 확실한 쌀 가격안정 대책 추진으로 폭락하던 쌀값이 안정되고 있음을 강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자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의 문제점 지적**

- 쌀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 의무화시 쌀 과잉 생산구조 고착화 및 국가 재정부담 상승, 쌀 시장기능 저해, 미래 농업투자 재원 잠식, 타작물과의 형평성 및 갈등 야기 등 예상되는 문제점 지적

□ **쌀생산량 예측조사 오차율 과다, 개선대책 요구**

- 농진청 쌀 작황조사 정확도 낮은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향후 법사위 논의 대비 무의미한 재정부담 등 양곡관리법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 **쌀 생산량 예측오차율 축소 대책 마련**

- 생육조사 실측결과 통합, 품종 현행화, 기상요소 반영 고도화 등

인사참사

## 한국마사회의 총체적 방만운영 및 정권말 알박기 문제 질타

### ▌주요 내용 및 성과

□ **정권편향적, 비전문가인 한국마사회장 사퇴 촉구**

- 琪 회장이 마사회 적폐청산위원장 시절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점, 상임감사시 경영평가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부 3개월 남기고 마사회장으로 임명된 것은 대표적인 알박기 사례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회장 사퇴 촉구

□ **YTN 주식 보유, 호화사무실, 골프회원권 등 마사회의 방만경영 질타**

-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극심한 경영 위기에도 불구, 마사회 기능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YTN 주식 매각 노력 부족 질타
- 회장 등 임원 4명만 황제승마 혜택, 65평 호화 회장사무실, 141개 콘도회원권 및 5억원 골프회원권 보유 등 방만경영 질타

□ **마사회 감사실 직원의 셀프감사 의혹 제기**

- 琪 회장이 상임감사로 재직시 감사실 직원(회장 측근)이 40억원 공사를 마사회 출신 업체에 몰아준 의혹에 대해 본인이 감사실에서 셀프 조사한 의혹 제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한국마사회가 보유중인 YTN 주식 및 고가의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매각 방안 및 추진 사항 지속 점검 필요**

□ **마사회장 측근인 감사실 직원의 셀프감사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촉구**

권력형 비리 의혹

## 태양광 부실 대출, 성남FC 우회지원, 쿨링하우스 의혹 등 공공기관 비리 의혹 및 부실 운영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농협중앙회, 부실운영 우려 및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촉구**

- 문정부 5년간 농촌태양광 대출이 25배나 증가, 부실 우려에 따른 대응방안 시급히 마련 촉구. 반면, 대출상품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부분도 함께 지적하며 태양광 관련 금융상품 판매 자제 촉구
-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통상적 지원이라던 농협중앙회 측 설명과 달리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전후로 지원금 규모가 2배 이상 차이나는 비정상적인 부분 지적하며 자체 진상조사 촉구
-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부실자산 정리 진행상황 및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CEO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올해 연임된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

□ **농촌진흥청, 문정부가 수출효자로 홍보한 쿨링하우스 특혜 의혹 제기**

- 문대통령이 직접 홍보한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가 내용과 달리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했으며, 원천기술자에 대한 과다한 특혜 의혹이 있음도 지적. 의혹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농협의 농촌태양광 대출 실태 파악 및 부실화 방지대책 마련 필요**

□ **횡령 등 금융사고 재발방지시스템 마련**

□ **쿨링하우스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 5년 에너지정책의 총체적 실패 실상을 제시하고, 원전 확대 및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등 합리적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 요구**

-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 일가의 1조2천억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양도 등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비리 의혹, 태양광 졸속 확대 등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관련 문제점 집중 제기와 대책 마련 촉구
  - 매각 관련 7,000배 수익, 해상풍력 사업권 인수 중국인의 해남 해상풍력 사업지분 95% 소유 등 에너지 이권 게이트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요구
-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 이용률 저조, 중국산 셀 장악, 산지 태양광의 산사태발생 등 묻지마 식 태양광 보급 등 허구적 재생에너지 정책 실태 전반 점검
- 에너지공기업의 방만 경영, 가스공사의 '22년 2월 LNG 수입량 급감의 대선개입 의혹, 재생에너지확인제도 문제 등 탈원전 불법 위법 사례, 원칙없는 자원외교 실패 실태 등 제기와 제도개선 주문

**□ 한전의 막대한 적자,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문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요금 인상 지연, LNG 수입 확대 등과 인과관계 규명, 탈원전 강행 절차 문제, 국가재정 손실과 국민부담 가중 문제 지적, 관련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 강력 요구**

-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에도 정부의 요금인상 지연, 탈원전시 요금 인상 관련 문 정권의 묵살 등 절차상 문제, 적자 및 요금 급등 원인 제시
  -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없다' 위증 답변, 절차상 위법 불법 등 질타

**□ 문재인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실패, 기관 운영문제, 낙하산 인사, 특혜와 권력 유착 의혹, 특허관리 문제 제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마련 강조**

- 정부 예산 투입되는 제로페이의 실효성 문제와 특정 업체에 이익 착복 전락 실태, 에디슨모터스 특혜 관련 권력 유착 의혹 등 제기와 질타
- 중진공의 특정업체 특례지원, 공영홈쇼핑의 공익성과 수익성 미흡, 낙하산 알박기 인사,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문제,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등 지적
- 정책자금 브로커 방지대책, 거대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실태조사 필요, 소상공인 임대보증금 제도개선, 유연근로제도 점검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 극복 대책 수립 강조

**□ 야당의 집요한 IRA 공세, 한전적자 원인과 에너지정책 실패, 중소벤처기업 예산 조정 등 정치공세성 국감에 대해 실체적 접근과 효과적 대응으로 정책국감 주도**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실패

# 새만금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졸속 확대로 인한 부실·부패 질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비리 의혹 규명 및 고발

-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을 전기위원회 인가없이 중국계 기업에 매각 7,000배 수익 등 관련 의혹 실체를 밝히고, 감사 및 수사 촉구
  - 공기업 대상으로 각각 45억원, 15억원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리스크심의위 권고 무시, 관리감독 부실, 대국민 사기극 '바다의 대장동게이트'로 규정
  - 산업부의 연구용역 종료 전 REC 가중치 개정 등 특혜 의혹, 수사 촉구
- 1조2천억 사업권 인수 중국인이 해남 해상풍력 사업('궁항해상풍력발전') 지분도 95% 소유,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이 궁항해상풍력발전 이사란 사실도 확인

### □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모순과 허구성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집중 제기

- 에너지공기업 연구용역 비리 의혹, 가스공사의 무역흑자 유도를 위한 '22년 2월 LNG 수입량 급감의 대선개입 의혹,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불가한 현실에도 재생에너지확인제도 운영, NDC 목표 문제, RE100 허구성 등 제기
- 탈원전으로 졸속 확대된 재생에너지 관련 담합, 법 위반, 해외 부실 투자, 적폐로 규정된 해외 광산 헐값 매각과 손실 발생 문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의 권력 비호 등 불법 위법적 진행 사안 전반에 대한 부각

### □ 태양광 이용률 저조, 중국산 셀 장악 등 문 정부의 묻지마 식 태양광 보급 질타

-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의 70% 이상이 태양광 평균이용률(15%)에 미달하는데 원인으로 경제성 없는 곳에 설치, 유지보수 부실 등 지적
- 태양광 셀 모듈 대부분 중국산, 산지 태양광 산사태 발생 등 문제 지적
- 국조실 조사결과로 드러난 태양광사업 담당한 에너지공단 임원 문책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감사원 등 감사 및 검경 수사로 사건 실체 규명하고 개선대책 수립

- 새만금해상풍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수사 의뢰
- 관련자 등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감사 의뢰
- 태양광, 산지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정책 전면 재검토 및 재수립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실패

# 한전 적자 원인 규명, 국가재정 손실과 전기요금 부담 가중 실태 확인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이 막대한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초래

- 탈원전으로 비싼 연료인 LNG로 대체 발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허가 지연, 재생에너지 무분별한 확대 등으로 전력도매가격 급등하여 막대한 한전 적자 발생한 사실과 요금 급등 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힘
  - 신한울 1, 2호기 정상가동의 최대 전력생산량 36Twh, LNG 대체비용 11조원 이상 소요 등 정책 오판 실태, SMP 급등 관련 원인 전반과 결과 등 강조
-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에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보고에도 탈원전 강행, '21년과 '22년초 에너지가격 급등시기에 수차례의 한전의 요금 요청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지연시킨 점도 한전 적자의 원인인 점 규명
  -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전 산업부 장관의 위증 답변 지적
- 한수원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탈원전 위법성 인식하고도 임의수정 또는 삭제 등을 통해 강행
- '97년 외환위기 이후 첫 6개월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은 탈원전으로 에너지부족분을 가스 수입과 석탄 수입으로 보충하게 된 점을 확인

### □ 맹목적인 탈원전은 국민부담과 원전기업 도산 등 에너지대계 붕괴 유발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미가동 등 탈원전이 원전업계 및 학계에 시그널로 작용하여 원전기업 폐업, 원자력 전공자 이탈 등 원전생태계가 붕괴되고 해외원전 수출에 지장

### □ 산업부 차원 각성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감사 및 조사를 통한 문제점 규명 및 새정부 에너지정책 지속 점검

- 한전적자, 연료비 상승 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반려한 산업부 전 장관 등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수사 의뢰, 고발 추진
- 탈원전 위법성 법률자문 확인하고도 강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 비중 상향,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새로운 에너지 믹스 마련 등 반영
-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수출 대책 수립, RE100의 CF100으로 전환 등 제도 개선

공공기관 경영혁신

# 공공기관의 방만·부실 경영 및 인사 문제 지적하고 근절대책 강력 요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한전, 한전KDN,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공기업의 경영 문제과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엄중한 대책 마련 요구

- 한전이 전기요금 징수시 병행 징수하는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한 국민부담 완화 및 국민 선택권 보장 요구
- 한전KDN 지분의 YTN은 非고유핵심업무이며 수익 등에 불리, DJ 시절 비자발적인 YTN 인수 상황 강조, 공정 투명 신속한 YTN 매각으로 독립 언론 및 경쟁력 강화 기회 부여 촉구
- 한전의 한전 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 의결시 이사회 개최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심각한 적자 상황에서 수천억원 대 출연의 문제점 지적
- 가스공사가 대선 前인 '22년2월 LNG 수입 급감시켜 무역흑자 만들고 대선에 유리한 정국 조성 의혹 제기
- 7천억원 투자된 한전 지능형 원격검침 계량기(AMI) 입찰에 1개 업체 단독입찰 선정, 실집행률 부진 의혹 제기
- 태양광 비리 조사 관련 에너지공단의 부실 관리 지적, 당시 책임자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이상훈(현 이사장)의 책임 추궁 및 퇴임 강력 요구
  - 공단 시행 중인 협력사업에 탈원전 주도 시민단체 집중 및 예산 지원

### □ 공공기관장 등의 부적절한 근무태도 및 낙하산 알박기 인사 강력 질타

-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에기평) 전임 원장의 코로나 재택근무 중 외부강연, 에기평의 에디슨모터스 기술개발 지원 의혹, 전략물자관리원의 방만경영 백태 관련 지적,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처제 지역난방공사 사외이사 선임 질타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감사원 감사 및 경찰 수사로 문제점 규명, 내부점검시스템 마련 요구

- 한전공대 설립과정, AMI 입찰과정, 에디슨모터스 기술개발 지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수사 의뢰
-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연 기준 수립 및 감사 의뢰, 문제 인사 감사 추진
- YTN 조속 매각 등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및 내부점검 시스템 마련 요구

문재인 정부 소상공인정책 실패

# 목표를 상실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 반복되는 특혜 논란 확인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전시성 사업 중심으로 세금 투입하는 실효성 낮고 부실한 소상공인 정책

- 소상공인 대금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제기능 못하고 특정 업체가 이익 착복 실상 확인
  - 결제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19년부터 4년간 448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도입 가맹점 152만개중 63.1%인 96만 개사의 누적 결제액 0원
  - 누적 결제금액 4조4,916억원의 82.3%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실적, 수수료 감면 효과있는 직불결제 실적은 12.7%에 불과한 5,700억원
  - 상품권 판매 수수료 286억원 중 특정 3개사에 203억원 집중 등 부실운영
- 2020년 이래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지원에 66조원 이상 예산 투입에도 소상공인의 고충은 증가, 소상공인 지원 기관의 빈약한 업무환경 제기
- 스마트상점 및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사업에 2년간 32억원 투입에도 실적이 없는 시장 10개 등 실적 부진 실태 지적 및 대책 추궁
  - 특정 기업 등에 특혜 및 일감몰아주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상황 확인
- 71억 예산 투입한 중기유통센터의 '가치삽시다' 플랫폼 지원사업에 업체 40% 매출 제로의 예산낭비 실태 확인

### □ 특정 기업에 특혜 의혹, 친문 낙하산 인사 반복 실태 질타

- 에디슨모터스에 중진공(당시 이상직 이사장)의 정책자금 129억원 특혜지원 및 정권 차원의 권력 비호 의혹(행사에 대통령 영상 축사, 송영길 대표 참석 등)
- 산하기관 이사장 등 알박기, 공영홈쇼핑 내 낙하산 인사 등 중기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로 국정 동력 상실과 혈세 낭비 우려 제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지역화폐사업 전면 재검토, 사적 유용 등에 대한 감사 및 검찰 수사 요청

□ 디지털 전통시장사업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정비, 감사 의뢰 및 특혜 등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

□ 권력 유착 의혹사건 감사 및 수사 의뢰, 알박기 기관장 법· 행정적 점검

민생경제 안정 위한 정책국감

## 코로나, 3高(물가 환율 금리) 위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마련 집중

###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내·외 대형 위기 속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 마련 위한 정책국감 주도

- 문재인 정부의 급증한 정책자금의 중·소상공인에 정상적 지원 여부 파악 및 정책자금 브로커 피해 근절대책 주문
- 현장의 요구가 큰 주52시간제 제도개선, '22년말 일몰의 30인 미만 기업에 허용되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연장 주문
-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소상공인 피해 대책 수립 주문, 카카오 선물하기 관련 판매자에게 배송비 전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근절
- 코로나로 매출 감소와 임대료 지속 증가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위한 임대보증금 감액조정제도 활성화 대책 필요
- 기준금리 3.0% 단행과 추가 인상 상황 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파악 및 자금 애로 개선 위한 면밀한 금융대책 시급
- 타 기관에 비해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 등으로 지난 5년간 26% 퇴사율의 소진공, 소상공인 대책 부실 우려 관련 실효적 대책 수립
-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에 따른 이중규제 등 부담 완화 대책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및 고도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제도 운영 주문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정책자금 집행 전수조사 통한 시스템 개선 관련 검토보고서 마련 및 불법 브로커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및 불법 사항 수사 의뢰

□ 중기벤처부에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갑질 현황 실태조사 요구 및 제도개선

□ 임대보증금 감액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 추가근로연장 조치의 재연장을 위한 법(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 전반 재점검 및 예산 조정

국민의힘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보건복지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문재인케어’의 허점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 5년간 약18.6조원 지출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는 고작 2.6%p 상승
- 건보 보장률 목표가 70%였는데 2017년 62.7%에서 작년 65.3%
- 건강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하였고,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5,765조 원의 적자 발생 추산
- 불필요한 입원 및 치료 등 의료이용, 대형병원 쏠림현상,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 등을 예측되었으나, 중간평가 없이 홍보비로 177억원 지출 등
- 무리한 비급여 급여화가 진행되는 동안 필수의료체계는 붕괴 직전 상황임
- 국감을 통하여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계기가 조성됨

### □ 보건의료, 복지, 방역, 식약 등 주요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오류를 바로 잡고, 공직자들의 늑장대응 및 기강해이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린 국감

- 고난도 고위험 중증의료 등 필수의료, 재활치료 체계 보강 필요성 제기
- 복지사각지대 대책의 정교화가 필요한 시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불통이 발생하여 막대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질타
-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대책, 장애인 탈시설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등의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주문
- 실내마스크 해제 등 방역 완화는 코로나 유행 및 장소와 시설 상황에 맞춰 조정할 필요성 제기
-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및 ‘약자와 동행’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를 더욱 실효성 있게 내실화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
- 건보공단 직원 횡령사건, 갑질 사례 등에 대해 질타하고 일벌백계 요구

### □ 국감 기간 중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시 대통령 발언, 질병청장의 주식 보유 관련하여 집요한 트집잡기와 자료요구 등이 있었으나, 여당 간사를 중심으로 무난히 대응하여 정책 및 민생 중심 국감으로 마무리되었음

# 문재인케어는 취약계층 외면한 대표적 선심성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문재인케어’ 의 선심성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저소득층 혜택이 제한

-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에 따르면 2017~2021년 문재인 케어 총지출액은 18조 5963억 원으로 집계
  - 2017년 1842억 원, 2018년 2조 3960억 원, 2019년 4조 2069억 원, 2020년 5조 3146억 원, 2021년 6조 4956억 원으로 매출 증가 추세
-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은 제한적이었으며 총 2조 2218억 원의 의료 안전망 부문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5년간 330억 원에 그침
- 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률 목표가 70%였는데 2017년 62.7%에서 (작년 65.3%)로 고작 2.6%포인트 상승에 그침
  -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
- 문케어 시행 이후 도덕적 해이 문제로 건보 재정 위기 강조, 건보 재정이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5765조 원의 적자 발생 지적

### □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성과만을 부각

- 2016년, 2017년에 이미 정부에서 불필요한 입원 및 치료 등 의료이용, 대형병원 쏠림현상,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 등을 예측하고도 정책 미평가
- 2017년 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예상되는 문제가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하는지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5년간 단 한 번도 평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정책 홍보비로 177억 원 지출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방안 모색

- 병원과 의사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아암 환자, 치료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를 얻거나 죽게 되는 뇌졸중 환자들, 조기 집중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높일 수 있는 재활치료에 활용하는 등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

## 최근 급증한 마약류 불법 유통 등 관리 부실 문제

### ▌주요 내용 및 성과

**□ 마약류 불법 사용 급증 지적 및 의료기관 처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 촉구**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류 불법 사용이 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마약류도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
-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4개 중 17건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국내에 밀반입됐거나 유통, 17건 중 14건이 2020년 이후에 유통되는 등 신종 마약류가 급속하게 유입
- 국제기구나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 주요국들과 정보 연계를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요구
- 의사와 환자의 이름, 나이가 같아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4년간 10만 여건에 이르러 셀프처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엄하게 규제할 필요
-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의 철저한 관리 주문
- 북미와 유럽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책마련 필요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마약류 범죄 예방·단속에서 치료·재활·교육·홍보 등 종합대책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

**□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서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노인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진화해야

### ▌주요 내용 및 성과

**□ '23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1천개 감소 편성 관련하여 홍보 강화 및 증액편성 요구**

-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은 2.9만개 늘었으며, 노인일자리를 실효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 늘리고 줄인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 제기
- 70세 이상 근로능력 취약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민간일자리 구직이 어려운 노인들이 공공형 일자리가 축소될 경우 생계곤란 우려 지적
  - 아울러, 공공형 일자리 참여 노인의 의료비 절감 효과(연평균 704천원) 및 사회관계 활동 증가 등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함을 제기

**□ 복지적 관점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준비하여 복원 필요성 제기**

- 노인일자리 선발기준 개편하여 존중받는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대안 개발 요구
  - 특히, 전체 노인일자리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의 조정을 통하여 공공형 일자리 대상 노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대안 검토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노인빈곤 해결 차원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대상 노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 추진**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공공형 노인일자리 중간형태인 월 40시간 일자리 등 개발 검토
- 농어촌 및 대도시로 구분하여 농어촌 노인이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도시 거주 노인은 다양한 일자리 형태를 개발하는 방안 검토
- '23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증액요구 제기

## 공공기관 기강해이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공금 횡령 및 도주 사태 관련, 느슨한 결제 시스템 등 원인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

- 범행한 직원의 일련의 일탈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시스템적 미비사항 지적하여 즉시 개선 요구
- 횡령사건 다음날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기강해이 대표사례로 지적
- 건강보험증 날조 및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수급 처리에 대해 허위보고 등 기강해이 만연에 대해 일침을 주고 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
- 강남역 건강증진센터 개점휴업 상태 사례 제기하며 민간과 경쟁우위 비교 하여 업무분장과 인력관리 조정 등 필요성 제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 갑질 및 장애인 학대 시설에 보조금 배분 등 기강해이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기강 확립 촉구**

□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직원들 급여 마련을 위해 국민들이 기증한 시신을 민간업체에 덤핑으로 넘겨 초과근무수당 및 연봉인상 등 단행, 근태관리 부실 등 방만운영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건강보험공단 횡령방지시스템 구축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 결제시스템 전반 점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결재권한 분산 등 시스템 개선
- 불법 및 비위 직원 엄중 처벌하여 일벌백계 추진

□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비위 및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자체 또는 외부감사를 통하여 진상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및 제도 정비 추진**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로 인한 복지서비스 지급 불능 사태 조속해결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오류로 인하여 정부, 지자체, 민간시설 등 급여 및 서비스 자격 조회 및 지급 불능 사태에 대하여 조속 복원 촉구**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통 관련 설계 잘못과 개통 과정상 무리한 개통 등 판단 오류 문제를 지적
- 현장의 혼란과 피해사례 등 문제 발생 규모 파악도 안되고 있고, 언제까지 정상화 할지 로드맵 제시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관리능력 부족 지적
- 설계 부실 및 개통 관련 판단 미숙, 개발인력 부족 및 중간 이탈 등 책임소재 규명 요구
- 복지부 보도해명자료도 사실이 아닌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체 조사 및 감사원 감사 요구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의 조속 안정화 및 미지급 급여의 소급적용 등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우선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의 조속 안정화를 추진하고, 오류발생과 대처 등에서의 책임소재 및 원인 규명 등 착수**

- 미지급 급여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불익이 없도록 조치

국민의힘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환경노동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4대강 보 해체 결정과정의 비민주성과 편파성 입증

-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4대강 반대론자인 환경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함으로써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위원회를 운영하였던 바, 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을 지적
- 또한, 4대강 보 평가시 수질지표로 COD만 활용하고, 지난 감사원 감사('18.7) 때에도 사용하였던 BOD, TP, TN 등 다양한 법적 항목을 활용하지 않는 등 4대강 보 해체 결정과정의 편파성을 입증

###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구성 입증

- 우리나라의 지형 여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 EU에서도 원전의 친환경인정 등을 감안할 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6.2%('18년) → 30.2%('30년)로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정치적인 목표치라고 그 허구성을 입증

### □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 적극 대응, 반대 입장 이슈화

- 야당은 노동조합법(2조, 3조)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선정하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면책 ▲하청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및 파업권 인정 등을 추진
- 법 개정안은 헌법과 법원칙에 반하며, 선진국의 사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노조 불법행위의 문제점, 우리 노사관계 불안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임을 집중 부각

### □ 문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혈세 낭비 및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 이슈화

- 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16.4% 급격히 인상하여 일자리 충격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4년 반 동안 10조3,194억원을 투입,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였음을 부각
- 문정부의 5년 연속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기금이 탕진되어 공자기금 10.3조원을 융자받아 금년에만 1700억원의 이자를 국민부담으로 지급하였고, 보험료 인상만으로 지난 2년간 5조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였음. 빚더미에 앉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조속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 □ MBC 부당노동행위 신속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

- MBC 경영진은 2017년 MBC 언론노조(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MBC 3노조 및 비노조기자 88명을 취재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지속적인 보복성 인사를 자행하여, 피해자들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장기간 지연
-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여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발표('22.10.26.)

###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정치공세와 검찰 고발 항의

- 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
-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국회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기자회견 및 규탄성명을 발표

4대강 보 관리방향

# 4대강 보 관리방향 전환으로 활용성 제고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수질항목 조작으로 4대강 보 해체 결정(언론보도)

- 문재인 정부가 ’21년 1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중에서 3개 보를 해체(공주보, 세종보, 죽산보)하고, 2개 보(백제보, 승촌보)를 상시개방하는 결정을 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이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으로 결정한 것임
-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중요한 수질지표로 활용한 COD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오염물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가진다”는 이유로 평가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여 2016년부터는 법적 평가지표에서 제외되었고, 민간위원 8명 중 7명을 4대강 반대 활동가나 반대 저서·논문 집필자로 뽑았음
- 보 운영 목표를 ‘보 평가’에서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전환하여 물이용 여건 및 기후변화에 비중을 두고 운영하되, 녹조 대발생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방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4대강 보 관리 방향 재정립

- 보 평가는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업용수 이용 등 보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이어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개편하고, 수질, 수량, 수생태 등 물관리 전문가 등이 많이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물관리 정책 방안 마련 필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구성

#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기반 마련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실현 불가능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조정 지적

-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성 없는 탈원전 기조 하에 과도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 비리와 같은 불법행위를 촉발했음을 지적
- 독일, 미국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6.3%, ’20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가 매우 더뎠다는 점(독일, 30%달성까지 ’15년 소요)을 지적
-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원전을 정상 추진하면서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여 적법한 절차 하에 에너지전환을 추진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실현가능한 탄소중립·NDC 달성을 위한 이행로드맵 확정 필요

-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
-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

#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 문제점 이슈화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 문제점 이슈화

- **(10.05. 10.24. 임이자, 이주환, 지성호, 김형동)** 야당은 노동조합법(2조, 3조)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지정하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및 파업권 인정 등을 추진
  ※ 이수진, 이은주 의원안 등 8건 계류 중
- 개정안은 헌법과 법원칙에 반하며, 다른나라에서도 사례가 없고, 우리 노사관계의 불안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잘못된 법임을 지적하며, 야당이 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원하청간의 임금 격차 등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으로 해결해 나갈 사항이며,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자의 대항권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을 부각함
- '22.10.20.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손해배상 소송사건은 대부분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고(민주노총 소속이 전체 소송건의 94%, 손배청구액의 99.6% 차지),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의 99.9%가 민주노총 사건이었음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견지

- 입법공청회(11.17.) 및 법안심사 소위(11.23.~12.7.) 논의 대응
- 국감기간 등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노조의 불법행위와 법개정시 예상 문제점, 선진국의 사례(노사 무기대등의 원칙 등) 등을 부각하며 법 개정안 반대 견지

# 문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과 혈세낭비 및 고용보험기금 고갈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문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과 혈세 낭비의 문제점 지적

- **(10.05, 임이자, 박대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16.4% 급격히 인상하고, 일자리 충격과 자영업자 반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4년 반 동안 약 10조3,194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30%(연 102만 명)는 중도 퇴직하여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였음을 지적

### □ 빚더미에 앉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국민부담 증가 및 부정수급 등 개선 필요성

- **(10.05, 박대수)** 문정부 5년 연속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기금이 탕진되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 10.3조원을 융자하였음. 이로 인해 금년도에만 1700억원의 이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보험료 인상만으로 노사가 지난 2년간 5조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였음을 밝혀냄. 빚더미에 앉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조속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함
- **(10.25, 지성호, 박대수)** 문정부 5년간 고용보험기금 등 노동부 지원금 사업 부정수급 금액이 총 3,203억원이나 됨을 지적하고 혈세낭비에 대해 철저한 시정과 감독을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추진

- 2023년 예산안 심사시 고용보험기금 등 정부 지원 사업 철저 심사로 혈세 낭비 방지
- 감사원의 고용보험기금 감사 실시 결과 및 노동부의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지속 점검
- 실업급여 개선, 노사지원금 부정수급 대책 등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추진상황 수시 점검

#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신속·철저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

- **(10.05., 10.24. 임이자, 이주환, 박대수)** 2017년 이후 임명된 언론노조 MBC본부(민주노총) 출신의 최승호, 박성재 사장 등 경영진은 언론노조 MBC본부(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MBC 3노조 및 비노조기자 88명에 대해 취재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외특파원 중도귀국 조치, 대기발령 및 징계, 부당전보 등 지속적인 보복성 인사를 자행하였으며, 현재도 취재기자 37명을 취재업무에서 배재하고 있다고 지적함. KBS 역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42명을 보직 박탈하고 불이익을 주어 소위 '블랙리스트' 문제를 이슈화 하였음
- 한편 MBC 피해자들은 최승호, 박성재 등 MBC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4차례('21.1.29., '22.6.22., '22.7.8., 9.14.)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사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①MBC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②MBC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등 법위반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MBC 부당노동행위 신속·철저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 발표('22.10.26부터 2주간)
- '22.10.31까지 부당노동행위조사 마무리, 위법 발견시 기소의견 송치(장관 답변)
  - ※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지속 점검
  - ※ 지난 3년간의 노동법 전반 위반 여부 조사, 위법사항 사법처리 예정
  - ※ 피해자 구제조치 및 직장내 괴롭힘 근절 조치 이행 감독

# 야당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에 대한 대응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야당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대응

- **(10.17. 임이자, 이주환, 김형동, 박대수, 지성호)** 2022.10.12.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SNS글을 인용하여 '제가 아직도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김문수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에 질문에 대해 '문 전대통령이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하였는데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음
- 야당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답변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킴
-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해당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의 생각을 답변한 것이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국회를 모욕한 것이 아니므로 국회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국회 기자회견 및 규탄성명을 발표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야당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 후속조치

- 국회 증언감정법 제15조(고발) 제4항에 따라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무혐의 처분시 야당의 무리한 고발에 따른 책임을 요구

국민의힘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국토교통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22년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핵심 성과〉**

### □ 국민 혈세에 빨대 꽂은 좌파 시민단체들의 추악한 민낯 고발

- 세월호 예산으로 수영장 딸린 펜션으로 가족여행 간 시민단체 적발
- 문재인과 휴가를 같이 보낸 시민단체에 눈먼 돈을 지급한 LH
- 정치적 연결 관계로 후원금을 배분한 JDC 문대림 전 사장의 의혹
  - 정의로운척, 선량한척, 욕심없는척, 깨끗한척 위선떨며, 인권·평화·환경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감정에 호소, 그것을 도구로 거짓·선동을 일삼아 이권을 챙기는 좌파들의 추악한 민낯 고발

### □ 아직도 진행형, 부패 비리의 끝판왕 이재명 게이트

- 김만배-은수미-LH 3각 커넥션 의혹 제기
- 이재명의 조작된 정치적 모라토리엄 선언 관련
- 성남시 판교지구 초과이익 환수, 10년째 중단 사태
- 백현동 개발사업의 임대아파트 축소에 반대한 공무원 보복인사 정황

### □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정권 적폐·알박기·낙하산 인사 문제

-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과 강성노조의 공생관계 문제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국기문란 행위 연루 기관장
- 국토부 항공정책실 항피아 세력 질타
- 주무장관의 서비스 혁신에 조직적 반발하며 사퇴한 낙하산 기관장

### □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의 엽기적인 기강해이와 방만경영 사례 적발

- 출범 2년 만에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등극한 국립항공박물관
- LH 출신 감정평가사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행태
- 한국공항공사의 고질적인 친인척 채용비리 적발
- 공공기관 임직원, 자회사 회전문 재취업 등 과도한 후생복지 문제

### □ 기타 문재인정부 5년 적폐 고발 및 국민 생활밀착형 민생국감

-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촉구
-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 시장수요와 역행한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공공임대 공급) 대참사
-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 및 내국인 규제 역차별 문제 지적
-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 지적
- 청소년의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방관하는 공유업체 문제

# 국민 혈세에 빨대 꽂은 좌파 시민단체들의 추악한 민낯 고발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세월호 예산으로 수영장 딸린 펜션으로 가족여행 간 시민단체 적발

- 경기도는 6년간 세월호 예산 110억 중 36억을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337개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하였으나
- A협동조합은 1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조합원 가족들과 수영장 딸린 바닷가 펜션여행 등으로 200여만원 집행
- B시민단체 대표는 1900만원을 지원받아 자기 남편에게 자료집 인쇄, 홍보 등을 맡기고 933만원을 지급
- C협동조합은 1900만원을 지원받아 요트체험, 렌터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400여만원 사용
- D민간단체는 3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 재료와 강사비용으로 3000만원 사용하는 등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과는 관련 없는 사적유용 사례 다수 적발

### □ 문재인과 휴가를 같이 보낸 시민단체에 눈먼 돈을 지급한 LH

- LH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원한 제주청년 활동가 양성사업에 시민단체 (사)제주올레(서명숙)의 청년일자리 지원예산 횡령 의혹 질타
- 연간 40억원 정도의 국고지원금 및 기부금을 받은 시민단체가 사용한 자금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었던 문제
- 문재인정부 고위층의 지원 지시 등 비호 의혹 제기

### □ 정치적 연결 관계로 후원금을 배분한 JDC 문대림 전 사장의 의혹

- JDC는 '제주형 DMO 시범사업' 공모과정에서 좌파 시민단체(제주폐가살리기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평가 조작 의혹 제기
- 평가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평가 비중이 80점으로 매우 높았고, 위원 중 JDC 직원 2명, 시민단체 2명, 전문가 교수 1명으로 구성
- 채점 결과는 전문가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평가 담합 정황
- 이 사업을 주도한 문대림 전 사장은 14억 6천만원이 투입되는 DMO 사업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배분한 것 아닌지 의심

### □ 정의로운척, 선량한척, 욕심없는척, 깨끗한척 위선떨며, 인권·평화·환경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감정에 호소, 그것을 도구로 거짓·선동을 일삼아 이권을 챙기는 좌파들의 추악한 민낯 고발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수사 요구 검토

### □ 사적 유용한 예산, 환수 조치 검토

# 아직도 진행형, 부패 비리의 끝판왕 이재명 게이트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김만배-은수미-LH 3각 커넥션 의혹 제기

-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LH 오리사옥 부지개발 의지 피력
- '20년 8월, 2억 2천만원을 들여 오리사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9~10월 매각공고 시행을 준비하던 LH는 '20년 11월 돌연 성남시와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협의한 후 매각 보류
- 대체부지 확약도 받지 않은 채 성남시와 논의를 진행하던 LH는 대장동게이트가 터지자 '21년 9월 협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기 시작
- 오리사옥과 등가교환이 가능한 수준의 대체부지 제공을 전제로 사업 시행을 요구하며 사업 표류
- LH의 석연치 않은 오리사옥 매각보류 결정,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김만배 등 대장동 카르텔 개입 의혹 제기

### □ 이재명의 조작된 정치적 모라토리엄 선언 관련

- 이재명은 '10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후 20일도 안 돼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 당시 성남시는 국토부가 판교사업의 조기정산을 추진해 5200억원을 단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지만 국토부는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함
- 이익금 산정 기준을 논의하자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미 전용해 쓴 금액 정산을 거부한 것을 모라토리엄으로 포장한 것

### □ 성남시 판교지구 초과이익 환수, 10년째 중단 사태

- '03년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상 건교부가 조정하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이 '13년 중단된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08년 성남시는 판교개발사업의 단순 개발이익을 최대 3조 5539억원으로 추정
- 개발이익 환수를 하지 않은 두 전직 성남시장(이재명, 은수미)의 직무유기

### □ 백현동 개발사업의 임대아파트 축소에 반대한 공무원 보복인사 정황

- 이재명은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 → 10% 줄이는 데 반대하며 협조 결재를 거부한 주거환경과장을 좌천 발령한 사실 공개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국토부 감사 검토

### □ 판교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의 조정역할 촉구

#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 적폐·알박기·낙하산 인사 문제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과 강성노조의 공생관계 문제

- 코레일네트웍스 전임 낙하산 강귀섭 사장이 노조에 써준 '파업 시 임금 70% 지급' 합의서 때문에 노조원들에게 3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 회사는 파업으로 약 71억원의 매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임금 39억원까지 지급하면 파업에 따른 회사 피해는 110억원에 이르며 파산 우려 지적

###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국기문란 행위 연루 기관장

-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사이버정보비서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핵심연루자로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 3명과 검찰수사나 감사를 받고있는 상황
- 문재인정부 대표적 낙하산 알박기 인사로 낙인찍힌 공기업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과 거취 여부 질타

### □ 국토부 항공정책실 항피아 세력 질타

- 우수 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인력 확정선발 정책이 특정대학(항공대·한서대)이 특혜를 독식하는 불공정 제도로 변질
- 조종인력 양성체계 지원을 주도를 위해 출범한 하늘드림재단은 지원자금 마련을 위해 면제해주던 '저소득층 훈련생 조종훈련 공항시설료'도 부과
- 이는 국토부 항공정책실 직원 148명 중 항공대 출신이 42명(28%)으로 항공대·한서대 출신을 주축으로 한 공무원 항피아가 원인으로 지적

### □ 주무장관의 서비스 혁신에 조직적 반발하며 사퇴한 낙하산 기관장

- 휴게소 음식이 맛없고 비싸다는 민원에 국토부는 해결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는 등 주무장관의 서비스 혁신에 조직적 반발
- 안전관리 E, 도덕성 D등급의 도로공사가 경영평가만 A등급 유지하며 성과급에 눈이 멀어 사퇴한 기관장은 감사받고 소명하면 될 일
- 도로공사 전체 재원조달 총액 14조 5천억원 중 휴게시설 운영수익은 2천억원(1.2%)으로 경영실적 반영은 미미함에도 이를 빌미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제안이 경영악화로 이어진다며 반발하는 모순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업무상 배임죄 등 불법 여부 확인 후 고소 및 추징 추진 검토

#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의 엽기적인 기강해이와 방만경영 사례 적발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출범 2년 만에 비리 종합백화점으로 등극한 국립항공박물관

- 박물관 설립 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임용부칙과 연봉기준을 만드는 업무를 맡았던 국토부 서○○ 팀장 등 6명은 박물관이 문을 연 뒤 박물관으로 셀프 전환채용(주요보직 꿰차기와 연봉인상 자행)
- 박물관 직원 A씨는 전문번역가가 아닌 친척을 소개해 번역 계약을 수주
- 이 밖에 쪼개기 계약, 허위 견적서 작성 지시,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등 출범 2년 만에 감사를 통해 적발된 비위만 11건인 상황

### □ LH 출신 감정평가사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행태

- LH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내부직원평가를 이용해 퇴직자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 지적
- 계량지표는 모두 비슷한 수준이나 내부직원평가 항목에서 54개 사업 중 46개가 선정 법인이 뒤바뀌는 입찰비리 정황 질타
- '21년 6월, '5년 이내 퇴직자 관련 기업 수의계약 금지'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LH 출신 감정평가사 소속 법인과의 수의계약은 121건, 이중 5년 이내 115건 체결
-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선정 법인과의 리베이트 정황 의심

### □ 한국공항공사의 고질적인 친인척 채용비리 적발

- 한국공항공사 공항 보안직 신규 임용과정에서 공사 김광우 인사관리실장이 자기 자녀 채용에 직접 관여한 정황 공개
- 금년 보안직 합격자 18명 중 4명이 공사 임직원 자녀가 합격하는 등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굳어진 채용비리가 아닌지 의심

### □ 공공기관 임직원, 자회사 회전문 재취업 등 과도한 후생복지 문제

- '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4명의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이 평균 연봉을 약 2000만원 가량 인상하며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 재취업
- LH의 경우 투기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난 상임이사 4명을 불과 5개월 만에 연봉 9천여만원을 받는 LH 사내대학 교수로 임용한 사실 질타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감사원 감사청구 또는 국토부 감사 검토

### □ 제도개선 요구 추진

# 기타 문재인정부 5년 적폐 고발 및 국민 생활밀착형 민생국감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국민 세부담 증가하였고,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모순 발생 우려
-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지적

### □ 시장수요와 역행한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공공임대 공급) 대참사

- 장기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 2천호, 사업승인 받고 착공이 지연된 7만호 등 물량확보에 급급한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 참사 고발
- 좁은 면적, 비선호 입지 등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공공임대주택의 현실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지적

### □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 및 내국인 규제 역차별 문제 지적

- 부동산시장 급등기,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성행
- 문재인정부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은 자금조달 및 세금부담 등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규제에서 벗어난 역차별 논란 질타

### □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 지적

-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1위 커피값이 1년새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2배 넘게 오른 배경에는 매출액 62%까지 내는 입점업체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
-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H&DE'라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에 출자해 수십년간 퇴직자들에게 수십억의 수수료를 배당
- 휴게소 운영업체와 입점업체 간 수수료율 산정 체계 개편 및 전관예우 자회사와의 계약 근절 등 공공성 강화 노력 촉구

### □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 촉구

-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설치
- 올해 9월까지 82건 신고 접수, 의심되는 위법사항만 178건
-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아닌 불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 필요성 강조

### □ 청소년의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방관하는 공유업체 문제

-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17) 12건 → ('21) 549건으로 46배 급증
-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허술한 공유업체 규제 필요성 강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국토부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 요구 추진

국민의힘

# 제2부

##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여성가족위원회

# 국정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여성가족부폐지

- 여가부 폐지를 국민의힘 20대 대선 정부혁신 공약으로 내면서 야당에서 강력히 반발
- 2008년 이명박 인수위 때 논의되었으나 존치로 결정이 나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한동안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 박원순·오거돈 성추행사건 당시 이들이 피해자를 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의 소신없는 발언으로 다시 크게 논란이 됨

### □ 여성가족부장관 퇴장요구

- 증인· 참고인 없는 상황에서 국감 진행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피켓 부착한 채 국정감사 진행
-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장관 퇴장, 촛불집회 후원금환수, 피켓부착 등으로 여아 공방
- 양이원영(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겠다는 장관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임으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의 퇴장을 위원장에게 요청함으로 회의시작 10분만에 정회함

### □ 대통령퇴진 촛불시위 지원단체 보조금

- 여성가족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989억이 나가는데 정치권에 기대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단체에 대한 회수가 필요
- 건전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여성가족부 예산이 정치적 선동 집회에 쓰이거나 좌파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함을 지적

### □ 정경희(국)간사의 동성결혼, 동성애 합리화 시키지 말라는 질의에 권인숙(민)위원장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질의에 대해 비판

갈라치기 분열조장

# 여성가족부폐지 논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 20대 대선 정부혁신 두 번째 공약
-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숲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
  * 「복지부」 아동보육·노인 ↔ 「여가부」 청소년·가족 / 「고용부」 여성고용 ↔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 필요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정부조직법 개정

- 정부는 10월 6일(목) 14시, 고위당정협의 10월 3일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예정
  -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 부여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 정립 및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활성화
-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 예정
- 정부조직법 개정안 (2022.10.07. 주호영 대표발의) 통과를 위한 활동

갈라치기 분열조장

# 국민의 혈세 민간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여성가족부 지원 민간단체 보조금

-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학생협의회에서 11월 5일 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예고
- 이 단체 대표 최준호는 통합진보당 청소년비대위 출신이고 스물다섯이며 중고등학생도 아님
- 서울시에서 전국중고등학생 대표자 협의회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에 따라 연간 1250만원 지원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보조금환수 조치

-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4대6으로 부담함
- 활동계획서와 상이한 정치활동을 하면 지원비 환수요구
-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학생협의회가 회원을 공게모집할 때 후원명칭을 무단사용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함
- 여성가족부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후원기관 명단은 삭제된 상태
- 여성가족부는 민간 경상보조사업 및 지자체 보조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조치 할 것을 요청

갈라치기 분열조장

# 스토킹 피해자·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스토킹 보호자 시설 확대

- 9월14일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에 1차 피해, 흉기에 의한 2차 피해를 입음
- 스토킹 피해자가 전국에 분포하는데 스토킹에 의한 2차 피해자 보호시설이 현재 서울시 1곳만 있어 시설 확보 마련이 시급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보호시설 확대

- 전체 피해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10대와 20대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소는 14개소, 전문 요원도 3명으로 현저히 열악한 상태임
- 지자체별 디지털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전문인력 충원 필요
- 반의사불벌죄 폐지, 올해 안 추진 예정 (법무부와 협의)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보조금환수 조치

- 2023년 7억의 예산이 확보, 7억 원 안에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 5개소, 치유회복프로그램 사업 9개 예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을 이번에 3명 늘렸으나 부족하여 예산을 늘릴 예정

국민의힘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국회운영위원회

주호영 의원

# 효율적이고 균형잡힌 운영을 위한 제언

## 주요 내용

### □ 탈시설화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촉구

- 강제적 탈시설화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 무연고 장애인 등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역할 주문

### □ 운영위원회 소관 변경 후 국가인권위원회 감독 부실 우려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후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할 우려
- 법사위 소관 당시 회의 횟수와 운영위 소관 횟수 비교자료 제출 요구

### □ 의원 입법 과정서 위헌심사 강화 방안 주문

- 본회의 통과 법률 중 위헌 판결이 매년 15건에 달하고 위헌 조항 개정시한을 정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입법 공백 발생
-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위헌법률을 줄일 수 있는 위헌심사 강화 방안 주문

### □ 국회 운영의 고도화를 위한 제언

- 국회의원 스스로가 경제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자력으로 습득. 국회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방안 주문
- 정보위원회나 본회의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한 의전이 과한 측면.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안 주문
-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원회관과 본관 사이의 친환경적인 이동수단 확충 요구

김미애 의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성

## 주요 내용

### □ 이태원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대응체계
- 철저한 진상규명 후 엄중한 책임자 문책
- 공직자 기강해이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부처별 다양한 대책 마련

### □ 북핵 대응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 국면
-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대비 태세 마련
- 친일감정 선동으로 인한 국익 훼손 행위에 단호한 대처 필요

### □ 대통령실 이전 효과

- 야당의 대통령실 이전비용 악의적 과다추계 행태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대통령실 이전으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림
- 11월 초 기준 약 250만명 관람객 방문하며 대한민국 명소로 자리잡음
- 청와대 개방의 진정한 의미 되새기며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

### □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명백한 인권침해

- 귀순의사 밝혔음에도 강제북송 결정한 문정부의 조치는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
- 인권위의 관련 진정건 각하하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인권보호 책무 외면
- 국민 신뢰회복 위해 관련 사안 철저히 재조사한 뒤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함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책임 강화

- 베이비박스 아기들을 비롯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책 마련 필요

전봉민 의원

# 문재인 前 정부 인권 유린 실태 및 대북 정책 실패 질타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각하 처리 부당 지적

-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후 시민단체에서 인권위에 진정 신청
- 인권위 조사 한계 등을 이유로 기각 처리함에 따라 민간단체 각하 처분 취소소송 제기, 2심까지 패소한 인권위가 대법원 상고까지 검토
- 인권위의 부당한 상고 검토 지적, 대법원 상고 포기 확정 및 재조사 시행

### □ 이태원 참사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 지적

- 희생자 명단 공개 등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 지적
-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인한 경호처 인력 배치 문제로 이태원 참사를 키웠다는 등의 야당발 가짜뉴스 대응
-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및 가짜뉴스에 대한 대통령실의 적극적 노력 당부

### □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에서 비롯

- 친북 지향 文 정부에서 북 미사일 도발 43회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음
- 문 정부가 가짜 평화 쇼를 통해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면서, 핵무기 경량화 등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북한의 도발만 더욱 가중됨
-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엄중한 대응 촉구

### □ 문재인 前 대통령, 감사원 감사 질문지 수령거부 지적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문 前대통령 측 거절은 부당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문재인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조작 사건
-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문 前 대통령 조사 촉구 및 대통령실 역할 강조

### □ 대통령 탄핵 등 무등록 여론조사기관의 불량 여론 선동 적극 대처 필요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80일 동안 여론조사만 1,004건 공표됨
- 미등록 업체들의 정치 편향적 여론조사로 국민 혼란 가중 및 국정동력 상실 우려, 대통령실의 적극적 대처 주문

조은희 의원

# 이태원 사고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마련 강조 및 사회적 병폐 해소 위한 적극적인 국정운영 주문

## 주요 내용

### □ 유족상처 덧내고 국민분열 키우는 '가짜뉴스 및 재난 정쟁화' 폐해 지적

- 재난 상황 속 국민적 추모분위기마저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일부 방송인・정치인 행태 지적
- 혐오와 분열 조장하는 무책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대한 방지책 마련 촉구

### □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반환) 관련 '견사구팽' 실태 지적

- 국민 최저임금 191만원, 기초수급자 지원비 40만원인 가운데, 대통령예우보조금과 비과세 연금을 받는 전 대통령에게 최대 242만원의 풍산개 양육비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논란은 국민 예의 아냐. 문 대통령의 모순된 행실 지적

### □ 문재인 정부 5년간 확산된 '마약・조폭' 실태 지적

- 최근 5년간 청와대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마약실태 문제제기 및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마약 행정관' 봐주기 의혹 지적
- 인성, 예절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균관 부원장에 조직폭력배 출신인사 임명 등 사회 전방위에 스며든 병폐에 대한 시정 촉구

### □ 시민단체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내부 우려 전달
- 인권위 조사 신뢰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중립의무 강조

한무경 의원

# 정치·이념에 편향된 인권위 지적 및 국회사무처 운영 개선 촉구
# 내로남불 文정권, 북한 눈치 보기로 국가와 국민 안전 저해

## 주요 내용

### □ 정치·이념에 편향된 인권위 지적 및 국회사무처 운영 개선 촉구

- **(인권위)** 박원순 시장 유족 측 前법률 대리인의 2차 가해 알고도 묵인
  -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와 〈사례집〉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 포함 안 해
- **(인권위)** '탈시설화' 시민단체의 셀프 제도 마련에 도움 준 인권위
  - 인권위 탈시설화 정책권고, 탈시설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고서 바탕 제작
  - 복지부, 인권위의 정책권고 수용하여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 **(미래연)** 기존 입법 지원 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조직운영 미흡 지적
  - 미래연과 입조처, 같은 기관에 같은 시기·유사한 주제로 용역연구 계약
  - 국회사무처 조직진단 평가, 대부분 항목 미흡·미비·관리 감독 필요로 낙제
- **(입조처)** 입조처 자료 인용한 탈원전 가짜뉴스, 입조처의 소극적 대응 지적
  - 입조처 자료에는 '탈원전' 단어 없어, 입조처의 미온적 대응이 가짜뉴스 양산
- **(예정처)** 탄소 중립 관련 8개 법안, 예정처 비용추계는 0건 지적
  - 천문학적 비용 예상되는 법안의 경우, 추후 사업계획 확정 후 비용추계 제안
- **(국회인권센터)** 저조한 운영 실적과 센터장의 자질 문제 지적
  - 개소 후 10개월간 총 48건 상담, 두 명의 직원이 한 달 동안 5건 처리
  - 센터장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대처 미흡했던 서울시 인권보호팀장 출신

### □ 내로남불 文정권, 북한 눈치 보기로 국가와 국민 안전 저해

- **(대통령비서실)** 이태원 참사 이용 정치공세 중단 촉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반격으로 민주당 집권 시절 참사 관련 부실 대응 지적
  - 인구밀집도 실시간 파악해 혼잡도 급증 시 위험문자 발송토록 재난대응관리 개선
-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北피살 사건 진상규명 및 직무유기 추가 기소 촉구
  - 국가안보실 및 군·해경, 서해 공무원 실종 당시 북측 표류 가능성 확인하고도 은폐
  - 표류 예측 결과대로 수색 집중했다면 구조 가능, 적극 구조조치 책임 방치
- **(국가안보실)** 우리 영토 함박도 관련 北주둔 논란 졸속 처리
  - 정의용 前실장 주재 회의 직후, 국방부 민관합동검증팀 구성해 北영토로 졸속 발표
  - 탈북어민 북송 건과 마찬가지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초정 직전 北의식



홍석준 의원

# 일하는 국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 국회와 정부의 역할 촉구!

## 주요 내용

### □ 보편적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질타

-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등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사내 게시판에 정치적 성향 드러내는 글 작성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소지
- 문재인 정부의 유엔 北인권결의안 불참으로 UN인권 이사국 낙선 결과 초래 비판
- 촉법소년 필벌주의 인식 확산 통해 범죄 억제 및 예방 필요,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 주문

- 국회 의원회관은 국민과의 소통 위한 곳으로 과도한 보안 부적절 지적
-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입법 통제 장치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입법 양산됨 과도한 규제입법 남발 방지를 위한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 도입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의 신뢰를 위해 데이터 오용은 적극 반박해 나갈 것 촉구
- 국회도서관 번역자료 등 의미 있는 자료 국민 활용도 높이기 위한 노력 당부

### □ 이태원 사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탈원전發 한전채 문제의 공격적 대응 강조

- 이태원 사고 관련 정확한 원인 규명에 방해되는 가짜뉴스, 거짓 선동 비판
- 이태원 사고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매뉴얼의 획기적인 변화 필요
-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경위 파악과 행정안전부의 PS-LTE, 해양경찰의 LTE-M, 철도공사의 LTE-R 세 가지 혼재되어 서로 간섭하고 호환 제대로 안됨 지적, 관련 부처를 통한 개선 필요
- 탈원전으로 '자금시장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관련 공격적인 대책으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강조
-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 외에도 국지도발의 대비태세 강화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국민의힘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

# 장기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 주요 내용

### □ 도산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독려 및 회생법원 설치 촉구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법인 및 개인 회생 파산 사건 급격하게 증가 추세
- 법원, 도산사건 관련 단순 통계 수치 집계가 아닌 채무별, 산업별 등 구체적 통계 등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향후 재판과 기업과 국가 및 지자체 경제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 또한, 비수도권 도산사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수도권에도 도산사건 전문법원인 회생법원 설치 촉구

###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위한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 필요 및 취약계층 재정지원 법령 전수조사 및 법령정비 추진 제안

- 장기 경기침체 등 자영업자 부채규모 급격하게 증가. 경제 전망 역시 불투명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규제법령 전수조사 실시 및 법령정비 신속 추진 촉구
-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등 법령 전수조사 실시 및 법령정비 추진 제안

### □ 조선업·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수급 개선 촉구

- 조선기자재업계 숙련 외국인근로자 지원 제외 등 정부의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수급대책의 문제점 지적
- 숙련 외국인근로자 지원 가능 업종에 조선기자재업체 추가 및 쿼터 확대 등 개선대책 마련 촉구
- 아울러, 정부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대책도 미흡한 점이 없는지 정책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 및 대응 촉구

###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 文정부, 故이대준씨 월북몰이 및 조직적으로 은폐·왜곡 문제 지적
-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좇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정점식 의원

# 文정권 5년 간의 문제점 지적 및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주요 내용

### □ 文정부의 불법행위 점검 - 월북조작, 강제북송, 월성1호기 사건 등

- 문재인 정부의 親북한 기조에 따라 자행된 서해피살 공무원의 월북 조작 사건, 귀순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점검하고 철저한 수사촉구
- 청와대에 의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고 막대한 국가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법원 판결 촉구
-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여가부 민주당 공약 개발 의혹 등 불법행위 점검

###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점검하며 친민주당 성향의 전 수원지검장의 수사 방해 행위를 질타
- 기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 수사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성 강조

### □ 특정연구회 출신의 주요 보직 장악 등 사법부의 정치편향성 질타

- 文정권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5년을 돌아보며 정치 편향성 문제 지적
-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의 사법부 장악 지적
- 편향적 코드인사 및 코드재판,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공관 호화 리모델링, 며느리와 직장동료들의 공관 만찬 등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지적

###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부와 법무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 수립을 촉구
-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발생 억제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 □ 감사원의 정상적 감사활동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는 민주당 행태 규탄

- 서해피살 공무원의 월북 조작사건 감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확인
- 대통령실 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 간의 문자대화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상황을 설명해 준 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

### □ 검수완박법의 문제점과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규정 필요성 강조

-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의 꼼수탈당, 회기 쪼개기 등에 의해 추진된 졸속 입법이자 위법한 절차로 추진된 법안이며 실제 현장에서 수사 지연 및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
-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규정은 검수완박으로 모호해진 부패범죄, 경제범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조치였다는 점을 강조

박형수 의원

# 부패사건 및 민생사건 수사 철저히 해야

## 주요 내용

### □ 성남FC 사건 수사 철저히 해야

- 성남FC사건은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후원을 하도록 한 제3자 뇌물 사건임
- 후원금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인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결재권자인 당시 성남시장이 모든 상황을 알 수 밖에 없음
-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당시 성남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임

### □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촉구

-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입국인원이 급감하여 농촌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수요 지자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함

### □ 대법원 구속영장 발부기준 공개해야

-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만으로 구속여부를 가리는 현재의 법 체계하에서는 제2, 제3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을 수 없음
- 이에 피해자에의 위해 가능성 등을 적극 고려하는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법원이 정하여 이를 공개해야 하다고 봄
-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구속 영장 발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임
- 차후에는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심원을 참여시키는 영장배심심사제와 같은 대안도 고민해야 할 것임

유상범 의원

# 이재명 대표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패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신속 수사 촉구

## 주요 내용

### □ (법무부·검찰) 이재명 대표 대선불법자금 수사 필요 및 특검 주장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대장동 특혜 개발의 이익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불법자금으로 사용된 정황 증거 제시 및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몸통'이자 '위선'이라는 사실 확인
- 대장동 특검 관련한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의 말바꾸기, 거짓말, 내로남불 행태 및 문재인 정권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뭉개기 수사 사실 질타
- 범죄 행위가 명백한 이재명 대표만을 보호하기 위해 압수수색 저지, 국정감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주당 행태에 대한 지적 및 비판

### □ (법무부·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사위 특혜 채용, 블랙리스트 작성,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 주장

- 서면보고 받고도 후속조치 미실시, 피격 후 열린 관계장관회의 불참, 유족들의 정보공개요청 거부 및 법원 판결에 불복(항소)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 및 거짓 언행에 대한 질타 및 책임 규명 필요성 주장
-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직 및 국회의원 공천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간 뇌물성 입증 및 문재인 대통령 측 거짓 해명 지적, 수사 필요성 주장
-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 블랙리스트 작성·사퇴 압박 정황 공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조국 등 '윗선'의 개입·지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 □ (감사원) 서해공무원 피격 감사원 감사, 감사완박법은 위헌, 풍력으로 얽힌 새만금 게이트 감사 추진 필요성 등

- 서해공무원 피격 감사는 감사원이 해야 할 정당한 감사, 문재인 정부가 했던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감사지시 및 인사문제)·고인과 유족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2차 가해 지적
-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풍력에 매달리면서 벌어진 무리와 불법에 대한 감사 필요성, 거대야당이 추진하는 감사완박법은 위헌

장동혁 의원

# 2022 국정감사 백서

## 주요 내용

### □ 대법원의 노조화

- 법원행정처, '19년과 '21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재판 일정, 인사 등 법원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포함
- '(직원) 정기 인사 전후 각 1주간 재판 기일을 잡지 않도록 한다', '승진이 임박한 직원은 (업무 부담이 많은) 사법행정 부서의 전입을 지양한다', '노조 간부 수련회는 근무시간 중에도 가능' 등
- 대법원 스스로 국민이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을 지적

### □ (법무부)전자감독 인력 부족이 부른 사망 사건

-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와 사범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
- 최근 5년간 전자감독 준수 위반 건수 36.5% 증가, 전담직원 367명 중 117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 중이며, 신속수사팀은 3교대로 근무하고 2인 1조 근무는 불가능한 상황
-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여 제2, 제3의 강윤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지적

### □ 감사원의 독립성 강조

-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감사원 회전문 인사교류(왕정홍, 김진국, 김종호, 이남국), 전 정권에 비해 파견 직원 1.5배 증가, 감사원장 반부패정책협의회 배석, 문 대통령 4대강 감사 직접 지시 및 39차례 수시보고 등 지적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야당의 무차별적인 공세 비판

### □ 군사법원

- 작년 9월 조재윤 육군 하사가 선임들과 부대 인근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 발생. 군검찰은 지난 2월 단순사고사 내사종결
- 유족의 고소로 재수사 끝에 지난 9월 선임 2명 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되어 불구속 기소 되었으나, 처음에 군은 아무런 사과가 없었으며 선임들은 경징계만 받고 대대장은 징계를 피함. 서울중앙지법에서 독촉하는 수사기록은 제출하지 않는 상황
- 국방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하고, 소송에도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힘

### □ 대검찰청

- 사무장병원은 최근 10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수급.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재정 적자 폭이 1.4조원, '28년에는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공단의 환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지만, 이를 통보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 최근 10년간 부정급여에 대한 징수는 5%만 이뤄짐
- '대검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 지침'을 개정하여 '깜깜이 통보'를 없앨 방안 마련 촉구



전주혜 의원

# 문재인 정부 사법·권력기관의 민낯

### □ (법무부)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내로남불'

- 추미애 전 장관의 '전용 헬스장' 설치 의혹 제기 및 관련 예산 낭비 지적
-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 라임 전주(錢主) 김영홍, 테라 권도형 등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해외 도피' 행각 지적 및 조속한 신변 확보 촉구
-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등 검수완박법의 '독소조항' 지적

### □ (검찰) '이재명 방탄소년단', 거대야당의 검찰 겁박

- 문재인 정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뭉개기' 지적
- 대장동, 성남FC, 불법선거자금 수수 의혹 '몸통'이 이재명임을 지적하고, 검찰에 신속·엄정 수사 주문
- 민주당의 검찰 압수수색 및 국정감사 방해 규탄

### □ (대법원) 임기 1년 남은 김명수 코트의 초라한 성적표

-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판사 사표수리 허위답변' 관련 검찰 조사 협조 촉구
- 김명수 코트 하 각급 법원 사건 첫기일· 미제사건 증가 및 미제분포지수 악화 등 재판지연 심각 지적
- 대법관 공석 따른 상고심 사건 지연에 대한 오석준 후보자 신속 임명 강조
- 스토킹 사건 매뉴얼·양형기준 설정 및 피해자 중심의 보호 지원 확대 강조

### □ (감사원) 내가 하면 공정감사, 남이 하면 표적감사?

- 문재인 정부 시기 감사계획 미반영 감사 102건 및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착수한 점을 토대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지적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무례하다'며 거절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성역 없음을 강조하며, 조사에 응할 것 촉구

조수진 의원

##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곧 민생

### 주요 내용

**□ 대법원·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등**

- 이재명 대표 과거 재판지연 꼼수 지적 및 향후 철저하고 신속한 재판 당부
- 조국·송철호 사건 재판의 비정상적인 지연 지적, 대법원의 방안 촉구
-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의 철저하고 신속한 진행 당부

**□ 법무부**

-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한 졸속입법 지적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청사 내 특정인 전용 헬스장 설치 문제 지적
- 라임 펀드 사기, 이재명 대표 관련 부패 및 비리 의혹 신속 철저 수사 당부

**□ 감사원**

-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무례한 짓' 발언 문제 지적
- 김정숙 여사 인도 단독 방문 관련 문제점 지적 및 감사원 감사 촉구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핵심은 '문재인 3시간'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 헌법재판소·법제처·군사법원·공수처**

- (헌재) 권한쟁의 심판 한동훈 장관 고발 및 검수완박 위헌 근거 질의
- (법제처) 더불어민주당 '감사완박법' 추진 문제점 지적
- (군사법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더불어민주당 친일몰이 문제 지적
- (공수처) "감사원 감사 대비 감사원장 사건 잡고 있어라" '사건 홀딩' 의혹 지적

**□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 이재명 대표 대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관련 질의 및 철저한 수사 촉구
- 라임 사태 및 문재인 정권 부패·비리 관련 수사 지연 비판·신속 진행 당부
- (대검) 민주연구원 영장 집행 저지 관련 문제점 지적 및 영장 집행 촉구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 부정·부패·왜곡·불공정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 5년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

## 주요 내용

### □ 이재명 대표 및 관련 인물·단체의 각종 부정부패 의혹

-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및 아태협의 대북코인 관련 의혹 제기
-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유종일 KDI대학원장의 주빌리은행 부정 겸직 관련 허위자료 제출, 위증 집중 질타

### □ 곳곳에 널려있는 문재인 정권의 친문·친민주당 알박기 인사

- 각종 공공기관 임원 중 친민주당 인사, 알박기 인사 다수 확인 및 지적
-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며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지속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질타

###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참사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가 월권이라는 점, 문재인 정부는 이를 '탈원전'으로 왜곡하여 정책에 반영한 점 지적
- 탈원전 정책에 따른 ESS 폭증으로('16 대비 약 10배 증가) 높은 화재 발생 우려, 제2의 카카오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

### □ 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

- 김정숙 여사 외유 위한 세종학당 예산, 문준용 씨 보조금 지원 위한 서울문화재단 국비지원 급속 증가 지적

### □ 금융당국 전관 금융회사에 재취업해 창구 역할을 하는 관행 지적

- 문재인 정권 5년간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출신 금융권 재취업 승인 94건 달해
- 현재도 금융당국 출신 114명 금융회사에 재직 중

강민국 의원

# 잃어버린 文정부 5년, 확실히 바로 잡았습니다!

## 주요 내용

### □ 文정부의 태양광 비리를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1,446건 7천억 원 중 절반은 文정부 임기 내 발생한 점을 지적, 태양광 광풍 철저한 조사 필요성 제기 (금융감독원)
- 실적 쌓기 위해 '대출부적격' 사업자에 태양광 대출 내준 은행권들의 위법 대출 지적 (금융감독원)
- 연간 회의 3건 이하 위원회 67개, 미구성 위원회 8개 등 예산 낭비하는 난립 위원회 폐지 및 축소 촉구 (국무조정실)

### □ 文정부 낙하산 관행을 뿌리 뽑았습니다

- 본인·측근 중심의 지배 구조 만들어 계열사 채권 몰아주기 등 위법 경영 펼친 BNK에 민주당 인사 10명 확인, 금융감독원 검사 촉구 (금융감독원)
- 文정부 낙하산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지인 업체에게 준 부적절한 수의 용역 계약 및 특혜 의혹 강력 지적 (한국산업은행)

### □ 누구보다 소비자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상습·과다 거부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 촉구 (한국소비자원)
- 공정위 무관심과 소관법령 부재로 5년여간 폐업한 상조업체 고객 미환급액 508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보험사 휴면보험금 8,293억 원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금감원 검사 착수 요구 (금융위원회)
- 개인 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검토 포함한 금융당국의 강력 대응 촉구 (금융위원회)
- 주식 시장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제안, 금융위원장의 유예 공식 입장 확보 (금융위원회)
- 성실한 가입자에게 피해 주는 '보험 사기', 유관 기관 공조 통한 적극 대응 촉구 (금융감독원)

김희곤 의원

# 국정과제 추진 / 거래시장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

## ▌주요 내용

### □ 국정과제 추진 :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 가시화

-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계획〉자료 입수/공개하고('22.9.5),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상급기관으로 산은 이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지적. 이에 금융위가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

### □ 거래시장 공정화

- **(플랫폼 등 공정거래)** (1)카카오T는 타사가맹 택시도 무료로 자사 콜을 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타사가맹 택시에 대해서는 콜을 차단했음을 밝히고, 카카오T가 제휴업체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조사해 제재할 것을 촉구. (2)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외국산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점은 7곳뿐으로 KT&G가 과거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해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사실상 독과점인 실태를 지적하고, 조사를 촉구
- **(가상자산 시장)** '1거래소-1은행' 규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강제되는 전형적인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여, 거래소가 어느 은행에 계정을 두는지에 따라 금융규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실정을 지적하고, 금융위가 '거래소-은행간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 규제를 일원화하도록 조치

### □ 금융소비자 보호 : 신종 보이스피싱 실태 고발

- "딸 휴대전화 고장/분실" 메신저피싱의 실태를 밝히고, 신종 보이스피싱을 대대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금감원의 의지와 역할을 주문

### □ 文정부 태양광사업 문제 고발

- 시중은행 14곳의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총 5조 6,100억원대 태양광사업 대출의 대부분인 90.5%가 변동금리로 금리인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밝히고,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
- 지난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로 훼손된 산림은 5184ha에 달함을 밝힘

송석준 의원

# 文정부의 정책실패를 짚고 윤석열 정부 성공위한 정책대안과 해법제시

## ▌주요 내용

### □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 신재생 에너지 카르텔 민원해결사 역할 밝혀내

- **(태양광 관련 피해)** '17~'21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 2,748건에 달하는 등 文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국민 피해양산 지적
- **(권익위의 태양광 민원분석의 편파성 지적)** 권익위의 태양광 관련 민원 분석 보고서를 입수, 태양광 발전 관련 홍보만 치중하여 태양광 관련 국민피해 민원은 외면했다는 점을 밝혀냄
- **(권익위의 새만금해상풍력 민원 해결사 역할 지적)** 권익위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폭리를 위해 발전원가 가중치 개선을 결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카르텔의 민원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

###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신속대응체계구축을 통한 서민고통 해결을 주문

- **(文정부기간)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 56%증가,** 선불충전업체 보이스피싱 310배, 주택금융공사 사칭 보이스피싱 39배 폭증 등 지적
- **(정책대안)** 불법사금융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및 신속 대응체계구축, 보이스피싱 예방홍보강화 및 대응 가이드라인구축 등 제시

### □ 文정부기간 어린이집·소아과 대폭감소 등 인구절벽에 대한 근본 대책주문

- **(상황)** 5년 동안 어린이집 9,139개 감소(연평균 1,828개 증발), 소아과 662개, 산부인과 275개 폐원 및 소아과·산부인과 모두 없는 지자체 16개 등 인구절벽으로 인한 출산·보육환경 급격히 악화 지적
- **(정책대안)** 저출생 현상 장기화로 인한 출산과 보육취약지원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요청

### □ 서민금융 및 민생경제의 사각지대 개선요청

- **(文정부기간)** 신용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 급증, 실손보험 소비자불만 3.3배 폭증, 해외리콜 음식료품 국내유통 18배 증가, 온라인 플랫폼 분쟁 9배 급증, ATM기 '21년 서울에서 635개 감소 등 노령층 금융접근성 저하 등 지적
- **(정책대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실손보험 분쟁 가이드라인제시, 해외리콜 차단조치 홍보강화, 온라인 플랫폼 분쟁처리 매뉴얼 수립, 은행 간 ATM운영공조체계구축 제시

유의동 의원

## 국민적 상식, 눈높이에 맞는 '상식의 회복'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실명제법을 이유로 불법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공개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함
- 안심전환대출 신청 2주 연장 조치에 대해 수요자의 현실적 필요를 담을 것을 주문함

### □ 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의약외품(마데카솔, 우루샷 등)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광고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 요구
- PLCC카드 경쟁 과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해 지적함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내 위치한 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여성건강관리 앱인 핑크다이어리가 일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중국 본토에 있는 법인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드러남
- 지적 이후 핑크다이어리앱의 개발사인 NHN측은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중국 본토에 위치한 법인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을 밝혔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황 파악에 나섰음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들이 해마다 책자와 CD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데, 43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정부나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발간비로만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윤상현 의원

##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특검 도입해 실체 밝혀야

### ▌주요 내용

### □ 가상화폐거래소의 비정상적인 구조

-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되는 코인의 상장과 폐지, 감시까지 가상화폐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구조
- 전통 자본시장과 다르게 가상화폐거래소가 한국거래소와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예탁결제원, 증권회사의 모든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없음
- 기존 가상화폐거래소 인가 취소 후 '0'에서 재검토 해야 할 필요성 있음

### □ 테라 사태 관계자에 얽힌 의혹들

- 신현성 테라 대표와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권도형 테라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국감 증인 불출석
- 지난 2019년 8월 7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에 신현성 테라 대표와 김서준 해시드 대표와 함께 전직 민주당 의원과 인사들이 함께 참석함
- 국민연금과 한국 벤처투자 모태펀드 등이 출자를 해서 만든 '그로스엑셀러레이션펀드'가 테라 공동창업주인 신현성, 권도형 대표가 주주로 있는 테라 관계사인 '차이홀드코'에 투자함. 보유 주식 규모는 약 1,700억원

### □ 테라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MZ세대

-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영끌 대출 후 코인에 투자한 MZ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미흡했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MZ세대에게 전가됨
- 지난해(2021년) 업비트 가입자 890만명 중 20대가 31%, 30대가 29%로 MZ세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윤주경 의원

##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 주요 내용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노동개혁 및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장 불법점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필요성 강조

□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 제재 중심의 하도급 대책에서 벗어나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구제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

□ 文정부가 대출총량규제를 명분으로 훈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시중은행을 압박하고 동시에 법정최고금리를 낮춘 탓에 대출취약계층의 제도권 대출 이탈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폭증했음을 지적

□ 가상자산 거래실명제 도입 후 국내 카드사는 가상자산 결제를 차단했으나, 해외거래소는 가맹점번호를 바꿔가며 국내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 은행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운영을 강화할 것을 요구

□ 카카오 화재사태를 계기로 비현실적인 전자금융사고 보고시간 기준을 재검토하고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책임이행 준비금을 상향 적립할 것을 주장

□ 갑질 방지 주무부처인 권익위 내부에서 갑질이 꾸준히 발생하고, 권익위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 제보도 다수임 지적

□ 6.25참전 유공자 중, 해외 무공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도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촉구

□ 국립묘지법상, 시신이 없는 최재형 선생, 유관순 열사 등에 대해 현충원에 가묘를 설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비대면진료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즉각 조치하고, 성공적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컨설팅 제도 요청

□ 헌법과 배치되는 통일연구원 입장에 대해 지적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윤창현 의원

## 태양광에 몰린 33.8조원... 예산·대출·보증 전수점검해야
## 디지털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 불공정도 1위...
## 투자자 보호는 낙제점

### 주요 내용

□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금액 27.4조원

- 태양광 발전에 정부 재정(전력산업기금) 12.1조원 지원
  - 12개 지자체(2.1조원) 점검 결과 2,616억원(2,267건) 위법·부당 확인
- 금융공공기관, 보증부대출 등 태양광 사업에 6.6조원 지원
- 은행 대출 5.6조원 중 담보초과 다수, 지방은행은 영업구역外 원정대출까지
- 사모펀드 3조 1조원도 태양광에 투자... 이지스는 이미 500억원 이상 손실
- 농협조합 3.6조원 등 상호금융 대출액도 6.9조원

□ 금융 대출 90% 이상이 변동금리 방식...금리급등기에 부실우려 가중

□ 태양광 보조금(REC價) 2016년 16만원, 현재 6만원으로 낮아져 수익성 악화

□ 장부상 담보(전,답,임야 등)는 있지만 매매가 어려워 회수가능성도 의문

### 주요 내용

□ 업비트의 디지털자산 시장점유율 80%에 육박, 독점적 지위 누리는 중

- 지난해 1인당 순이익 58억원... 국내외 경제사에 유례없는 실적 기록

□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된 업비트의 불공정거래

- ID위조·허위입금·자전거래·허수주문 등 시세조작하고 거래량 부풀리고
- 254조 규모 허수주문, 1.9조원 사기거래, 1,492억원 편취
- 인도네이사 법인 통해 편법 우회상장
  - 한국 거래 시작일에만 반짝 급등... 이름에 큰손들은 고점 exit

□ 5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 10개중 3개는 상폐…

- 1위 업비트의 상폐율은 47%에 달해... 투자자 보호 사실상 전무한 상태

□ 업비트-K뱅크 고객예치금을 대출에 활용... 업비트 年54억원 이자수입

□ 팔 때 안 팔리고, 입출금 멈추고… 3년간 접속장애 1위도 업비트

- 거래소가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광범위한 면책조항도 문제
  - 접속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주문폭주, 외주 시스템 하자 등으로 고객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성이 없거나 관리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보상안해

최승재 의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국정감사

### 주요 내용

**□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네이버와 다음은 제도 악용... 피해구제 미흡**

- 네이버와 다음(현 카카오)이 과징금 대신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몇백억에 달하는 상생기금을 자사 배너와 광고 등에 사용, 실질 피해구제 없어
-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점검 확인과 관리에 미흡,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후조치 필요

**□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사·가족회사의 인건비·방역물품 횡령 등 부당이익 취득 및 관광업협회 중앙회 아들회사 일감 특혜 적발**

- 코로나19로 여행업계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여행업협회 회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 및 가족이 설립한 방역회사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창출
- 인건비·방역물품 횡령까지 발생해 관련 부처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
- 관광업협회중앙회장의 자녀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중앙회의 수의계약사업 수주

**□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제복근무자들 예우 필요**

- 군인과 동일선상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한 경찰, 소방공무원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필요성 지적

**□ 흥국생명의 갑질 횡포, 보험설계사 처우개선 필요**

- 판촉용 볼펜 대금, 직원회식비용까지도 설계사 급여에 반영하는 흥국생명의 갑질을 포함해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환수수수료까지 납입해야 하는 보험설계사들의 현황 질의
- 부당한 보험설계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험대리점 전수조사 및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등 질의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 확대 필요**

- 매년 발생하는 금융권 횡령 사고대비 업무정지요구권 사용건수 0건 등 작동하지 않는 금융권 내부통제 지적 및 시정 요구
- 금리인하요구권의 저조한 수용률, 증가하는 불법사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장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되어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는 새출발기금이나 서민금융 상품 등 문제점 지적

**□ 여가위, 경단녀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수료자의 고용유지율 반등 필요**

- 새일센터 직원의 현원 관리 미비 및 수료자의 1년 후 고용유지율 50%이하 지적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의원

#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균형잡힌 정책 제언

## 주요 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 팩트체크넷 소유권 상실 사태 관련 '국고 손실' 소지 지적

- 국고 17억원이 투입되었고, 최초 공고문에도 국가(방통위) 소유가 명시된 방통위 '팩트체크넷' 플랫폼 소유권이 민간 조직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발각
- 방통위의 '국고 손실' 사태에 대한 국고손실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 및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 필요 및 기재부 차원의 사실 조사 필요성 질의

### □ 새 정부 부동산 목표 달성 위해 'LH 정원·조직 추가 감축'의 재고 필요성 지적

- LH는 이미 2021년 한해 정원 1000여명을 감축하는 고강도 슬림화 작업을 단행
- 그러나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추가 감축 추진되는 상황
- 새 정부 부동산 270만호 공급정책 등 LH의 사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력·조직 감축은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불가피
- 재정건전성 위한 '공공기관 혁신'도 중요한 과제지만 '부동산 공급정책'도 매우 중요한 역점사업. 정책 간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 있어
- 국민 주거복지를 위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LH 정원과 조직에 대한 추가 감축 조치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 지적

### □ 한국수출입은행의 'KAI 매각설' 관련, 국가안보 전략사업 리스크 지적

- 경남 항공우주산업의 상징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설과 관련해 총체적 부적절성 지적
- 대한민국의 국산 공군전력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KAI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대적 M&A 노출 등 국가안보 전략사업상의 리스크와 민간 매각 후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역사회 불안 등을 감안하여 매각은 전적으로 부당함을 강조
- 국가안보전략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KAI 대주주로서 수출입은행의 책임감 있는 행보를 주문



류성걸 의원

# 지난 5년간 문재인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국정감사

## 주요 내용

### □ 지난 문재인 정부, 재정 악화 심화되 〈기재부〉

-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8.7%,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지난 5년간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0.8%증가 '17년이후 증세는 없었음
- 기준 단순화 및 법률에 근거하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재검토

### □ 부(富)변칙적 대물림, 법령정비로 과세해야 〈기재부〉

- 상증세법 제42조의3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시도하였으나 법원에서 연이어 패소
- 법원은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만 과세가능하다는 입장
- 주식가치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 □ 가계부채 취약차주 통계누락 〈한국은행〉

- 현재 1인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대출에 포함되어 작성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주택 구입등)과 연계된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자영업자 대출상황을 관심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촉구

### □ 세금은 복잡하고 신고는 어려운데 신고지원 인력은 없어 〈국세청〉

- 국세청은 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금신고 지원인력을 배치운영중
- 그러나 비수도권지역에는 배치인력이 전무한 상황임
- 비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를 위해 신고지원인력을 비수도권 1급지 세무서에도 배치하여야 함

### □ 해외직구 반품문제, 국제물류센터(GDC) 활용으로 반품문제 해결가능 〈관세청〉

- 세관에 신고된 반품된 건수 약 10만건, 금액으로 1천억원이 넘음
- 반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직구 물품을 GDC에 보관한 후 재판매한다면 반품 물품의 폐기·해외 반송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김상훈 의원

# 親文정권의 실정 지적과 플랫폼 경제의 제도개선 제안

## ▌주요 내용

### □ 親文단체 자금줄로 전락한 정부 협동조합사업

- 기재부는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출연
- 文정부에서 임명한 2명의 기관장은 모두 親文 인사
- 수년간 16개 광역별 중간지원기관의 대부분을 親文인사 및 단체가 독식
- 기재부 협동조합사업 수행 단체 전반에 대한 감사, 나아가 외부감사를 통해 관련 단체의 특혜소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촉구

### □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 연루 '아태협', 부실회계 검증 필요

- 李경기도지사 재임시 주요 대북행사를 쌍방울과 연계한 아태협이 주최
- 아태협은 2018~2021년간 보조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40억원 넘는 돈을 유치하면서 상당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용처도 공시에 누락
- 아태협은 李대표의 대선당선을 위해 사전운동조직 또한 구성
- 아태협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회계 검증 및 직권 조사 요구

### □ 文정부, 카카오 독과점 길 열어줬다

- 지난 정부 시절, 카카오가 신청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62개 중 53곳이 (85.4%) 간이심사만 받아 독과점 판단을 우회
- 카카오가 늘린 62곳 중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만도 57곳(91.9%), 경쟁제한 완화효과 등을 위한 시정조치는 0건
- 네이버 또한 22곳의 기업을 늘렸는데 일반심사는 단 4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곳은 간이심사로 허가를 받았으며, 경쟁제한 관련 시정조치는 0건
- 플랫폼 시장 독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김영선 의원

# 문재인 정부의 방만경영·기후대응·세제개편 등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적

## ▌주요 내용

###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 작년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개 중 47.4%(161개)가 영업손실을 봤지만 14개 공기업 등은 적자 속에서도 기관장에게 7,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
-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건비가 7조2천억원 넘게 증가하며 정부의 목표 총인건비보다 최대 5조원이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적정 인건비 산출의 필요성을 강조
- 文정부가 52% 이상 증가시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40,000건, 부정수급액은 341억 가량 증가했지만 부정수급 회수율은 고작 67%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회수율 파악 시스템 구축을 요구

### □ 文정부의 허울 뿐인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 文정부가 올해 친환경차 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대대적인 탄소중립 예산 편성에 나섰지만 실제 보급량은 목표의 72.4%, 수소차는 고작 17.6%에 불과함을 지적
-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핑크빛 전망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원자력 발전량 등을 포함해 새로운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제기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2조 3,600억원 중 대형 R&D 사업(500억 이상)은 단 한 개도 없음을 지적하며 고탄소 산업의 환경전환을 위한 대형 R&D 확대를 촉구

### □ 공정한 세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 세계 최고세율 수준의 대한민국 상속세, 중소기업 승계와 대기업의 주가 조작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편 필요성을 지적
- 중국 전기버스 업체만 배불리기 해주고 있는 현 세제지원, 국내 산업과 기술력 보호를 위해 제도 개편을 요구
- 기획재정부에서 폐지에 가까운 개편안을 발표한 익금불산입 제도, 재벌기업의 감시체계를 위해 제도의 현행 유지 또는 제도 보안이 필요함을 지적

배준영 의원

# 윤석열 정부의 재정개혁, 확실하게 추진해야

## ▌주요 내용

### □ 지난 정권의 비정상의 정상화, 비상한 각오로 조속한 추진 촉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지표 변경과 전 정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코드인사 개편 등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시행 촉구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감세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및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통한 경제 선순환 강조
- 소비자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악영향 지속돼, 인플레 억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 □ 부처·기관의 잘못된 행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촉구

- 지난 5년간 국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0.5조원, 가산금이 1.1조원에 달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징수·환급 업무 개선 촉구
- 현행 조달제도 허점을 이용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부정 담합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 부정당 입찰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요구
- 대인 살상이 가능한 화약식 타정총 해외직구가 평년 대비 190배 이상 폭증, 홍보·안내 강화와 적극적인 예방 조치 필요성 강조
- 혈세로 지원한 대북 차관이 1.3조 원에 달하지만, 상환액은 1% 미만이며 이마저도 '08년이 마지막, 차관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

### □ 민생안정,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 강조, 저출산 지원에 활용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 제시
-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리적 위치를 떠나 저성장 지역과 섬지역 지원 필요성 강조. 양도세·종부세 1세대 2주택자 세제 완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ATM 감소로 인한 농어촌·고령자 금융편의 대책 마련 요구
- 조세채권으로 부동산 압류 시, 임차인에게도 통지될 수 있도록 개선 촉구

송언석 의원

# 文정부가 망쳐놓은 대한민국, 다시 바로 잡아야!

## ▌주요 내용

### □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과세 형평마저 해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적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집값 상승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음
- 특히 종부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59.3%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
- 이에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과세 형평마저 해치고 있는 종부세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금화 및 오용·남용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필요

- 문재인 정부 기간 내국세 증가로 인해 교육재정교부금이 5년간 65% 이상 증가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기금화하는 상황이 발생했음
- 게다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라는 정체불명의 기금을 만들고, 전 국민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 시국에 주택기금 조성을 통해 주택보증금 대출을 해주는 등 교육재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와 매우 어긋나게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

### □ 문제투성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총체적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지난 정부 시절 다수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의 공분을 샀음
-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0%대 '황제사내대출'까지 운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으며,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를 강제로 반영시키기 위해 평가 항목을 억지로 변경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유발시켰음
-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

윤영석 의원

# 문재인 정부, 경제 기초체력은 저하, 자산 양극화는 심화, 재정은 방만

## 주요 내용

### □ 국내 자본의 해외직접투자 폭증, 외국인 직접투자는 부진

- 문재인 정부 기간 중 해외직접투자는 314억불 이상 증가('17년 450억불→'21년 764억불)하였음
-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43억불 증가('17년 138억불→ '21년 181억불)에 그쳐 직접투자 자본의 순유출은 '21년 현재 583억불 이상임
- 국내기업활동 환경 등이 악화를 해외직접투자는 18년을 기점으로 폭증. 자본유출로 일자리 및 근로자 소득 증대, 분배 문제 등에 부정적 영향
- 단기적으로는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나 보다 장기적인 기업 경영활동 개선 로드맵이 필요함

### □ 문재인 정부 기간 중 계층별·지역별 가구순자산 양극화 심화

- 문 정부 기간 중 순자산 하위 20% 경우 순자산 실질증가율은 1%인 반면 순자산 상위 20%는 순자산 실질증가율이 28.95%으로 전 계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지역별 가구 순자산은 서울(38.5%), 부산(29.2%), 광주(22.2%) 등은 20% 이상 실질 순자산 증가율 기록. 반면, 경북(-10.3%), 경남(-5.2%), 충남(-8.6%) 등은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 실질 순자산이 감소
- 1차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실패로 자산격차가 심화되었으며, 하위 계층 및 제조업 중심 광역자치단체는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등 경제정책 실패로 하위 계층·지역별 자산 양극화 심화

### □ 문재인 정부 추경 중독의 결과, '18년~'21년 추경 8.3조원 실집행 못해

- 일자리중독 추경, 표리부동('19년 강원 산불 등 명목 5.8조원 편성, 실제 산불대응 예산 940억원)추경, 근거법령 미비상태 추경, 취약계층에는 엄격한 요건 적용 추경 등으로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은 8.3조원
-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며, 추경은 긴급한 필요에 의해 국가재정법 상의 엄격한 편성 요건을 갖춰야 함에도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과다
-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저해, 무분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 손실 발생

※ 문재인 정부 기간 국고보조금 ('22년 150조, 평잔 10.2조원)에 대해 은행에 한은기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

조해진 의원

# 민생 현안 중심의 정책 국감

## 주요 내용

### □ 32회 부동산세제 뜯어고쳤던 文정부…"종착지는 집값 폭등"

- 집값 안정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세제 관련법령만 총 32회 개정
- 기획재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관련법령 개정연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집값을 잡기 위해 총 6회의 '세제관련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법령, 소득세(양도소득세)법령 등 기재부 소관 부동산세제 관련법령을 총 32회 개정
- 집값을 잡을 목적이라면 수요에 상응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 □ 초고령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 불편을 최소화 할 방법 마련해야

- 최근 10년간 은행 지점·출장소 축소 비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20.7%의 점포가 축소됐고, 초고령 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스마트폰 조작이나 모바일.인터넷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 소외현상을 막을 대안책은 미비
- 지점폐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마련에 힘써야

### □ 조폐공사, C등급 받고도 성과급 잔치

-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도 성과급이 나가는 문제가 발생. 경영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으며 성과는 안 좋은데 성과급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인상
- 명목상으로 성과급인데 성과가 없는데도 성과급은 나가고 있음
- 조폐공사의 부채 총계는 늘어나고, 개인 평가도 떨어지는데 일부는 성과급이 인상되는 일까지 생기니 성과급 체계를 정리해야할 것

주호영 의원

## 새정부 성공을 위한 경제정책 설계, 정책역량 집중 당부

### 주요 내용

□ **국가경제 불안 속 경제 안정 대책에 정책역량 집중 촉구**

-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로 가계, 기업, 소상공인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체감이 가능한 경제안정 대책마련 주문

□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준칙 및 준예산 법제화**

- 문재인 정부 시절 증가한 천문학적인 국가채무(GDP 대비 46.9%)로 인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
- 재정준칙 도입과 중앙정부의 준예산 규정 법제화 주문

□ **저출산 대책, 직접 지원 가능한 수준까지 검토**

-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소모에도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 국면으로 진입
- 저출산 현상은 지역 사회 붕괴, 국가붕괴로 이어지기에 주요 선진국의 지원, 세제혜택 사례를 참고하고 직접 지원방안 등 적극적 대안 주문

□ **납세자 편의에 집중된 제도개선, 개혁 촉구**

- 가업상속조건, 국세행정, 세무조사, 조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불편 가중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세행정 전반에서 개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개혁안 주문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실패 비판 및 교권수호 노력

##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실패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및 사교육비 급증

-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5년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 폐지 예정 등 급격한 교육정책 변경과 수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은 교육정책의 신뢰저하 및 심리적 불안을 야기시켜 사교육비 폭증을 초래
-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등 경쟁과 서열화 방지를 빙자하여 지나친 평등 교육의 강요는 오히려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 기회와 교육의 질에 있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도시와 읍면동의 기초학력 측면에서 교육격차, 교육불평등 심화

### □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일선 학교의 교실에서 학생들의 수업 중 수면행위, 수업방해, 교사 지도에 대한 대항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
- 교권보호와 학습권 보호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써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원론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제도적 대비책 마련 촉구

### □ 선심성 현금 살포 등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 지적

- 학교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약 6,112억원 현금 살포
-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반해 교육청의 경우 학생수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함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지방세 연동 규정에 따라 교육청에 이전하는 전출금 규모는 매년 증가
-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권은희 의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 보완사항_교육질적변화 반영 필요성

## 주요 내용

### □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어 재정적 어려움이 상존함
- 대학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의 재정적 부담률은 절반에 못 미치고, 이를 대학회계가 부담하고 있어 학생 교육에 쓰여야 할 대학회계가 줄어들고 있음
- 학교법인들의 대학에 대한 재정적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대학회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지적

### □ 비교과교사 충원필요

- 비교과(보건,상담,사서,영양)교사는 현재 법정배치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비교과교사는 학교폭력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위생 및 안전교육 등을 진행, 교육의 질적변화의 대응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한편 2023년 채용공고 인원이 동결 또는 대거 줄어듦에 따라 그 대안마련을 촉구

### □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문제

- 2021학년도 각 시도별 학업중단율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일제히 증가하고 있음
-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및 학교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정은 부족한 현실
-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연계 지원 필요

### □ 고려인 학생 교육 지원 실태 점검

- 고려인 미성년자들의 급격한 증가세에 따른 고려인 마을 내 학교의 열악한 교육 상황 문제 (한국어 학급 부족, 학력 심의 업무 과다, 행정 인력 및 교원 부족 등) 지적
- 특별한 교육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모델(고려인 국제학교 설립) 제시

김병욱 의원

#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사다리 복원! 공정교육 회복!

## ▌주요 내용

### □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정책과 국정과제 이행

-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초등 전일제' 전국 확대 제안
- 의사과학자 양성위해 공과대학 중심의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하고 이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 촉구
-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적극 추진 제안
- 지방교육 경쟁력 강화위해 권역별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고교 다양화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제안

### □ 대한민국 교육 망친 이념편향 교육과정 바로잡기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 '6.25남침', '8.15독립' 반영 촉구
- 이념편향·역사왜곡 논란에 선 교육과정 연구진 명단 공개 촉구
- 고대사 비중이 16%에 불과한 역사교과서 개선 촉구
- 낙동강 방어전투 등 지역별 세부 6.25 전쟁사를 역사 교과서에 담을 것을 제안

### □ 제 식구 감싸기 바쁜 거대 야당의 폭주 저지

- 인명피해가 발생한 폭우 속 휴가 강행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적
- 5년간 강의 한번 없이 서울대로부터 8천여만원 급여 챙긴 조국 교수 비판
- 조국 딸 입학 취소 처분에 '가혹하다'며 조국 변호인인냥 하는 부산대 차정인 총장 지적
-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은 '수수방관'하는 야당의 '내로남불' 태도 비판

서병수 의원

# 문재인 정부 실정 점검 및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방향 제시

## ▌주요 내용

### □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 **(반도체 혁신인재 양성 목표의 실현가능성 점검)**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혁신 인재 **15만명(+ α)**을 양성하겠다고 했으나, 민간 기관의 12만 7천명 전망치 추계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의문이 있음 → 인재 양성 목표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반도체인재양성지원협업센터의 실효성 제고)**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는 정부, 교육계, 산업계 등과의 소통을 위해 출범했으나, 비밀유지의무 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실질적인 활동 및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 필요
- **(첨단 학과의 수도권 대학 편중 우려)** 지난 6월,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정원 증원)에 대한 의향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던 조사 결과(27개 대학)를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희망 인원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2배가 넘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방안(ex. 지역할당제) 마련 필요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졸속 추진

- **(특혜 의혹)** 한전공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과 제20대 대선 전 개교를 목표로 졸속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음 → 설립 과정 특혜 여부 조사 필요
- **(정부의 운영 부담 가중 우려)** 설립 및 운영 비용의 상당을 부담하는 한전의 적자, 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한전공대 운영에 대한 정부 부담 가중 우려 → 대학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및 국가 부담 경감 대책 마련 필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낭비

- **(선심성·전시성 사업)** 서울시교육청,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학준비금 20~30만 원 지급. 교육 콘텐츠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PC) 보급 등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낭비 → 교부금이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정경희 의원

## 문재인 정권發 좌파교육 폐정 질타 및 감사 실시 등 실질 개선 촉구
### 기초학력저하·졸속 좌편향 개정교육과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운영 실태 등

### ▌주요 내용

**□ 교육청-전교조 간 '진단평가 금지·지양 단체협약'실태 적발 및 학력평가 실시 요구**

-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 분석결과 세종·경남·전북·강원·제주·전남·충남·대전 등 8개 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평가 등을 금지·지양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적발. 해당 교육청에 학력진단의 필요성 인정하는 답변 받아내고, 학업성취도평가 실시할 것 요구. 후속조치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예정

**□ 문재인 정권이 졸속 추진한 2022 개정교육과정 전면 폐기 촉구**

- 좌편향 논란 빚은 역사과 개정안 내용 지적 및 포괄적 성교육 내용 담은 보건과 개정안의 위험성 지적. 졸속 추진한 2022 개정교육과정 폐기 촉구

**□ 교육청의 방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실태 지적 및 초중등·고등교육간 균형 잡힌 재정 투자 촉구**

- 본 의원실 분석결과 내국세 연동구조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급증, 작년 기준 5조에 머물던 교육청 적립금이 올해 약 15조 추가돼 누적액 총 20조 돌파. 현금살포성 정책으로 교육재정 방만 운영하는 교육감 행태 지적하고 교부금 구조 개편 통해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정투자 형평성 갖출 것을 촉구

**□ 문재인 정권의 역사 뒤집기, 좌편향 교육 규탄 및 시정요구**

- 초등〈사회〉교과 불법수정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前교육부 공무원 직위해제·중징계 의결 요구
- 교육현장 역사왜곡에 침묵한 국사편찬위원회에 항의 질의 및 공식답변 요구
- 동북아역사재단의 일제침탈·독도·위안부·관동대지진 등 대일 연구 편중 지적 및 날로 심해지는 중국의 역사왜곡, 문화침탈에 대한 연구와 단호한 대응 요구

**□ 교육계까지 뻗친 문재인 정권 한국형뉴딜 비리 적발 및 교육부 감사 요구**

- 국립대인 전북대 선민영 교수가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된 태양광·풍력발전 등 졸속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편승해 온갖 편법을 동원, 사업 수주 후 중국에 7천여 억원을 받고 기업을 매각한 건에 대해 교육부 감사 요구

**□ 문재인 정권 알박기식 인사채용 및 각종 비리 적발, 교육부 감사 요구**

-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김상곤-더케이호텔 재개발 관련 유착 의혹 관련 교육부 감사 요구
- 고성환 방송대 총장의 세금탈루, 겸직금지 위반 등 비위에 대해 교육부 감사 요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교원(조교수 장신) 내정채용 비리 의혹 제기 및 교육부 감사 요구

조경태 의원

## 우리 학생들을 챙기는 민생 국감

### ▌주요 내용

**□ 대학생들의 '천원 학식' 확대 실시 촉구**

- 고물가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식비부담 문제가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학생이 1천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이나, 대학들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전국대학 참여율은 8.3%에 불과함
- 교육부가 별도의 추가재원(매년 약 100억원)을 마련하면 전국 모든 대학에서 '천원 학식' 시행 가능
-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굶지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천원 학식'의 확대 실시를 교육부에 촉구

**□ 학교폭력, 강력한 처벌정책으로 뿌리 뽑아야**

-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 최근 5년간 청소년 자살자 수도 37% 증가. 청소년 자살이 학교폭력 증가 추세와 무관치 않아
- 최근에는 학생 간 폭력 뿐만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 중
- 학교폭력에 대한 교화주의·온정주의 정책으로는 뿌리를 뽑을 수 없어
- 학교폭력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최대 10년간 보존토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함

**□ 서울대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

-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 117㎡ 규모의 시진핑 자료실을 운영 중
-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전통문화까지 침탈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를 서울대가 자료실까지 만들어가며 운영 중인 것은 문제임
- 시진핑 자료실을 즉각 폐쇄할 것을 서울대와 교육부에 촉구

국민의힘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

## ▶文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 비리, ▶이재명 백현동 측근 비리 관련 ▶과기부 블랙리스트, ▶KBS 등 블랙리스트, ▶카카오 화재, ▶MBC 자막조작 및 원전 왜곡보도 등 국정감사

### 주요 내용

□ **文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과기부, NIA)의 비리와 부실한 보고서가 발각됐음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

- 과기부 산하기관 NIA의 디지털뉴딜 사업 예산의 비리가 발각되었고, 수행한 자문 결과보고서 수백개가 단 세네줄에 불과하여 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음으로 감사원 감사 및 실태조사를 촉구

□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비리 실체가 드러났음을 지적**

-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재명 측근 세력의 비리가 드러났음을 지적하며,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해준 최종 책임자는 결국 이재명이라는 점을 지적

□ **文정부의 과기부1차관, 혁신본부장이 KISTEP 전 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산하기관인 한국생명원 전 원장의 사망사건 재조사 촉구**

- 과기부 이진규 전1차관, 임대식 전 혁신본부장이 KISTEP 전 원장 사퇴 종용한 의혹을 제기, 또한, 한국생명원 고 장규태 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文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과기부 블랙리스트' 실체 조사를 촉구하였음

□ **윤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사적 발언(UN방문)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미국)이라는 허위 자막을 넣은 MBC에 대해 최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

- 방문진은 MBC의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MBC의 심각한 자막조작 보도가 있었음에도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시종일관 비호해주고 있음을 지적
- 이밖에도 MBC의 원자력 안정성 왜곡 보도 및 편파보도 실태 지적

□ **KBS, MBC, YTN에서 자행된 블랙리스트 실상 및 민노총이 장악한 노영(勞營)방송의 현실 폭로**

- 2017년 당시 민주당의 '언론장악 로드맵 문건' 지적
- MBC와 관련, 과거 한상혁 위원장의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 주장을 '공영방송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하여 질책

□ **카카오 화재와 관련하여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

- 카카오데이터 센터 화재와 관련 데이터센터 이중화, 이원화 미흡 및 재해복구 프로세스, DR(Disaster Recovery) 등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

권성동 의원

## 1. 우주정책연구센터 선정 점수조작 게이트 조사해야!<br>2.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및 MBC 대국민 보이스피싱!<br>3. 탈핵운동 외치는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알박기 인사 만연<br>4. 과학계 모래주머니 걷어내고 도약 이끌어내야

□ **우주정책연구센터 선정 점수조작 게이트 조사해야!**

- 우주정책연구센터 공모에 누리호 일등공신 항공우주연구원이 석연찮은 이유로 탈락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최종 선정되었음
- 과기연의 유치 신청서를 살펴보니, 제대로 된 목차는커녕 일부 항목은 공란으로 제출하는 등 전문성이나 연구성과 면에서 부실한 점이 많았음
- 최종 점수도 과기연은 87.6점, 항우연 83.2점으로 상세 점수표와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미제출 중
- 과기연 원장은 문미옥 전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으로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관여해왔던 과학계 요직을 역임해온 코드 인사임
- 당시 정권 실세 개입 여부와 즉각적인 자료 제출 및 과기부 자체 감사 촉구

□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및 MBC 대국민 보이스피싱!**

-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 혐의가 드러났음. 학교로 치면 부정입학, 정치로 치면 부정선거임. 최종 의결 과정에서도 승인 유효기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법 의결하는 등 재량권을 위반함
- MBC의 노골적인 자막조작개입 사건은 정언유착이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실수 발언을 덮어주는 등 편파·왜곡보도 심각성을 지적했음
- 방통위와 공영방송의 불공정·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

□ **탈핵운동 외치는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알박기 인사 만연**

- 원자력안전재단 임원진에 탈핵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로 채워짐
- 특히 김제남 원장은 '녹색연합'에서 일하며 정의당 탈핵특위 위원장을 거쳐 文정부 기후환경비서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한 대표적인 反원전주의자임
-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 고위공직 자리 차지는 혈세 낭비임. 책임정치 촉구

□ **과학계 모래주머니 걷어내고 도약 이끌어내야**

-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은 실력이 우선되어야 할 과학기술분야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음
-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필요한 연구인력 충원과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前 정부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블랙리스트 압박 문제 지적

김영식 의원

# 새정부 과학기술강국 도약 발목잡는 文정부 과학기술정책 탈피해야

## 주요 내용

### □ 블랙리스트, 정권말 알박기, 탈원전 등 과학기술계 전횡 대해부

- (블랙리스트) 문미옥 전 차관 등 관련자 감사원 감사 청구 촉구
- (낙하산) IPTV협회 사무총장(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 과속 낙하산 채용(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납부) 비판 및 과기부 산하 협회 낙하산 채용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정권말 알박기)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과거 행적(간첩 주요 포섭대상으로 '일심회' 판결문에 적시) 등 불투명한 국가관, 탈핵 활동 등 기관장 자질 부족 질타, 자진사퇴 촉구
- (혈세낭비) 文정부 역점사업 디지털뉴딜 총체적 부실 지적, 새정부 '디지털 전략'에 부합하는 정책 보완 촉구
  - 2년 연속 참여인력 80% 단기알바, 투입예산 대비 매출실적은 0.28% 불과
- (국민기만) 국민부담 외면하고, 5G별도요금제 승인한 유영민 前장관 비판
- (혈세낭비, 실적부진) 팩트체크 1건당 2088만원 예산투입, 펙트체크넷 사업 중단 촉구

### □ MBC의 편향·불공정 보도행태와 책무 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비판

- 윤대통령 뉴욕 발언 조작 등 공영방송 책무 저버린 MBC 대책마련 촉구
  - 방통위에 MBC의 규제 또는 민영화 등 해결방안 제안
-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망 무임승차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민주당 법안 우선처리 약속 번복 비판
- 원전 공포 선동하는 MBC 왜곡보도 비판 및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
- KBS 남북교류협력단 팀장 북한코인 투자 연루 의혹 외부감사 촉구

### □ 카카오 먹통 사태, 키오스크 불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촉구

- 카카오 데이터센터 이중화 미흡, 문어발식 자회사 확장, 독점 경영 비판
- 카카오, SK 등에 무료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안 마련 촉구
-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등 주요 프렌차이즈업계 키오스크 국민 불편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외 문제 지적, 개선 촉구

윤두현 의원

# 독과점 기업의 폐해와 문재인 정부의 실책 지적 등 민생·현안·정책 중심 국정감사

## 주요 내용

### □ 이동통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조치 촉구

- (5G)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제 구간 및 계층별 요금제 다양화 촉구, 결합 할인 등을 통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 방안 촉구
- (알뜰폰 및 자급제폰) 알뜰폰 허브의 자급제폰 파손보험 서비스 재개 촉구

### □ 거대 플랫폼의 우리나라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준수 촉구

- (구글) '앱 이용자 가로채기' 현상 지적 및 재발 방지 촉구, 국내 이용자를 위한 가족요금제, 학생멤버십 시행 촉구
- (넷플릭스) 미납 세금 추징 및 과태료 부과 지적, 국내법 준수 촉구

### □ 방통위 재허가·재승인 제도, 방송장악 수단으로 악용 지적

- 조건·권고의 양적 증가 및 방송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경영권 등에 관한 부당결부 조건·권고 문제 지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조건을 최소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대책 마련 답변 이끌어 냄

### □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

- MBC 윤석열 대통령 순방 발언 보도 및 PD수첩 재연 미고지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 공공성과 공정성 강화 대책 마련 촉구

### □ 문재인 정부 탈원전 5년, 원자력 분야 붕괴 현실화 지적

- (R&D) 원자력기금은 직전 정부(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약 732억원 감소, 원자력 R&D에서 유일하게 2배 가까이 늘어난 분야는 '원자력 해체 연구'
- (인재이탈) 문 정부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 자발적 퇴직자 중 76%가 원자력 관련 업무자임을 지적, 원자력연구원의 박사급 인력 유출 증가 지적
- 문 정부에서의 원전 생태계 붕괴 지적, R&D 예산 복원 및 인재육성 촉구

하영제 의원

#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한 정책개선 요구

## ▌주요 내용

###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천 항공우주청의 조기 설립 촉구

- GDP 대비 항공우주 전담 예산 부족과 G20 국가 중 유일하게 항공전담 기관이 부재한 실정 지적 및 개선요구
- 항공우주청 설립에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로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또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
- 사천 항공우주청 조기 신설을 위한 법안 정비 촉구

### □ MBC 조작 방송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재정공약회의' 발언에 대해 MBC는 아무런 확인 없이 임의로 '(미국) 국회'라는 자막을 추가함
- 이는 당시 회의의 성격, 발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보도임
- MBC의 공영방송 책무 망각, 국익 훼손, 공정성과 중립성 상실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 □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방지책 촉구

- 카카오 화재 사건 이후 먹통 사태가 나흘만에 해결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음
- 카카오는 국내외 187개의 계열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
- 카카오는 그간 사세 확장에만 몰두하여 데이터센터 등 시설 투자에 소홀했음
- 이에 데이터센터 투자 등 재발방지책과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함

허은아 의원

# 문 정부 정책 실패 지적하면서 정책적 개선점 발굴에 집중

## ▌주요 내용

### □ 문 정부 과학기술 정책, 생색만 내고 성과는 미흡

- AI 강국 도약 외쳤으나 글로벌 평가는 오히려 추락
- 180조원 생산 효과와 일자리 60만개 장담한 5G는 이제와서 측정 불가
- 사이버 보안 강화 내세웠지만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은 증가

### □ 제 할일 못한 문 정부 방통위, 원안위, 한수원, KBS, 방심위

- 방통위, N번방 막겠다며 국내대리인 도입한 후 3년간 자료 제출 요구는 단 6건, 작년 국감때 개선 약속하고도 텔레그램 사업자 대상 조치는 전무, 불법스팸 근절 강조했지만 정작 과태료 수납률은 부처 꼴찌 수준
- 원전 위험성 강조한 문 정부, 정작 IAEA 주관 원전 안전 운영 점검은 0건 → 4년마다 IAEA OSART 정기 점검 받기로 결정
- 한수원, 청원경찰 근로자가 근무중 CCTV 돌리고 원전 취수구서 낚시
- KBS 대북 라디오 방송, 문 정부때 제작·송출 지원예산 연 3억/13억 감소
- 방심위, 사이트 접속 차단 사실상 실무자가 전권 행사 → 내부 점검 도입

### □ 평등·공정·정의 외친 문 정부, 채용 비리에 자격시험 관리도 부실

- 한국연구재단, 타인 이력 도용 입사자 1년 넘게 적발 못하고도 과기부에 보고도 미실시 → 과기부 종합감사 실시 예정
-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시험' 4회 시행에 4회 모두 문제 오류 발생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예비합격자 부실 운영으로 억울한 피해자 발생, 자체 구제책 마련하고도 당사자엔 미 통보 → 당사자 안내 실시

### □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장애 보상 강조 및 통신업계 현안 지적

- SK C&C, 네이버, 카카오 CEO 회동 통한 선제적 보상안 마련 중재
- 소출력 중계기 제공, 망사용료 이슈 등 소비자 입장 반영 지적

홍석준 의원

## 文정부 과기분야 초토화·방송장악·탈원전 실정 빈틈없이 지적했습니다!

###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의 과학계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과학기술 분야 문제점 지적**

- 연구 현장에 일괄적용된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정부 출연연 등 과학계 연구성과 하락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
- 과학기술계의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과학기술 인재 선발 어려움 지적
- 신성철 KAIST 총장 등 문재인 정부 과학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직권남용 처벌과 대책 마련 촉구
- 과학기술혁신역량 수도권 편중 심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역센터 및 분원의 적극 활용과 지원 필요
- 데이터 안심 구역 및 데이터 특구지정 수도권과 충청권에 편중됨, 균형개발을 위한 지역 안배 강조

□ **방송통신위원회, MBC, KBS 등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강력 촉구**

- 강규형 前 KBS이사 부당해임 관련 문재인 정부 방송탄압의 피해자에게 사과 촉구
- 방통위의 채널A 보류 결정과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은 보수종편 찍어내기에 불과, 방송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종편 재승인 심사 지적
- 독립적인 방송 생태계를 위해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연장과 명확한 기준 필요
- MBC 경영진의 식구 챙기기 내로남불식 인사와 2017년 파업불참자 보복성 블랙리스트 인사, KBS의 비민주노총 해외특파원에게 자행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압력 지적과 공정한 인사를 위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 지역 방송(MBC) 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규제 혁신 필요성 강조

□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필요**

- 원자력 분야 산업실태 저조, 전공 인력 감소, 특허 출원급감 등 원전산업 경쟁력 추락
-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과 국내 입찰 기회 확대, APR+ 원전 신기술 활용을 통한 원전 기업과 생태계 강화 시급
-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설 전문가 위주의 전문적 체계적인 구조 마련 필요
- 급감한 원전 가동률로 원전 밀집한 경북지역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포함한 지방재정 6조 2,000억원 감소,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

# 윤석열 정부 외교통일분야에 대한 정책제언 및 야당에 의해 폄훼된 외교성과 부각 노력

## ▌주요 내용

### □ 통일부

- 북한 핵 도발 비례 대응해야
  -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비례 대응을 해야 하며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를 해제할 수 있음을 북한에 선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NATO식 핵공유도 검토해야함
- 탈북민 정착지원제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40대 탈북민이 서울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탈북민 정착지원제도를 다른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것
- 서해공무원피살사건 관련
  - 전 정부의 과오이지만 현 장관이 다시 유족을 만나 적절히 사과해야 할 것
- 북한 억류 국민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관련
  - 통일부는 이들의 국내 송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당장의 송환 협상이 어렵다면 가족 간 상봉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해야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대면 상봉 추진이 어렵다면 화상 상봉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 □ 외교부

- 대통령 정상외교 순방 관련
  - 야당이 대통령의 영국 조문외교를 외교 참사라고 폄훼하는 것에 대하여 상주인 영국이 우리 대통령의 조문에 대해 두 번이나 감사를 표했으며 영국 왕실과 정부가 요청한 의전 사항을 충실히 따른 모범적 조문을 강조
  -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을 야당이 굴욕외교이자 외교 참사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바로잡고 한일관계에 물꼬를 튼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
  - 또한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건너가 태극기도 없이 김정은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가 더 치욕적이라고 비판
- 시진핑 총서기 3연임 확정관련
  - 대한민국도 대중국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하고 당당하게 중국의 답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

김석기 의원

# 국익 훼손과 안보위기 자초한 문재인 전 정권은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라!

## ▌주요 내용

### □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허위와 거짓 선전·선동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故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에 참석해 영국 국민들로부터 감사인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3차례 만나 인플레감축법, 금융 정상화 협력, 확장억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관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으며, 문재인 정권 5년간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약2년 9개월만에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성공적으로 해외순방을 마쳤음
-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외교참사라며, 실체 없는 거짓선동과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 규탄
- 주변 소음으로 잘 들리지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자막을 달아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성 논란까지 있는 '인지유도 전략'을 펼친 MBC의 선동 규탄 및 철저한 진실규명 요구

### □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 이틀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 강력 규탄
- 국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한반도 운전자론, 북한 비핵화, 남북교류협력 등 굴욕적인 대북정책만 시행한 문재인 정권 규탄
- 문재인 정권이 국가안보를 외면했던 5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 된 문제점에 대해 냉철히 지적

### □ 해수부 공무원 '월북 몰이'조작에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역할 했나?

- 감사원 수사로 밝혀진 문재인 정권 당시의 외교·안보라인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
- 문재인 정권이 은폐·왜곡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최고책임자를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요구

김태호 의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고, 동북아 안보 위기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 주요 내용

**□ 대만 해협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 대비 필요**

- 시진핑 3기 출범, 2025년 통일 언급 및 대만 공격 가능성 대두
- 양안 갈등 심화할 경우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 회자
- 대만 해협에서 미·중 충돌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필요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

-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과로 한일관계 개선 징후 뚜렷
- 북한 전술핵 위협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증대
- 양국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 서해 공무원 실종 당시 국가도 실종
-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어떠한 구조 노력도 없어
- 국가안보실 주도로 '자진 월북' 몰아가기에 전념
-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강조

**□ 탈북민 정착보호시스템 개선 필요**

- 탈북여성 사망 1년 만에 발견. 탈북민 사각지대 여전
- 연락두절된 탈북민에 대한 보호 대책 등 탈북민 정착보호시스템 개선 필요

**□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지원 필요**

- 북한인권 외면 등으로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탈락 수모
- 미국은 북한 인권단체 지원, 우리는 거의 전무
-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협력 절실, 민간단체 지원 필요

안철수 의원

## 외교현안 中 국익과 보편적 인권강조, 과학기술 외교역량 증진, 국제기여 강조 및 합리적 대북정책 변화 촉구

### 주요 내용

**□ 외교혁명의 시대- 과학기술외교, 문화외교 등 전문영역 외교로 확대**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패권전쟁의 최대 격전장이 되고 있음
- 과학기술외교가 단순한 과학기술 협력을 넘어 국가의 주요한 외교정책 구현의 수단임
- 외교부의 과학기술외교 예산은 8억원, 과기부의 과학기술협력 예산은 연간 200억원임. 이것이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외교를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보여주는 수치임. 과학기술외교를 계속 등한시하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얽혀 나오는 신흥 외교안보이슈(반도체, 바이오, 사이버, 우주 등)가 나오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도태하게 됨. Fab4, IRA, 사이버, Bio경제 행정명령 등 어느 것 하나 과학기술이슈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음.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예산적 지원 촉구, 전문 인력 증원 등의 역량 강화를 촉구함.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사이버외교센터' 별도 설립을 촉구함

**□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상원조 ODA 기여 높여야**

-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경제기적을 이루며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치에 오른 우리나라는, 한때 해외원조를 통해 배고픔을 극복하고 교육과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여 이 자리까지 왔음. 이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함. 또한, 미래지향적 국제개발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차관급의 국제개발협력본부 창설하고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한곳에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부 전체의 슬림화/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제시했음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문제점 지적 및 이번 정부에서의 효과적 대북정책 제언**

- 북한은 세계관, 대남관, 대미관 때문에 우리를 대등한 협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음.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한다는 굴정적 자세로 일관했고 북한에게 이용만 당함
- 문재인 대통령이 9.19공동선언을 발표한 다음날 백두산에 올라가 손을 잡고 평화 쇼를 연출하고 있을 때, 김정은이 뒤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해 달라는 친서를 작성하는 등 장관에게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등한 협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인지 시킴
- 대북협상에서 늘 원칙에 충실할 것을 촉구 및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에 초점을 맞추는 대북정책 마련안을 제시했음

이명수 의원

# 대한민국 외교현장의 최일선 「외교부 인력」 및 「재외국민 대응」 점검

## ▌주요 내용

### □ 역대 정부 중 공무원 증원 최대였던 전 정부, 외교부 인력 증원은 미미

- 문재인정부기간 전체 공무원 증원은 약 12.7% 증가(13만266명), 반면 외교부 증원은 약 8.3% 수준…외교부 증원요청 반영률도 평균 약 2.13% 수준
- 지난 정부의 무조건적·단기적 공무원 증원 여파로, 현 정부 외무공무원 감축 요청 상황…**다양한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외무공무원 증원 필요**

### □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따른 외교부 인력 증원 필요

- 재외국민 증가, 비자발급 및 국제업무 관련 민원 업무 증가 대응 필요
- 글로벌 과학기술·기후변화·신성장 첨단산업 등 「전문 대응 분야」 증대로, 각 협약·현안 대응을 위한 **전문 외무공무원 확충** 필요
- **퇴임한 전문직업외교관의 충분한 예우 및 활용방안** 마련 추진 필요

### □ 재외국민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 1. 「재외동포청」 신설

- 해외 출국자 '11년 1,200만명→'19년 2,800만명 급증, 코로나 이후 증가 전망
- 안전사고 증가·재외국민 환자 국내이송 수요 증가 추세 대응 필요
- 재외국민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 필요… **재외동포청 신설 필요성**

### □ 재외국민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 2. 「소방주재관」 추가 신설

- (국제구조대 파견 실적) '97년 캄보디아 시작으로 16개국 17회 391명 파견
- (의료상담 실적) '20년 2,617건, '21년 2,577건 → 메신저 상담 급증
- (재외국민 응급환자이송 실적) '14년 432명 → '18년 1,015명 급증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소방업무 포함안되, 소방공무원 해외공관 파견 전무
- K-소방 진출 교두보 역할도 함께할 시범사업으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소방주재관 배치 추진 요구**

정진석 의원

# '외교참사' 가짜뉴스 전부 논파한 정진석 "교각살우 말자"

## ▌주요 내용

### □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굴욕외교? 사실 아니다

- 북한은 지난 5년간 시간을 벌어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적재하는 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지적
- 북한의 IRBM발사에 대해 국회 규탄 결의안이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
-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북한 핵 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을 촉구

### □ 영부인 꿈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

-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순방이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성사됐다는 기존 청와대 설명과 달리 '한국 외교부의 의사 타진이 먼저 있었다'라고 지적
- 한국 측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고, 불과 사흘 만에 수 억원의 예비비까지 처리해서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

### □ 외교 참사? 민주당 억지에 의한 국익 자해 참사

- 文 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3박 4일간의 중국 순방에서 10끼 중 8끼를 혼밥을 하고, 우리 측 취재기자가 중국 공안들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것을 '외교 참사'라고 지적
- 文 전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면전에서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고 면박을 들은 사실을 거론하며, 이러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지적
- 尹 대통령의 비공식적이고 멋쩍은 혼잣말을 침소봉대하여 외교문제로 비화시키는 행태는 온당하지 못하며, 국익 자해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

하태경 의원

## 외교부 및 통일부 감사

### 주요 내용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선전선동부 경문협 저작권료, 아태협의 만수사 그림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중 법·제도 미비로 자금동결 불가
- 2020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가 있었으나 바뀌지 않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
- 외교부에 제재 이행을 위한 대상 파악 및 유엔 제재위 보고를 위한 후속조치를 주문

□ **한국형 핵공유 전략 마련을 위한 한미핵공유협의체 신설 필요**

-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태도 지적
- 외교부에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발전시켜 '한미 핵기획협의회(가칭)' 를 신설하는 등, 한국형 핵공유정책 필요성을 제기

□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지원사업자 즉각 지정해제 요구**

-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대북송금 의혹에 남북교류협력법, 외국환거래법, 5·24 대북조치 위반사항임을 지적
- 통일부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해제 등 신속한 조치를 당부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국방위원회

이헌승 의원

# 방위사업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고 민방위 관련 법령 정비

## ▌주요 내용

### □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법 제정 필요

-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조달과는 성격이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일률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당사자간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고,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함
- 이후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여 방위사업계약 특성에 맞는 계약법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106번 “첨단전력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구조 마련” 이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

### □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체계화 촉구

- 2017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시험평가 데이터 조작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제도상 데이터 기록을 개발주체에게 일임하여 조작을 막을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무기체계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체계화를 촉구하였고,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시험연구원에 부서를 신설해 시험평가 미가공 자료를 저장하여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하고 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 민방위 착오 편성, 법령 및 시스템 정비 필요

-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이 민방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 착오로 인해 이들이 민방위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는 등 국민의 혼선을 초래
- 이에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2022년 10월 28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음

신원식 의원

# 文정부가 무너뜨린 안보 태세 재건

## ▌주요 내용

### □ 文정부의 안보 실정 지적

- 현무-Ⅱ 낙탄 사고는 文정부 대북 굴종의 결과임을 강조.(9·19 군사합의로 인한 마차진 사격장 폐쇄 → 인구밀집지역 인근 미사일사격장(강릉) → 국민 위험, 불편보다 북한 심기를 우선한 결과)
- 北 상선 NLL 침범 및 방사포 도발 관련, 9·19 군사합의 이후 北이 NLL을 인정해 평화 수역을 설정했다는 文정부의 거짓말 지적
-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생도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가치관과 직결되는 전쟁사, 군사전략, 북한학을 필수과목에서 배제한 비정상적인 교과과정 개편 지적
- F-35A 정상작전 개시 이후 비행불능상태, 특정임무불능상태 총 234건 발생, 수리부속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文정부 시절부터 지적된 F-35A 기관포 실탄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지적

### □ 북핵 위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촉구

- 북핵 대비를 위한 범정부적·종합적 대비태세 구축 필요성 강조. (美 9·11 테러 1년 뒤 국가 차원의 종합 대비책 마련 (블루프린트, ’02.9.17.))
- 핵전 민방위로의 전환 필요성 지적 (국가핵심시설·국민대피시설 방호기능, 군조기경보·민간경보시스템 실시간 연동, 국가급 전시대비 훈련 실시 등)

### □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 지적

- 최근 5년간 착수된 312개 사업 중 45개 사업이 과도한 작전운용성능(ROC) 설정과 시험평가 등으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음
- ROC 과도 실책정 관행 및 시험평가 제도 개선 촉구

### □ 정예 병역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촉구

-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작성 및 분석 미실시 지적
- 병역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병역특례 제도 재정비 필요성 강조

김기현 의원

# 강력한 국방을 통한 대한민국의 안보 확립

## ▌주요 내용

### □ 한국형 핵공유 시스템 도입 및 미사일 주권 회복

- 미국의 전술핵에 의한 전쟁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술핵은 한반도 밖에 두되, NATO 핵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운영 촉구
- 미사일 사거리 증강 및 탄두 위력 보강을 통한 미사일 주권 확립 촉구

### □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점 지적

- 일방적인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합의 위반 사항 지적 및 굴종적 군사합의의 문제점 지적

### □ 여성 군사 기초 훈련제 도입

-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위급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화생방훈련, 기초적인 총기사용방법 등 생존훈련과 기초 군사훈련 필요성 촉구

### □ 저출산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점 지적 및 대응 방안 마련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발생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장래 병력 자원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Army-Tiger 강화 및 보충역 자원 최소화를 통한 미래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 □ 방탄소년단 군입대 촉구 등 공정한 병역 의무이행 문화 확립 촉구

- 글로벌 문화 컨텐츠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병역 의무의 평등한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하여 병력 특례 및 대체복무 제도 최소화 촉구

성일종 의원

#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안보 정상화 해야

## ▌주요 내용

### □ 한미일 해상훈련은 국익을 위한 것, 친일 국방으로 매도 말아야

- 문재인 정권 한미일 3자훈련 15회, 한·일 참여한 다국적 훈련 18회 실시함. 또 '98년 김대중정부, '07년 노무현정부때 자위대함이 국내에 입항된 바 있음. 또한, 대잠전 훈련에 관한 합의도 '17년 10월에 이루어짐
-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독도에서 185km, 일본 본토에서 120km 위치에서 실시되어 독도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해군은 정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에만 매진해야!

### □ 9.19군사합의 유연하게 해석해 전력약화 방지해야

- 문정부는 남북군사합의를 과도하게 해석해 마차진 사격장 폐쇄했으나 윤 정부에서는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고도 마차진 사격장에서 사격훈련中
- 서북도서 해병대도 효율적인 훈련방안 모색해야 할것

### □ 육사·3사 '6.25 전쟁사' '북한학'은 다시 졸업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 육군사관학교('19년) 3사관학교('21년)는 6.25 전쟁사, 북한학을 졸업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교과과정을 변경함
- 사관학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임. 국가관·안보관 형성에 반드시 필요한 6.25 전쟁사, 북한학 등은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해야

### □ 사이버작전 수행 인력 예산편성 및 확충해야

- 한국은 북한보다 사이버 공격능력이 뒤쳐짐. 북한의 사이버인력은 6,800여명에 달함에도, 현 사이버사령부는 1,000여명에 불과
- 우리 군이 육성하고 있는 사이버 전문사관 149명 중 장기복무 선발자는 총 9명
- '사이버전문인력 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이버 전문수당' 등을 신설해야

임병헌 의원

# 문재인 정부 추진 주요 정책·사업 문제점 지적 및 대책 주문

## ▌주요 내용

### □ 文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軍 안보 공백 실태 지적

- 문재인 정권 5년간 우리 軍에 대한 중국 IP 해킹 공격 매년 급증
  - ▲2017년 3,986건 → ▲2018년 5,444건 → ▲2019년 9,121건 → ▲2020년 1만2,696건 → ▲2021년 1만1,600건
- '17년부터 '22년 6월까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 811건 발생
  - ▲감시카메라 고장 380건, ▲광망 감지시스템 고장 313건, ▲통제시스템 고장 118건 등
- 최근 5년간 군사보안 위반 군인 총 1,795명, 장교가 1,213명으로 전체 비중의 67.6%
  - 군사보안 위반자 수 연도별 ▲2018년 395명, ▲2019년 307명, ▲2020년 492명, ▲2021년 295명, ▲2022년 306명, 직급별 ▲장교 1,213명(67.6), ▲준·부사관 450명(25.1%), ▲군무원·연구원 65명(3.6%), ▲병사 67명(3.7%)
- 文정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안일한 대응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 공백 초래 지적

### □ 반복되는 군대 내 범죄 근절방안 마련해야

- 文정부 시절 '병사 휴대전화 사용' 사업 도입 후 휴대전화 사용 관련 형사입건된 범죄 총 1,436건(도박, 사기, 디지털 성범죄 등)
- 지난 2018년 각 군 성폭력 사건 접수 83건, 올해 들어 10배(855건) 증가
- 각 군에서 발생하는 형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 수위 높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책 마련 촉구

### □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 전면 점검 필요

-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우리 軍 '3축 체계' 강화로 실효적 억제력 확보 및 필요시 전술핵 배치 검토 필요성 제기
- 北 지속적 도발 시 우리 軍 '3축 체계' 시현으로 대응 의지 과시 필요
- 현무-2c 미사일 발사 실패, sm-2 미사일 불량품 문제 등 유도탄 전수조사 요청 및 불량품 개선대책 수립 요청

한기호 의원

# 北 핵공격 가시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 ▌주요 내용

### □ 北 '핵무력 법제화' 공포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마련

- 북한의 핵공격 가시화에 따른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內 '국(局) 단위' 핵 전담 대응 조직 필요 촉구
- 軍 교육 시, 핵전하 대비방법에 대한 실질적 교육 강화 마련 필요
- 국민안전을 위한 '북한 핵 위협 대비 정부종합대책' 마련 촉구
-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에 있어 북핵 대비 방안 반드시 마련 촉구
- '2022 국방백서' 발간 시 北 핵전력 반드시 포함 필요
- 무장해제에 앞장선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군사적 영향 재논의 필요

### □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및 한미동맹에 의한 연합작전 공고화

-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절차 개선 및 예산 확보 필요
- 연합사 해체가 포함된 전작권 전환 추진 중지 촉구
-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사드(THAAD) 추가배치 및 美 MD 체계 가입 검토
- 한·미·일 대잠훈련을 비롯한 동맹, 인접국과의 연합작전체계 구축
- 연합작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전술데이터링크 사업에 대한 철저 대비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전훈을 바탕으로 전투발전 要

- 我 대통령 전용 헬기와 특전사 침투용 수송기에 대공미사일 방어장비 장착 사업이 지연돼 敵 미사일 공격에 취약 발견
- 北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 화승총)에 대응하여 검증된 장비 조기장착 필요
- 이에, 敵 휴대용 대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DIRCM(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조기 장착방안 마련 촉구
- 北 두루미 및 무인타격기 등 공격용 UAV에 대한 관제능력 확보 필요

국민의힘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의원

# 문재인 전 정권의 실정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 재조명

## 주요 내용

### □ 행정안전부

- 재난피해에 지원제도가 주거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농·어민의 피해 현실,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 '지원금액 현실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요구함과 동시에 「재난안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 물관리일원화, 하천사업 지방이양 등 사업의 특성과 부처 간 정책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지방하천 정비가 크게 후퇴한 점을 지적, 치수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원활한 치수를 위한 행안부의 노력을 요구

### □ 인사혁신처

- 공직사회의 정체, 부족한 처우 등 공무원 조기 퇴직자 증가의 원인을 짚어보고 하위직 저연차의 봉급·수당 인상 등을 통한 보수 현실화와 처우개선을 요구

### □ 경찰청

-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재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경과를 검토
- 최근 5년간 국내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10~20대 사범은 1.5배 증가, 외국인 마약사범 3배 증가,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마약범죄 단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
- 스토킹 범죄, 친족간 성폭력 등에 있어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속한 분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

### □ 소방청

-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초고층 건축물 화재, 최근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이터센터 화재에 있어 소방청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체계 개편과 장비개발, 규정 현실화를 주문
- 높은 공상비율에 처한 일선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체계와 인사제도 개편,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인상 필요성 제기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원인으로 여심위 조사기관 등록 기준이 낮아 기술력과 전문성이 없는 조사기관의 난립 및 최근 편향된 방송인의 조사기관 등록에 대해서 여론조작·왜곡 우려 지적

### □ 경기도

- 이재명 전 경기지사 당시 평화부지사를 재임한 이화영이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쌍방울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지적

김용판 의원

# 文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감사와 대책 주문

## 주요 내용

###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문제점 지적(행안부)

-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공익성과 거리가 먼 좌편향·친북성향 활동을 지적
- 비영리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의 위원 선정과정에서 위원을 셀프로 추천하고, 자기 단체를 선정하는 등 '셀프 특혜' 방지 필요성 강조

### □ 사기정보분석원 국정과제 추진 필요(행안부, 경찰청)

-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부처 간의 칸막이가 이를 저해하고 있는 현실 지적
- 이에 사기 범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기정보분석원'의 설립 필요성 및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 강조

### □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배상, 행안부의 적극적 관심 필요(행안부, 진화위)

- 군·경에 의한 희생과는 달리 인민군, 좌익세력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은 현실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에게 배상이 불가능함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북한군 등에 의한 희생을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으로 바꾸어 신청하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따라서 배·보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절대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김웅 의원

# 불법·특혜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 5년! 특혜는 내 편한테 몰아주고, 정치보복에는 불법 행위 총동원!

## 주요 내용

### □ 행안부) '에디슨모터스' 文정권 비호 아래 보조금 지원 받고, 주가조작 사태까지 초래

- 조잡한 기술로 전기 버스 팔아 막대한 보조금 챙겨온 '에디슨모터스', 文정권 비호하에 전국적으로 영역을 확대. 허울뿐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 정책 탄로. 쌍용차 인수전으로 주가조작 의혹, 정부·지자체의 정밀 합동 감사 촉구

### □ 선관위) 그때그때 바뀌는 선거 현수막 문구 기준, 유명무실한 자체 감사 비판

- 법규 운용기준 변경해 선거 현수막 문구 등 정치적으로 조정한 정황 비판
- 자체 감사 기구 독립성 강조하며 선관위 공무원 임용 허용한 꼼수 지적

### □ 경찰청) 공수처 수사 담당자도 패싱하고 통신사찰 주도한 경찰

- 공수처 민간인 통신사찰 주도한 'A경정' 불법 행위 지적. 경찰의 조기원대 복귀 조치 등 비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
- 성남 FC 사건 후원금에 관한 자금 추적 완료 여부 및 부실수사 문제 지적

### □ 서울시) 박원순의 에디슨모터스, 공공무상급식 불법·특혜·압력 의혹 점검 촉구

- 시 보조금 3년간 417억 받은 중국산 전기차 조립회사 '에디슨모터스', 품질하자, 리콜 계속되는데도 차량성능 점수 최상위 등 의혹 투성
- 희망살림 설립자, 공공급식 체계 좌지우지해가면서 재정부담 등 문제 속출 지적

### □ 경기도) 특혜·비리 의혹 난무, 경기도는 은폐에만 골몰

- 이재명 치적 사업 '배달특급'의 수상한 입찰 의혹. 특혜·위법 추진과정 지적
- 에디슨모터스, 라임자산운용과 밀접한 관계있는 수원여객에 부적절하게 전기버스를 납품한 의혹

### □ 대전시) 바닥 드러낸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부실 투성이 지적

- 막대한 예산 쏟아 붓고도 혜택 줄여가며 '폰지사기' 비판 직면한 지역화폐 현실을 지적하며, 지자체 재정 고갈로 인한 대책 마련 촉구

###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유명무실 소방차 강제처분 현실화 고민해야

- 성능인증 받은 급기댐퍼, 성능인증기준 없는 배출댐퍼와 연동해 무용지물
- 5년간 불법 주·정차로 19건이나 진입 지연돼도 강제처분은 단 1건에 불과

박성민 의원

#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文정권 비판

## 주요 내용

###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정부패

- 부실했던 성남 FC수사 반성하고 백현동 수사 등 빈틈없는 수사 촉구
- 이재명의 기업특혜 및 세탁 도운 핵심비리 단체임을 공개, 서울시의 관리업무 배임 지적 (비영리법인 '희망살림')
- 일주일 만에 끝낼 성남시 부정채용 수사 24개월 동안 안한 이유 지적

### □ 文정권 失政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 사업효율화 및 개선방안 촉구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강행한 서부·경남 KTX 적자대책 세우고 적시추진 촉구
- 탈북어민 호송, 경찰특공대 규정 위반에도 나몰라라한 서울시경찰청 지적
-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본예산 0원 집행, 말로만 침수피해 대비
- 선관위, 감사원 감사 통해 선관위 개혁 종결지을 것 요구 ('소쿠리투표')
- 자치경찰위원회, 비전문성 및 알박기 위원장 인사 개선 촉구

### □ 민선7기의 방만한 행정 운영 지적

- 민선7기, 망가뜨린 살림 및 알박기 인사 스스로 거취 결정 (울산, 경남)
-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구조화 촉구 (서울)
- 김경수 지사가 만든 도정, 슬기롭게 대처할 것 (경남)
- 확장기조 멈추고 건전재정 위한 정책 수립 할 것 (경기)
- 오영훈 제주 도지사 친인척 사적채용 지적 (제주)
- 전임 민주당 시장들의 무리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계획 지적 및 대책 수립 요청 (대전)

### □ 기타정책질의

- 대통령기록물 보호 예외, 반출사본 반납.폐기 관리 부실 지적
-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여비규정 정비 및 수당 현실화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선거사무지시 실현할 것
- 소방헬기 50% 노후화, 산악전문 소방차 전국 9대 산불진화에 역부족 지적
- 피해자 신변보호 정책, 현실은 정책따로 현장따로 지적
- 아동안전지킴이 채용신체 검사서 비용부담, 현행법 위반 시정 요구
- 119구급대 운용관련 문제 지적 및 대책마련요구

장제원 의원

# 文정부의 실정 비판과 정치편향적인 국가(시·도)경찰위원들 지적

## 주요 내용

### □ 행정안전부

- (재난재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형 화재·침수 등 포함 각종 재난재해 피해와 현황을 살피고, 제도 개선이 미비해 여전히 대형 재난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지 점검
- (시민단체) 행안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피고, 1) 보조금 지급 심의 위원회가 본인 단체에 보조금 지급한 '셀프 심사' 지적 2) 보조금 수령한 시민단체의 성격과 지급처 문제 지적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 미비) 지난 3년 간 총선 – 대선 – 지선을 거치며,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진행했는지 확인한 결과 선거관리부실을 밝혀냄
- (선거 관련 여론조사 문제)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선거' 관련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선관위 등록 여론조사 업체마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법개정을 통해 여론조사 문제 해소 예정

### □ 경찰청

-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지적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대선 및 지방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적 성명서·칼럼 작성 행위 등 『경찰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문제 제기
- 경남 자치경찰위원장, 과거 김경수 前지사 후원회장 이력 등 정치적 편향 우려 지적 및 울산 자치경찰위원장 '불법낙선운동'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등 시도자치경찰위원 정치적 중립 우려 사례 관련 문제점 지적

전봉민 의원

# 국민 안전 도외시, 이권 카르텔 형성한 문재인 前 정부 실태 폭로

## 주요 내용

### □ 文정부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사업으로 국민 안전 위협, 실태 파악 촉구

- 2022년 8월 7일 강원도 횡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산사태 발생 1명 사망
- 산림청 통해 확보한 '원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
-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산사태 위험시설 실태점검 촉구

### □ 서울 도심 태양광 시설, 박원순 前시장 최측근 이권 카르텔 형성 지적

- 박원순 前서울시장 시절 최측근이었던 비서실장, 민생정책비서관, 대외협력보좌관들이 자신들이 만든 협동조합에 서울시 태양광사업 일감 몰아줌
- 이들이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착복한 보조금만 70억원에 이름
- 이밖에 태양광사업 불법하도급, 사후관리 위반 보조금 먹튀, 정기 검점미실시, 불량 부품으로 인한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 등 지적

### □ 이재명표 제2 대장동, 현덕지구 사업 특혜 의혹 제기

- 2020년 12월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평택 현덕지구를 민관합동방식 추진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문제점 지적되었으나 원안 의결 처리됨
- 선정된 컨소시엄 업체 대표, 이재명 팬클럽 발기인으로 참여 정황, 수사촉구

### □ 무리한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국민 부담과 갈등만 고조

- 이재명 대선 공약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결국 패소, 도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대형로펌 수임료만 수억 예상
- 표만 의식한 무리한 공약으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 이재명 前지사 사과 촉구

### □ 53억원 들인 文정부 주민참여조례시스템, 이용자 없어 유명무실 지적

-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은 지역주민이 직접 조례에 참여, 文정부 국정과제임
- 文정부는 53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리 소홀로 시스템을 이용한 조례 청구건수는 22건에 불과, 서명수 부족으로 폐기 사례도 발생
- 국정과제에 함몰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예산 낭비 초래, 개선 촉구

정우택 의원

# “문 정부 안보경찰 예산 20% 줄이고, 박원순 서울시는 시민단체 퍼주기 10배 늘렸다”

## 주요 내용

### □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 ‘시민단체 예산 퍼주기’

-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예산은 지난 2012년 119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2021년) 1139억9600만 원으로 약 10배 증가
- 박근혜 정부 시절(2012년~2016년)과 문재인 정부 시절(2017년~2021년)까지 양대 노조에 지원된 예산은 각각 9억1200만 원, 69억9600만 원으로 7배 이상 증가
- 또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도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38억4000만 원, 문재인 정부 때는 51억 2400만 원으로 1.3배 가량 증가
- 철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한 엄정한 징계조치,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해선 사업구조조정 필요

### □ 문 정부, 경찰에 대공수사권 넘겨놓고, 안보경찰 20% 줄여

-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안보수사 비 경력자들이 안보경찰 지휘부를 장악하고, 안보경찰 예산은 2017년 대비 2021년 현재 22.7%(84억원) 감소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2017년~2021년 5년간 112명에 불과함.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2012년~2016년 438명에 비해 75% 줄어듦
- 안보수사본부 신설, 예산 및 인력보강 등을 통해 안보수사 부문 강화 필요

### □ 제2기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6·25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편향성

- 올해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계획(4억9080만원 예산)에 따르면, 유해발굴 예정 지역 7곳 모두 우리 군경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확인
-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어 제 2기 위원회도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이 한 건도 없음을 지적
- 향후 조사를 통한 유해 발굴 확대 필요

조은희 의원

# 지역화폐-낙하산 인사 등 문재인 정부 5년 난맥상 질타

## 주요 내용

### □ 지역화폐 부실한 현장관리 실태 질타 및 국비 전액삭감 타당성 주장

- ‘현금깡’ 등 전국 지역화폐 부정유통 적발 사례 2,702건 확인
- 일부 지자체, 허위로 단속 결과 꾸며 제출하는 등 실태 관리 미흡
- 발행·유통·관리비용 대비 사업효과 낮다는 연구기관 지적 잇따르는데 문재인 정부 3조원 국가 예산 살포, 문제 질타 및 행안부에 실태 조사 촉구
- 행안부,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용 실태 점검 조치하겠다고 밝힘

### □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의 비위행위 특정감사 촉구

-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으로 인한 근무태만과 측근 감싸기 인사 전횡 문제 지적
- 소방청에 특정감사 실시 촉구, 11월 중순 특정감사 시행 예정

### □ 선거보전금 먹튀 방지법 개정 필요성 지적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국고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 경상보조금에서 이를 회수케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발의
-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 기소로 정당 보전금 434억 반환 여부 주목받는 가운데 법 개정 필요성 질의
- 선관위, “실효성 제고 수단될 수 있다”며 취지에 공감

### □ 박원순 전 시장 대북코인 논란 지적

- 박 전 시장의 ‘대북코인사업’ 연루 의혹 확인 및 사법당국 조사요청 촉구
- 서울시, 문제 있을 시 수사 요청 검토하겠다고 조치 계획 밝힘

### □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 필요성 제기

- 김치찌개 백반 한 끼 값에 못 미치는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비 실태 지적
- 충북, 경북, 광주, 제주 단체장 급식비 현실화 필요성 공감, 개선 동의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의원

# 전 정권 비판을 넘어 대안과 방향 제시

## 주요 내용

### □ 비장애인체육 팀성남FC,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주식 무상 양도 사실 밝혀내

- 2019년 12월, 성남시체육회가 보유하던 성남FC 지분 65%를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에 '무상양도' 했음을 지적
- 장애인체육회 중 비장애인 체육팀 보유한 곳은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유일
- 성남FC 관련 수사 자료 유출 막기 위한 의도인지 철저한 감사 및 정상화 촉구

### □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훼손된 매장문화재 지적

-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개발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다수 훼손 지적
- 고분이 완전히 사라진 지역, 청자·백자 파편이 나온 지역 등 피해 심각
- 과중한 태양광 업무로 인한 실무자 실수, 공사 시간에 쫓긴 사업자 등에 기인한 문제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전수조사 촉구

### □ 문체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촉구

- 방송 통해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도 인지 못하는 문체부 안전사고 관리 시스템 문제 지적, 문체부 설명보도자료 이끌어 냄
- 시행령 개정 통한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및 사고 현황 상세 공개 촉구

### □ 해외관광 리셋 계기, 관광대국 목표로 새 출발 해야

- 코로나로 큰 타격 입은 관광업종 손실보상과 관광 인력 재확보 위한 국가적 지원 요구, 문체부 즉각적인 지원 대답 이끌어 냄
- 엔데믹으로 해외관광 리셋되는 시점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대국으로 거듭나도록 범정부 차원 대응 제시

###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늘려 K-콘텐츠 강국으로

- K-콘텐츠 세계적 입지 공고화 위해 다각적인 영상콘텐츠 지원 확대 촉구
- ▲미국: 장르별 ▲프랑스:투자규모별 ▲영국: 손실발생 해도 지원 중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특례적용 대상 확대·제작 투자 세액공제 법안 발의

김승수 의원

# 문체부의 부실한 관리실태 비판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방안 개선 촉구

## 주요 내용

### □ 넷플릭스, 3년간 국내에서 1조 넘게 벌고 세금은 고작 59억원

-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음
-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지급과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보상금 지불 촉구

### □ 정치가 체육에 개입하여 엉망이 된 성남FC

-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 성남FC 후원금을 모아 자신과 측근들을 위해 사용하였음
- 대한체육회는 체육인들을 보호하고 정치가 체육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

### □ 문체부 산하 뉴서울CC 전임대표의 해임과정 재조사 촉구

- 8인의 특별회원들은 5일전 사전예약과 1회(4인) 15만원으로 연 1,920회를 예약 가능
- 혜택 축소를 추진한 전임대표를 특별회원들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민주당 정치권 실세 등을 동원해 이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있음
- 전임대표 해임과정에 대한 재조사와 특별회원들의 권한 축소 촉구

### □ 한국관광공사, 코로나 여행업계 고사에도 탁상행정과 성과급 잔치

- 해외관광객은 94.5% 줄었는데도 해외홍보에 600억원 쏟아부은 탁상행정
- 코로나로 여행업계가 고사하는 상황에서도 성과급 240억원 잔치

### □ 文정부 숙박쿠폰 사업, 10대 무인텔 출입에도 사용

- 문재인 정부시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할인 쿠폰사업 중 20대 미만 사용이 8,893건 확인됨
- 미성년자 혼숙과 파생되는 범죄 및 피해를 막기위해 제도정비 촉구

### □ 문화재청의 문화재 부실 관리 및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 촉구

- 군부대내 문화재는 방치수준,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촉구
-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 촉구
-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가 지방은 과도한 만큼 꼭 필요한 수준의 보호구역을 설정하도록 개선 필요

김예지 의원

# 정쟁이 아닌 정책·민생 중심의 국정감사

## ▌주요 내용

###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법정법인화 필요성

-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장애예술 활성화'를 실효성 있게 실천해야 함을 강조
- 현재 장애예술인지원법상 전담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원을 법정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지적

###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강조

- 경남 김해 고인돌 훼손문제, 김포 장릉 아파트 사건 등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문화재 훼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역량 부족이 있음을 지적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인력 중 전문성을 가진 학예사가 전체의 17.3%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등 문화재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

### □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 강조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장애인과 고령자 관광 지원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요구

- 화면해설방송, 폐쇄자막, 수어영상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개선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콘텐츠 접근성 강화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 □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청사 건립 지연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인 국립장애인도서관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관이 중심이 되어 독립청사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



이용 의원

# 文정부 5년으로 망가진 문화·체육·관광 정책 지적 문화예술체육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대안 대시

## ▌주요 내용

### □ 학생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만화진흥원 '윤석열차' 사건

- 지난 文정부 5년간 '언론보도', '풍자', '연설'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 지적
- 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의 비리, 원장의 노조탄압, 인사권 남용 등 기관의 부정부패 사실 적발 및 개선책 요구

### □ 북한에 수조원 규모 영화 촬영 스튜디오 계획 감사 요구

- 영진위의 2018~2022년 4년간 예산을 들여 문성근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북한에 수백만평, 수십조원 규모의 남북영화촬영소 건립 계획을 발견하여 지적함

### □ 文정권 당시 임명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의 비위 적발

- 국립전통예고 교사의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범죄 감싸기
- 수천만원 비용의 국외출장을 빈번히 나가는 등 국악·무용 등 전통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를 비리 기관으로 전락시킨 문제 지적. 근본적인 개선책 요구

### □ 비현실적 '文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 지적

- 혁신위 권고안의 주중대회 참가금지 등 부작용 개선 요구
  - 졸속 혁신위 권고안으로 인한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문제 지적 및 이에 따른 고교 진학 포기 등 부작용 지적
  -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스포츠 권고안 '수정안' 마련을 위해 종목 단체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조

### □ 무너진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 육성 방안 마련

- 전 정부 5년간 12%나 줄어든 '전문체육'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병행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지시
  - 지난 5년간 하계·동계 올림픽 성적 추락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촉구
  - 현실에 맞는 국가대표 훈련수당 지급 체계 개편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실업팀 창단지원금 및 운영비 지원 관련 정책 대안 제시

### □ 北바라기, '위장 평화' 사업 지적

- 한국관광공사, 5년간 평화 관광 관련 사업 257억원 투입 문제 지적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50억원 규모의 'DMZ 평화 행사' 및 한반도관광포럼 개최 문제 지적 및 실질적인 평화를 위한 사업추진 요구

배현진 의원

# 5년간 은폐된 文정부의 실정과 무능, 철저한 감사로 국민 앞에 밝혀내야

## 주요 내용

### □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방문의 예산 사적 유용 및 규정 위반 문제 철저히 감사해야

-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청와대 해명과 달리 인도가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이었던 것을 밝혀냄
- 당시 3일 만에 긴급 마련된 예비비 신청내역과 순방 결과보고서에 '타지마할' 일정이 전무한 점을 드러내, 예산 사적 유용 문제 제기
- 대통령 없이 대통령 휘장을 사용한 김정숙 여사의 규정 위반 문제와 국가재정법 위반 회피해 예비비로 전용기 비용을 충당한 청와대의 예산 편법 사용 의혹 질타
- 문체부의 감사 및 국고 사적 유용 발견 시 예산 환수 등의 적법한 조치 요구

### □ 22조 북한 SOC 지원 담긴 '文정부 서울-평양올림픽 제안서' 감사 촉구

- IOC의 사실상 유치 불가 판정에도, 오세훈 시장 당선 6일 전 IOC에 유치제안서를 긴급 제출한 점 지적
- 유치제안서에 일방적인 대북 지원 등 UN 대북제재 위반사항 포함된 점(5G 구축망 등 SOC 지원, 평양 재개발 계획 등)에 대한 문체부 감사 요청. 문체부 장관, 감사 필요성 공감

### □ '급여 오류 은폐', '승진 특혜 의혹' 등 文정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사 문제 감사 촉구

- 직원 급여 2,600여만 원을 적게 지급하고도 국회·기재부에 보고 없이 은폐한 당시 文정부 콘진원의 국고 횡령 의혹 지적
- 인사팀 승진 몰아주기 및 인사자료 수기관리 등 총체적 인사 실태 질타
- 2년 연속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답변한 콘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문체부 장관의 감사 이행 확답 받아냄

### □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존 훈련지원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연구 실적에 도움되는 선수만 선별 지원해 대다수 국가대표는 지원받지 못한 현실 지적
- 시각장애인 선수들에게 영상 피드백, 중증장애 선수들엔 VR 훈련을 시키는 등 장애인 국가대표 과학훈련지원 실태 질타
-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데이터 독점구조 전면 개편 촉구

황보승희 의원

# 전 정권 편파·부당 특혜 의혹 집중 분석

## 주요 내용

### □ 언론진흥재단, 올해 방송영상기회취재지원 사업 62.5% MBC에 편중 지원

- 〈방송영상기획취재지원사업〉, MBC에 편중 지원. 2020년 8건 중 2건(25%), 2021년 23건 중 9건(39.1%), 올해 24건 중 15건(62.5%) 지원. 3년 평균 47.3%
- 반면 SBS, MBN, JTBC, YTN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해 공정성에 의문 제기
- 현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대한 문체부 감사 요청

### □ 한국문화정보원장 연봉 편법 인상 및 박양우 전 장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묵인 의혹

- 2016년 기재부 지침인 직책수당의 기본급 산입을 미이행. 2020년 뒤늦게 직책수당을 기본급에 넣기로 했으나 홍희경 원장 지시로 직책수당 부활
- ①기재부 지침 위반 ②직책수당 인상(80만원→120만원)후 기본급여에 산입, 결과적으로 연봉 인상 ③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지적(전임 원장 2명 급여 누락)
- 문체부 감사 요청

### □ 김영준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측근에 커피숍 임대 특혜 제공 의혹

- 2018년 상암동 DMS 1층에 제한경쟁 입찰(커피숍). 1차 유찰 뒤 기본시설 제공 조건 내건 뒤 ㈜휴플러스 낙찰. 콘진원, 입주공사비(3억3천만원)지원
- 월 임대료(당초 1,200만원)를 4차례 인하. 최종 62.5% 할인 혜택
- ㈜휴플러스 정해정 대표는, 김영준 전 콘진원장과 함께 문재인대선 선거로고송 제작한 정해익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 정해익은 ㈜휴플러스의 사내이사로도 활동
- 문체부 감사 요청

### □ 연합뉴스의 출연금 편파 지원 및 방만 경영 심각

- 연합뉴스가 13년간(2010~2022) 지급받은 정부구독료가 4,367억원
- 뉴스통신진흥회,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연합뉴스로부터 과도한 출연금 받아내 文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인·학자에게 편파 지원함
-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특파원을 운영하는데도 연합뉴스의 우크라이나 관련 기사 3천 건 중 독자적으로 취재 보도한 기사가 거의 없음
- 출연금 편파 지원 및 방만 경영 개선 위해 연합뉴스 예산 조정 필요

국민의힘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

# 농어업과 국민안전 내팽개쳐놓고 실정 은폐·조작에만 급급한 文정권·민주당

## 주요 내용

### □ 양곡관리법 입법폭주 자행한 민주당, 文정부 실정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

- 文정부 시장격리 실패로 쌀값 폭락하자 실정 덮으려 입법폭주 강행한 민주당
-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초과생산과 재정부담만 늘리는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
- 민주당은 농업 파탄 양곡관리법 즉각 철회하고 지속 가능 쌀 산업 경쟁력 제고 해법 마련 동참해야

### □ 文정부 입맛에 따라 월북으로 조작된 서해 피격 사건

- 감사원 조사 결과 사건 증거 조작, 은폐한 '짜맞추기 수사' 사실로 드러나
- 반성은커녕 '감사원 서면조사는 무례한 짓'이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
- 조작에 가담한 관계자들 철저히 수사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이뤄져야

### □ 불공정·적폐의 중심에 선 마사회, 文정부 알박기 회장이 사퇴로 결자해지하라

- 불공정한 임대 입찰 문제가 이어지는데도 이를 방치한 文정부 마사회
- 회장이 상임감사 재직 시 감사실 부하직원은 본인 연루 의혹 셀프감사 후 은폐
- 상임감사 자질 부족, 황제승마 함께하고 근무시간 술판 벌인 임원 감싸는 적폐 회장

### □ 어민과 바다를 외면한 文정부·민주당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정책

- 文정부 해상풍력 확대 발표 이후 무분별한 입지선점으로 어업활동 피해 발생
- 민주당은 어민 참여 배제하는 '풍력발전 촉진법안' 통과 의지 피력
- 해상풍력기 설치 시 어업활동, 해상교통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촉구

### □ 매년 증가하는 밀입국 사건, 알고 보니 文정부에서 항만 보안장비 설치기준 완화

- 朴정부 항만보안 강화에 따라 줄어들던 밀입국 사건 文정부 임기 말에 폭증
- 보안장비 중복설치 의무규정에 위배되는 지침을 보안성 검토 없이 시달해
- 보안장비 설치기준에 대한 전문가 검증 및 필요시 보안장비 예산지원 필요

안병길 의원

# 식량안보 골든타임 허비·서해 공무원 월북조작 등 文정부 5년 농해수 분야의 총체적 실정을 바로잡다

## 주요 내용

### □ 식량안보 위기 자초한 文정부 실책 지적 (농식품부)

- 文정부 5년간 방치되어온 국제곡물 위기경보지수 활용도 제고·비축식량 폐기량 축소·해외식량 공급망 예산 확대 등의 제도 개선 촉구

### □ 2030 부산엑스포 개최부지 침수대책 全無 (해수부)

- 공항, 도시철도, 골프장에는 있는 우수유출 피해 대비 저감대책 수립 의무가 2030 부산엑스포 개최부지가 있는 항만지역에 대해서는 없는 점을 지적

### □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책임 규탄 (해경청)

- 월북의사 판단 당시 선박 내 슬리퍼·구명조끼·인권위 판단 등 주요 요인을 해경이 월북조작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던 해경의 정치적 행태 비판

### □ 위태로운 산지 태양광, 안전 경사도 초과율 55% (산림청)

- 文정부 당시 산지 태양광 난립으로 인해 수천 헥타르 산림이 파괴된 동시에, 절반 이상의 산지태양광이 전문가들이 제안한 안전경사도보다 느슨한 기준으로 허가된 문제를 지적 안전실태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 □ 적폐청산 외치던 마사회장의 내로남불 (마사회)

- 전문성없이 적폐청산만 내세우며 임기말 알박기로 임용된 마사회장이 정작 마사회의 방만 경영을 방관하고 있는 혁신 대상임을 지적. 공정과 상식의 국정철학과 반대에 선 마사회장 스스로 거취표명을 촉구

### □ 해상 풍력 난립 속 존재감 없는 수협 해상풍력 대응지원단 (수협)

- 여의도 827배 이상 면적이 해상풍력으로 덮일 상황에서 어민 피해 방지 위해 출범한 수협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의 활동이력이 미비한 점 지적

이달곤 의원

#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종합감사

## ▌주요 내용

### □ 대규모 항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방안 마련 촉구

- 진해지역 신항 건설시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36,208톤(2020년) ⇢ 111,176톤(2050년), 무려 307% 상승이 예측되며 손해비용은 2.05조에 달함
- 진해 신항 개발에 앞서 항만으로 인한 대기오염, 대형트럭으로 인한 소음, 정어리 떼죽음과 같은 해양오염 등 항만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
- 또한 배후지역 주민 지원과 보상 재원으로 컨테이너세(지역자원시설세)도입 필요

### □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폐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30년 시장격리비용은 5,170억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30년 시장격리비용은 1조 4,042억원으로 전망(8,872억원 증가)해 재정부담 폭증
- 현재 행정부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재화의 '매입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는 법률은 전무함. 다른 농·어·산물 가격하락 시 정부 재정으로 시장격리를 요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

### □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은폐 의혹 집중 추궁

- 50대 남성이 북한에 가기 위해 20도의 수온에서 38km 수영해서 이동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함에도, 文정부 시절 해양경찰청이 월북의 의도를 먼저 상정하고 수사를 실시. 종국에는 '월북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 □ 문재인 정부 함량미달 알박기 인사에 대한 사퇴 촉구

-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18년 적폐청산위원장 재직 당시 '정유라 승마특혜지원'을 적폐라고 비판. 그러나 감사위원 재직 당시 13개월간 승마코치를 대동하고 '황제승마'를 받는 '내로남불'식 행태와, 공익제보자 탄압 의혹에도 文정부에서 한국마사회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마사회장으로 재직 중임을 지적하고 사퇴 촉구

정희용 의원

# 국민 안전 최우선·대안 제시 '정책국감', 민생 기반·사회적 약자 배려 '공감국감'

##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권 실정 부각 및 알박기 인사 비판

- **(쌀값 안정)** 2021년산 쌀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재정 낭비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업파괴법'-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비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文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故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하려고 했던 점을 지적하며, 당시 해수부의 소극적 대응과 월북으로 짜 맞춘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 지적
- **(文정권의 정규직 전환·임기 말 알박기 인사)** 정권 초 무리하게 추진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친인척 채용 비리 등 부작용 문제 환기 및 임기 말 총 59명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단행을 비판하며,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의 보은성 인사에 대해 지적

### □ 국가·국민 안전 최우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성 증가에 따른 노후 수리시설 안전성 문제 점검 및 방재 성능 강화 촉구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선제적 예방)** 8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 추세인 점을 지적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막기 위한 전략적인 예산 수립 촉구
- **(공공기관 데이터 관리)**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농해수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마련 촉구
- **(2050 탄소중립 이행 점검)**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이행 계획 목표 달성의 현실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로 달성가능한 연도별 탄소 감축 계획 제시 촉구

### □ 민생 기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국감'

- **(장애인 권익증진·취약계층 정보접근성 보장 등)**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웹 접근성 인증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이행 계획 수립 촉구
-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대)** 도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촉구

최춘식 의원

#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를 저격하다

## ▌주요 내용

###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 저격

- 현재 민주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으나, 이는 문재인 정권 시기인 올해 4월 기획재정부도 반대한 법안임
-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기재부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음
- 또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비용추계조차 제출하지 않았음

### □ 문재인 정권이 은폐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 추적

- 故이대준씨 동료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故이대준씨는 생전에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고 발언했으며, 해당 동료는 "월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
- 또한 故이대준씨는 실종 전날 '사랑하는 아내에게'라는 제목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음
- 한편 故이대준씨가 탄 무궁화10호는 故이대준씨 실종 당시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 원인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 당 '태양광비리특위' 위원으로서 염전·수상·산지 태양광 문제 제기 앞장

- (염전) 문재인 정권 5년간 여의도 면적 2.7배 규모 염전이 태양광 설치 명목으로 폐업·폐전
- (수상) 2018년 농어촌공사는 15조원 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
- (산지) 문재인 정권 당시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허용, 문재인 정권 5년간 산지에 세워진 태양광·풍력 규모가 축구장 면적의 710배 육박



홍문표 의원

# 문재인 정부 역대 최악의 농어업 성적표와 '친중·친북' 굴종 참사 지적

##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농업농촌지표를 통해 농업 홀대·무시 지적

- **문재인 정부 실패로 인한 쌀값 대란, 윤석열 정부에 적반하장식 책임전가**
  -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시장 과잉 방출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쌀값 하락 유발
  - 홍문표 의원, 의무자조금 조기 도입, 조사료 및 타작물 재배 지원 해결책 제시
-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중독, 농지 훼손에 앞장선 농림축산식품부**
  - 문재인 정부의 사업대상지 60% 이상, 여의도 면적 35배의 농지가 훼손
  - 태양광 개발사업으로 인해 작물 생산량의 7.3~20.3%가 감소함
  - 식량안보와 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 보전 정책 마련 요구

### □ 친중·대북 굴종 참사로 지켜내지 못한 해양, 보호하지 못한 국민

- **'북한 바라기'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 수사에 무너진 피격 공무원의 명예**
  - 북한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명확한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월북' 몰아감
  - 실종된 지 10시간이 지나도록 확인 및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어업지도선의 CCTV는 모두 고장 난 것으로 확인
  - 문재인 정부가 숨겨온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유가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 요구
- **문재인 정부의 중국몽,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참혹한 어업인의 삶**
  - 문재인 정부 5년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8배 증가, 5,072척에 달함
  - 불법조업 직·간접적 손실액은 연평균 1조 2,000억 ~ 2조 5,000억으로 추정
  - 국고 귀속으로 文정부 배불린 불법조업 담보금 670억을 어민에게 돌려줄 것으로 조치 요구
- **문재인 정부 대북제재 위반 북한 선박의 국적세탁소로 전락**
  - 최근 3년간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북한 선박으로 둔갑한 사례만 총 10건
  - 文정부가 지닌 5년간 대북 유화정책에 목메는 사이 뒤에선 국내 해운업체들의 '대북제재 위반'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남
  - 대북제재 의심 선박 단속 점검 및 선박 적재물품 단속 매뉴얼 및 전담부서 전무에 대한 개선 조치 요구

국민의힘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

# 文정권 탈원전·신재생 위법성 및 친정권 인사 불법 특혜지원 폭로

## ▌주요 내용

### □ 文정권의 위법 추진된 탈원전이 전기·가스요금 폭탄의 주범 지적

- **(산업부)** 내외부 법률자문 통해 탈원전 위법성 인식하고도 강행·은폐
  - 文 탈원전 선언 후 원전 공사중단·신규원전 취소 등 법률 자문
  - 적법하게 추진하는 원전 중단·취소는 위법하다는 자문 받고도 강행
  - 법무공단 7건, 외부 5건 등 자문받고도 국회 누락제출 및 고의은폐
- **(가스공사)** 대선 직전 무역수지 흑자 위한 LNG수입 고의 급감 의혹
  - 올2월 천연가스 수요 많은데다 가격까지 하락했는데 수입량 급감
  - 가스공사와 산업부의 조직적인 자료 제출 거부 행위
- **(한국전력)** RPS 의무이행비율 25% 상향 시 신재생 보조금만 11조원
  - 무리한 신재생 확대추진 따른 전기요금 급등 불가피해 합리적 조정要

### □ 文 친정권 인사 밀어주기 불법 특혜지원 의혹 제기 ☞ 감사·수사 필요

- **(중진공·에기평)** '쌍용차 주가조작 의혹' 에디슨모터스 특혜 지원 의혹
  - 중진공 : 성장공유형 정책자금 지원 규정 바꿔가며 129억 지원
  - 에기평 : 文 탔던 태국형전기버스 R&D 20억 지원 했지만 실적 전무
- **(산업부·석유공사·에기평)** 文절친 송철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특혜 지원
  - 공약수립부터 국가·에기평R&D 전폭지원, 안되자 석유공사 자체 추진
  - 동해앞바다 서울면적 2배규모 외국 자본·발전기 도배 국부유출 우려
- **(중기부)** 서울시·중기부 제로페이 일감몰아주기 지원 등 혈세 낭비 지적
  - 581억원 투입 제로페이 가맹점 152만개 중 결제 '0' 96만개 (63%)

### □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민생 안정에 주력

- **(중기부)** 한국판뉴딜 스마트공장 보급 눈먼돈 3.5조 투입, 文방문기업 특혜
- **(중기부)** 대기업 불공정 갑질 지적 - 카카오 선물하기 배송비 강제부담
- **(중기부)**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편의점 강타 및 한계기업 급증
- **(공영홈쇼핑)** 방송 수수료율 조작·가짜 국산참기름 판매 늑장 환불 지적
- **(특허청)** 중소·중견 해외지재권 보호 IP-DESK 마구잡이식 예산집행 지적
- **(무보)** 고금리에 중소 수출기업 리스크 확대에도 보험 가입율 26% 불과



구자근 의원

# 산자부 7,000억원 AMI 사업, 각종 문제점 및 사업특혜

### □ 문재인 정부, 아파트 계량기 교체사업 졸속 추진

- AMI 사업은 전국 1,000만호의 아파트 중 500만호의 수검침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임
- 2020년 당시 코로나 추경을 통해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AMI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

- 스마트계량기의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으로 국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무리하게 진행되었음
- 특정업체에게 사업을 몰아주어 2020년 1차년도 사업비 282억원의 실집행액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에도 특정업체에게 몰아줘 특혜의혹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해당 특정업체가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 제안서와 실제 협약서간 차액 77억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비롯해 사업집행의 문제점을 지적

### □ 사업 특혜 및 예산낭비, 몰아주기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정

- 본 의원실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최근 감사원은 산업부의 AMI 사업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산자부에서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AMI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자체감사 및 예산검토 등의 후속작업에 나서기로 하였음

권명호 의원

# 탈원전 등 정책실패로 국민피해 가중시킨 문재인 정부 날카롭게 지적

##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국민피해 가중된 점 부각시킴

- 문 정부에서 조기폐쇄된 월성1호기 손실비용 7277억원 국민 혈세로 메꿔야 하는 점 최초로 밝힘
-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전력구입 누적 손실이 10.8조원에 달한다는 산업부 추계를 최초로 밝힘
- 탈원전과 주52시간제로 인해 신고리 5,6호기 건설비가 4천억원 늘어난 점 지적
-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홍보한 자료에 대해 산업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

### □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피해 신랄하게 비판

-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적립보다 지출이 많아졌고 비리의 온상이 된 점 지적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촉구
-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식 신재생 확대 정책으로 2034년까지 제주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액 1조2,600억원에 달하지만 한전은 보상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점 최초로 밝힘
- 文정부 이후 태양광 설비 6배 늘었지만 피크기여도 오히려 떨어진 점 지적
- 현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묻지마식 지원으로 불법 태양광 대출 등 다양한 비리가 발생한 점 지적하고 에너지공단 이사장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

### □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민생국감에 힘 써

- 한전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률검토를 한 점 최초로 밝히고, 조속히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
- 소상공인 기금 대출 금리 2배 올랐는데 36%가 변동금리인 점을 지적하고 고정금리 전환 등 이자경감 대책 마련 촉구
- 올해말 일몰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장촉구하고 중기부 장관 필요성에 적극 공감, 일몰 연장법안 발의 예정

김성원 의원

# 전 정권 적폐 및 난맥상 바로잡은 정책국감

## 주요 내용

### □ 文정권 임기동안 독버섯처럼 퍼진 적폐 정리

- 정권 입맛따라 변하는 산자부 정책
- 역대 최악 적자에도 오마카세·한우 등 법인카드 펑펑 쓴 한전
- 과도한 한전공대 재정 지원(1조)

### □ 탈원전, 태양광 등 일방적·이념기반적 정책 실패 지적

- 탈원전으로 인한 엉터리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 및 전기요금 인상
- 중기부 태양광 업체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118억원 지급
- 기술보증기금 태양광 업체 특혜 보증 의혹

### □ 공공기관 방만·부실경영 실태 고발

- 중기부 산하기관, 본인이 제도 만들고 본인이 수령하는 셀프사내대출
- 연구도 안하고 연구비 수령하는 중기연구원의 자율연구제도 지적
- 사회적 거리두기 마친 시점에 재택근무용 노트북 지급, 직원은 재판매

### □ 국민혈세 낭비 질타

- 태양광 발전 업체에도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
- 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증가(에너지빈곤 개념 제안)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채권 회수율 최악

### □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심 전달

-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소상공인 피해 미진한 대응 지적
- 대선 앞두고는 살포, 대선 끝나니 환수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일반 주유소업계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는 알뜰주유소 제도

노용호 의원

# 에너지 백년대계·중소소상공인 기살리기 실정을 고발하고 민생은 살폈습니다.

## ▌주요 내용

### □ (탈원전) 文정부의 무늬뿐인 재생에너지 확인제도「녹색프리미엄」전면 재검토

- 전기는 원전·LNG·태양광 등 생산방법에 따라 구분해 사용할 수 없음. 하지만 文정부는 돈을 내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기를 골라 쓴 것처럼 둔갑시킨,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2021년도부터 도입해 684억 원(전체 99%)을 민간 기업 주머니에서 충당
- 실현가능성이 낮은 RE100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UN,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하고 있는 CF100으로의 에너지정책 대전환 촉구

### □ (미래에너지) 수소연료전지는 에너지복지

- 농·산·어촌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면 발전소의 가스관을 활용해 도시가스 공급이 용이함
- 이에 수소발전 투자심의 시 경제성과 에너지복지 관점으로 검토 필요

### □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맹탕 인센티브 개선 촉구

- 현재 중기부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기업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가점, 대출한도 상향 등 6가지 인센티브 항목이 이미 다른 제도에서 운영 중인 혜택으로 실효성이 낮음

### □ (소상공인)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No Show) 피해구제 필요

-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 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19년~'22년 노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주 간 분쟁 접수 건수는 총 282건에 달하나, 사업자 구제는 단 한 건도 없음
- 소진공이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피해 접수, 보상방법 안내 등 구제 방안을 지원하고 시민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대책 필요

박수영 의원

# 문정부의 새만금 비리, 제로페이의 기획횡령 의혹을 비롯한 정책 실패와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 지적

## ▌주요 내용

### □ 문정권에서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풍력사업이 바다의 대장동사태로 변질됨

- 국립대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사업화 하여 7200배의 수익 봄
- 특히, 관련 회사들을 중국계 자본에 매각하면서 국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함
- 한전KPS는 리스크관리 없이 특정업체에 용역발주를 내준 의혹이 있음
- 전기위원회 등 에너지마피아의 부처-공기업-민간업자 결탁문제
-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산업부 조사 및 검찰, 경찰의 수사 요구

### □ 한전,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 상황에서도 무리한 한전공대 추진 문제 지적

- 이사회는 최종용역 발표전에 법인 출연을 의결하였고, 주무기관인 산자부를 패싱하고 청와대로 설립지원위 직접 요청한 바 있음. 또한 기재부 재무영향에 따른 추진 권고도 무시하고 졸속 추진함

### □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업체와 결탁해 추진한 제로페이의 기획횡령에 대한 문제 제기, 검찰 수사 요구

### □ 산업부 및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및 경영 정상화 필요

- 가스공사, 가스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문정부의 눈치를 보며 인상 방치함
- 한전KDN, 재무상황과 공영방송 취지에 따라 YTN 지분매각 필요성 지적
-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고액 연봉 퍼주기 문제 지적
- 공영홈쇼핑, 투입예산보다 매출이 적고 시장성, 공공성 상실한 채 낙하산 인사 서식처로 전락한 기관에 대해 원점 재검토 필요
- 강원랜드, 경영과 무관한 노조와 외유성 관광 출장 행태 지적
-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추진비 부실사용 및 관리, 산업부 감사 필요 지적

### □ 정책제언

- KOTRA,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 요청
-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
- 개별기업을 산단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대용지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을 울리는 정책자금 브로커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 한국벤처투자, 수도권 투자 82%로 편향된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 요구

양금희 의원

# 평등, 공정, 정의의 탈을 쓰고 국민 기망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께 실상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해

## 주요 내용

### □ 2017년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에 따른 전기요금 폭등 필요성 보고받고도 전 국민 기망한 문재인 정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보고받음
- '17년 전기요금을 100으로 가정 했을 때, 2022년 114, 2030년 140 등 매년 2.6%씩 인상 필요, 전력 구입비 2030년까지 누적 140조원 상승 보고
- 초대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인사청문회('17.7.19.), 현안보고('17.7.26.), 민주당·산업부 당정협의('17.7.31.) 등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허위 보고를 반복함
- 문 정권은 임기 동안 주무부처 보고내용은 묵살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다음 정부로 전가 시킴
-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길 당부함

### □ 백운규 전 장관 퇴임 무렵 처제 A씨 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

- 지역난방공사와 관련성 없는 미디어과 교수 A씨, 면접 돌연 없어지고 심사 간소화
- 기관 전례 없는 개인 사유로 화상이사회 참석, 화상으로 참석해 의견 개진도 없이 회당 약 300만원 수령
- 같은 기간 선임된 비상임이사 중 유일하게 연임되었으나, 활동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못 해, 각종 특혜에 대해 국민들께 소명해야 해

### □ 문 정권의 사적채용, 캠코더 인사 실태 조사 필요

- 문 대통령이 사적채용한 김어준 처남 인태연, 네이버→성남FC 우회 후원에 관여
  - 자영업비서관 임명 후에도 "자영업 위기, 최저임금보다 대기업 진입이 원인" 등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언행, 실상은 본인이 운영하는 단체 '희망살림' 통해 대기업 보조금 40억 받아 이재명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39억 후원
  - 사적채용인사의 부정·비리 반복돼서는 안돼. 조사 및 재발방지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47명, 40%(19명)가 아직도 근무 중
  - 文정권 4명 중 1명꼴로 캠코더 인사 임명, 자소서에 민주당 이력 강조한 인사도 있어
  - 국정동력 상실되는 일 없도록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

### □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2개사가 선행기술조사 독과점"

- 2018년 이후 집행 예산 1천305억원 중 922억원이 이들 업체로 흘러들어가
  - 제도가 허술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이 현안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해



엄태영 의원

#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역할 촉구

## 주요 내용

###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에서 산업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 최근 5년간 불법파업으로 기업 피해 6조 5천억원에 달해, 최빈국 수준의 노사관계 개선 통해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 시켜야
- '역대급 부패 카르텔 양상'시킨 文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적결과 RE100 부작용 막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제도개선 마련 촉구
-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정유사들의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이행 비용, 유연성 제도 조속히 도입해 국민 부담 해소시켜야 (엄태영 의원, 바이오디젤 유연성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 □ 코로나에 이은 글로벌 경제 악화 속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기부 역할 강조

-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중소기업 수출 악영향 지속되고 있어, 대내외 수출 불확실성 완화되는 시점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책 필요
- 코로나 방역지원금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혼란 가중, 환수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재발 방지 필요
-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자활 여건 조성해줘야

### □ 불법비리행위 등 특정업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불법·부당 행위 엄벌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 필요

- 한국전기안전공사, 태양광 장비 업체간 총 45억 상당의 입찰 담합 사례 적발
-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기반기금사업 허위·위법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실대출 등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사례 다수 적발
- 국가백년대계 에너지사업,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전략 실행 촉구
- 기술보증기금, 정부기금으로 대위변제한 태양광 사고 처리비 회수율 높여야

이인선 의원

# 원전생태계 복원 등 산업정책 재정립

## ▌주요 내용

### □ 文정부 5년간 탈원전 예산 223% 폭증... 원전 건설·보수 예산은 '뚝'

-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해체'연구개발에 들인 정부 예산(출연금)이 5년간 223% 폭증, 반면 원전 건설과 유지·보수 R&D에 쓴 예산은 크게 감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원전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려던 시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에너지 연구개발에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필요

### □ 탈원전 유탄 맞은 지자체… 최소 837억원 증발(지방세 등 축소)

-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원전이용률 감소로 지방재정(지역자원시설세)과 지역사회(사업자지원금)로 유입되었어야 할 최소 837억원의 자금이 증발
- 한빛원자력본부 소재 전남 영광군, 한울원자력본부 소재 경북 울진군의 경우 전체 세수 대비 원자력본부 납부액 비중 대폭 감소
-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지자체 및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시급

### □ 뿌리산업 붕괴 막을 획기적 인센티브 요구

- 국내 뿌리산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이 모두 줄면서 뿌리산업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증폭
- 이런 가운데 뿌리산업법령에 명시된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조치 유명무실, '우대'는커녕 '홀대'로 일관
- 미래기술에 적합한 형태로 하루빨리 뿌리산업을 변모시키지 못하면 기간산업의 집단 도태까지 우려되는 상황
- 청년 인재 유인책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 시행 요구

정운천 의원

# 윤석열 정부 산자·중기부 소관 정책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 □ 정권·가격변동에 흔들림 없는 〈해외자원개발 지원기구〉 제안

- '자원개발률'은 위기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확보량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 몰이'로 석유와 가스, 광물 등 자원개발률이 크게 감소
- 반면 중국과 일본은 공격적 투자로 자원개발률을 높이고 있음. 특히 일본은 조그멕(JOGMEC)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지원 중
- 우리도 정권이 바뀌거나 에너지 가격변동에 관계 없는 해외자원개발 컨트롤타워 KOMEGA(Korea Oil, Metals Gas National Corporation) 필요

### □ 문재인 정부 탈원전 문제 지적 (원전 비중 확대 필요)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원전 이용률이 81.6%에서 71.5%로 약 10% 감소. 감소한 원전 비중만큼 값비싼 LNG 대체시 약 11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
-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원전은 발전원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전원임. 따라서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신속한 재편 필요

### □ 지난 3년, 64조 지원에도 악화된 소상공인 현실 지적

- 코로나19 3년간 약 64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투입에도 폐업·대출잔액 증가 등 소상공인 경영 악화
- 중기부와 소진공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 □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 제조·서비스 기업 대표는 약 12만 명에 육박하지만, 가업승계 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한 해 100여 곳에 불과
- 혁신하고 도전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가업승계 개편안 보완과 획기적인 제도개선 촉구

###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문제점 지적

-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안보를 지키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 인력 및 예산 확대 필요성 제시

최형두 의원

## 발전소, 北 EMP 공격에 무방비…文 정부, 5년간 무대책

### 주요 내용

□ **발전소, 北 EMP 공격에 무방비…文 정부, 5년간 무대책**

- 한수원이 국정원의 EMP 시범평가에 응하지 않은 것은, 한수원 자체적으로 실시 평가한 '가동원전 EMP 영향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과제에 따라 "국내 원전은 EMP에 대한 충분한 차폐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차폐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임
- 한전 산하 화력발전사인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국정원 EMP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EMP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산업부는 국정원이 수립 중인 'EMP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시설별 중요도와 추가적인 방호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에너지기반시설에 보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음. 북한의 EMP 공격이 지금 발생해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고백한 셈

□ **LNG 저장용량 547만톤인데 2022년 6월 재고량 138만톤 뿐**

- 가스공사의 비축량(재고량)이 지난 2022년 6월말 기준 138만톤인 것으로 확인. 가스공사는 전국 5개 기지에서 최대 547만톤을 저장할수 있음
- 저장창고 비축량(재고량)은 2019년도 평균 300만톤, 2020년도 평균 344만톤인데 비해 2021년도에는 254만톤을 비축했고, 2022년에는 6월 현재까지 평균 181만톤을 비축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 방미외교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 정쟁에만 골몰하는 '국내정쟁용 국회'에서 벗어나야 함. '경제 구하기 국회'가 필요하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경제외교 최전선에 나서야 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반대하고 우려를 표시하는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1대 1로 만나서 설득해야 할 것임
- 미국, 일본, 독일 자동차업계 및 각국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함
- 여야 합의로 지금 당장 대표단을 구성해 방미 경제외교를 펼칠 것을 제안함

□ **자유무역지역(FTZ), 규제특구 조세특구로 되살려야**

- 전국 자유무역지역 수출액을 2020년 25억불에서 2030년 100억불, 고용일자리를 202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 필요
- 기존의 관세유보 외에 조세제도 개편과, 규제특구 지정 등 획기적인 규제 개혁 필요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 건강보험료 재정강화와 마약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 ▌주요 내용

### □ (복지부)문재인케어 관련 지적

- 2016년, 2017년에 이미 정부에서 불필요한 입원 및 치료 등 의료이용, 대형병원 쏠림 현상, 비급여 풍선효과 등 부작용 등을 예측하고도 정책 미평가
- 문케어 시행 이후 도덕적 해이 문제로 건보 재정 위기 강조, 건보 재정이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5,765조 원의 적자 발생 지적
- 문케어 소요 예산 18조 5,963억원 소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아암 환자, 치료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를 얻거나 죽게 되는 뇌졸중 환자들, 조기 집중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높일 수 있는 재활치료에 활영 등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전명 재검토와 개선방안 모색

### □ (식약처)마약류 관리 부실 지적

- 신종 마약류의 급속한 유입 질타
- 대응속도 지적 및 임시마약이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성 강조, 국제기구나 마약이 성행하고 있는 주요국들과 정보 연계를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의사와 환자의 이름, 나아가 셀프 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4년간 10만여건에 이름, 셀프처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엄하게 규제 필요 촉구

### □ (건보공단)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조사 방치, 허위자료 제출, 은폐시도에 대한 지적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미조사 방치 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스템상 일괄처리를 지시하고 조작한 부분에 대해 지적
- 공단 본부 담당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건보증 부정사용 접수 건을 조회할 수 없다는 점과 전담인력이 없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점에 대해 프로그램 개선과 전담인력 편성을 요구함

김미애 의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향후 대규모 감염병 중장기 대책 필요성

## ▌주요 내용

###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개선

-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허점 드러나
- 형식적인 민관네트워크 개선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 현장 목소리 반영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마련
  (금융교육, 법률·심리지원 및 멘토링 사업, 자립지원전담인력 지정 및 역할 확대 등)

### □ 코로나 대응체계 점검 및 중장기 대책 마련

-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 초래한 코로나 대응체계 점검 및 감사원 감사 필요성
- 해외 백신개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 국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으로 백신 늑장 도입
- 근거 없는 비과학 방역으로 국민 고통 가중, 尹정부 자율·책임 강조하는 방역체계 전환 성공적
- 과학적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감시체계 및 인프라 확대, 신속한 병상·인력 등 대응체계 구축,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력체계 등 향후 발생 대규모 감염병 중장기 대책 마련

### □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 강화

-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 강화 위해 인과성 추정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필요

### □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성

- 거주시설 입소대기자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우려
- 현실 고려한 정책 개선 및 정책결정에 있어 당사자 의견 적극 수렴

### □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 및 공적 연금개혁 필요성

- 문케어로 인한 재정낭비 개선 및 생명 직결된 필수의료·희귀난치질환 지원 강화
- 문정부 연금개혁 없었던 유일한 정권, 연금개혁 확고한 의지 및 로드맵 제시 필요

백종헌 의원

# 文정부 지난 5년, 국민건강·생활안전 제대로 지켰는가?

## 주요 내용

### □ 文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 허점 지적

- 백신 오접종 사례 관련 피해보상 촉구

### □ 文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

- 사회보장정보원, 무리하게 추진했던 덜익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윤석열 정부(5.47%)보다 낮은 문재인 정부 최저생계비 증가율 2.78%
- 제약회사 이권만 챙겨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 개선돼야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형노인일자리 실효성 지적 및 고용안정 확대 방안 수립 필요

### □ 보건의료와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점검

-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상 판매 실태 점검
- AED 설치 의무 대상기관의 지도 및 실태 점검

###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허술한 정책 개선요구

- 대한적십자사, 공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헌혈공가 실태조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및 제도개선 촉구
-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실효성 낮은 인증평가제도 재점검 요구
- 한국보육진흥원, 유명부실한 어린이집 평가사업 지적
- 국립중앙의료원, 7,000억 기부금 관리 실태 조사 필요
-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의 확대 필요성 강조
- 지역의료 균형 발전 위한 간호인력 제도 개선 촉구
- '수원 세모녀 비극' 재발방지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5년간 1,442명에서 1,773명으로 20% 증가
- 장애인 문화시설 등의 시설 접근성 확보 필요성 강조
- 감기약 대란 관련 한국 얀센과 6개월 간 215% 공급 계획 대책 마련

서정숙 의원

# 무책임한 문재인식 포퓰리즘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보건복지정책으로!

## 주요 내용

### □ 문재인식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 수립해야

- 文케어의 무책임한 보건포퓰리즘적 건보재정 운용을 질타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누적 적자 해결방안 마련 촉구
- 건강보험 재정이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 정부지원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금화하여 국가 재정관리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국민연금의 개혁 시급성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적인 기금 운용을 지속한 文정부의 행태를 질타하고, '지급보장 명문화'에 필요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

### □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강화로 전인건강한 대한민국 실현해야

- 콜드체인 정책강화로 발생한 인슐린 공급부족 문제, 배달음식 시장 확대에 따른 국민 먹거리 안전 악화 문제, 밀키트 시장 관리 미흡 문제 등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최근 급증하고 있는 10대 마약류 사범 문제와 관련해 현실을 반영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마약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 문제 지적

### □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대책 마련해야

-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 인정과 관련,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단체들을 통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보다 폭넓은 생활비 및 치료비 지원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 文정부, 공직사회 문란케 하는 산하기관 방만경영 및 알박기 인사 질타

- 건보공단 초유의 46억 횡령사건에 대해 질타하고, 내부 복무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해이한 보안의식 문제 지적
- 현정부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 끼치는 文정부 임기말 산하기관장 및 임원 알박기 인사 문제 지적

이종성 의원

# 약자 복지, 취약계층 지원 외면한 문재인 정부

## ▌주요 내용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 밀어붙이기! 퍼주기!

- 천문학적 적자 예상, 재정건전성의 위협 문제 알고도 '문케어' 적극 추진
-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
- 특히 '16년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 2017-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 및 재정 낭비에 대한 관리 필요 지적이 있었음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임
- 무차별적 퍼주기식 정책, 취약계층 외면하는 결과 초래
  - 대표적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재난적의료비 사업, 계획 대비 성과 28%에 불과, 특히 문케어 시작하며 오히려 그 대상 축소
  - 장애인주치의 사업 1,705억 원 소요 전망했지만 실제 집행 2억 원에 불과

### □ 의료체계 붕괴시킨 문재인 정부

- 필수과 확보에 손 놓고, 2020년부터 시작한 정책마저 생색내기용에 그침
- '17년 흉부외과 등 8개 과목 미달이었는데 '21년에는 10개로 늘어났고, 지원율 150% 이상 과목이 6개나 되는 등 인기 과목 쏠림현상 심화
- 연간 1,000명의 신규 소아암 환자 발생에도 관련 전문의는 전국에 67명 뿐
- 뇌졸중(뇌경색), 골든타임이 필요한 질환임에도 문제 해소 위한 노력 전무
- '20년 3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실시하고 있지만 45개소에 불과

### □ 장애인 편의증진, 실제로는 방임 수준

- '18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설치율 80.2%, 그러나 이는 대상시설만 조사한 결과로 대다수 건축물 편의시설 미설치
- 매년 진행되는 건축행위의 약 90%가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
- 최근 5년간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단 3건, 편의증진심의회는 단 1번, 편의시설 관리 위한 전산시스템도 부재

### □ 본질을 훼손한 문재인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

- 현재도 극빈층인 생계급여 대상자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 불가
- 민간형 일자리에 대한 저소득층 우선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개선 의지 없음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73%가 기초연금 대상자인 만큼, 민간·사회서비스형 증가 시, 공공형 일자리 대상을 더욱 좋은 일자리로 유인하는 효과 발생

조명희 의원

# 文정부 무능함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 심화, 복지 사각지대 발생, 全無한 데이터 활용 문제 질타, 과학적 정보 기반 합리적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 □ 文정부 들어 심화된 지역 간 '의료불균형 및 국공립 어린이집 격차' 문제 해소 촉구

- '치료가능사망률(치료 적기를 놓쳐 조기 사망한 환자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대구·경북 등 지역이 더 높고, '21년 기준 266만명의 지방환자가 수도권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5조 2천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수도권 병원 쏠림 심화 문제를 지적 → 의료분야 국가 균형 발전 중요성 강조
- 지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약 20%로 49.8%에 달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 입소 대기 기간은 179일로 심각한 보육권 지역 편차를 질타 → 지역별 보육 서비스의 차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

### □ 불공정 정책으로 무너지는 필수의료 및 장기요양기관 활성화 위한 정책 질의

-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기피가 심화된 원인으로 ▲비현실적 수가 인상률 ▲불공정 패널티 등을 지적하고, 주먹구구식 재활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재활난민'이 발생하는 현실을 질타 → 공정한 협상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재활의료 표준화 방안 마련 지시
- 전국 2.7만개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불공정한 인력배치 기준, 가산제도와 수가 산정 문제 지적 →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적용 및 재가시설 1일 수가제 등 촉구
-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삭감사유조차 제공하지 않고, 이의신청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하여 평균 155일에 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 문제 지적 → 이의신청 심사 절차 개선과 표준화된 기준 마련 지시

### □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심각성 비판

- 노후긴급자금의 67.3%를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고, 월급 27만원 수준의 열악한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고독사 막는 '응급안전서비스' 기기 설치율은 19.8%에 불과한 실정을 지적 → '주말노인사원제' 도입 등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독거노인에게 가장 시급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 90.6%에 비해 지방은 평균 77%('21년 기준)이고,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손실액이 지난 5년간 2.7조에 달하는데도 방치했던 전 정부의 무능함 질타 → 도시가스 보급 지원 및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손실 보전 촉구
-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다문화 인구 109만명 시대에 의료급여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열악한 실정 질타 → 이동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지시

### □ 文정부의 미흡한 데이터 활용 문제 및 기초·임상이 분리된 연구개발(R&D) 질타

-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타 기관 2,600만 건에 비해 全無한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잡한 시스템과 보유 데이터의 20%만 공개된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e Model) 문제 지적 → 결합 시스템 간소화 및 CDM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文정부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하는데 기초와 임상이 분리되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기초의과학 지원사업이 全無함을 질타 → 기초·임상 연구개발 통합 지원 촉구

최연숙 의원

#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치료·재활 강화 등 마약류 관리 대책 제시 및 자립준비청년 권익증진 대책 촉구

## ▌주요 내용

### □ 마약류 셀프처방 실태 밝혀!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 의사의 마약류 처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매년 평균 7~8천명으로 확인돼
- 5년 내내 매년 연달아 셀프처방한 의사도 1,447명, 4년간 셀프처방 사례 총 10만건, 처방량 350만정
- 셀프처방 관련 식약처 조사 미비, 마약류 처방 관련 면허정지나 취소 미비
- 식약처 마약류통합시스템의 점검 시스템 부재, 심평원의 청구시스템에서의 오남용 심사 부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관리시스템과 연계 부재 등 지적
- 마약류 셀프처방을 전수조사해 오남용 확인하고, 셀프처방 방지 시스템 마련 등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개선 및 다부처 협력 등 대책 마련 촉구

### □ 마약류 중독 100만명 추정, 치료 보호와 예방 교육 활성화해야

- 마약류 중독은 질병으로 반드시 치료해야 함에도 작년 한 해 21개 지정병원의 치료 인원은 280명에 불과, 그 중 12곳은 환자 치료 실적 전무
- 국립정신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참여 의무화, 마약류 중독 치료 예산 증액, 지자체 매칭에서 중앙 부담 비율 상향 필요
- 청소년·청년 마약사범 폭증에도 예방교육은 크게 미비, '청소년 마약 예방 종합대책' 세워 모든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체계화·내실화 필요

###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미비 실태 지적! 예산 및 인력 대폭 강화해야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반지하 거주,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9명 전담인력-청년 간 맞춤형 지원 배제
- 보호연장아동과 중간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서 사각지대 발생, 자립교육 미흡, 멘토단(바람개비 서포터즈) 지역편차 등 제도 미비점 많아
- 자립지원 관련 예산 및 인력 대폭 강화하고, 사례관리 등 맞춤형 관리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체계적 이행 촉구



최영희 의원

# '정치방역',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文 정권의 불공정과 몰상식에 앞장선 보건복지부!

##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슬퍼할 권리'조차 박탈한 문재인정부의 K-방역

-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는 곧바로 화장해야 장례 지원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선화장 후장례'를 사실상 강제한 것이 문제였음을 밝힘
- 국민들에게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규제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임종의 순간까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여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면서까지 비인륜적 희생을 강요했던 점은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에 여념 없던 K-방역은 정치방역의 본모습임을 지적
- 문재인 정부 때 화장을 권고했던 이유가 장례 과정에서 잠재적 감염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시신을 통한 감염사례가 없다는 발표자료와 지금까지 시신을 통한 감염사례가 없었음을 공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무리한 방역이었음을 인정받고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냄

### □ (보건복지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하수인을 자처한 보건복지부

- 문재인 정부는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를 수단으로 삼아 일자리통계에 편입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는데 악용함
- 노인일자리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양산하면서 일자리 통계 하수인을 자처함
-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복지적인 기능 수행 및 노인일자리 사업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함

### □ (국민연금공단) 다음 정부의 몫으로 떠넘긴 文 정부의 연금개혁

-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2028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대비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함
- 역대 모든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지급액 조정을 해왔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적어도 임기 중 하나는 개혁을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한 정부로 남았음을 지적함
- 주주대표소송과 탈석탄 관련 네거티브스크리닝 등 국민연금의 민감한 정책 변화는 모두 새 정부로 떠넘겨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시도는 결국 빈손이었음을 지적

최재형 의원

##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주요 내용

□ **장애인 탈시설 퇴소 절차 적법하게 추진된 것인지 점검 필요**

- 거주시설 장애인의 본인의 동의 없이 탈시설이 추진된 사례가 확인됨
- 탈시설 추진과정에서 장애인 본인의 선택권이 존중될 필요
- 장애인 지원주택이 장애인의 편의성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주거환경인지 점검할 필요

□ **초산=노산이 되어 가고 있는 현재 추세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0.8명인 상황에서 1명의 아기라도 건강하게 출생시켜 잘 키울 수 국가적 지원과 배경이 필요함
- 현재 노산에 관한 특별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노산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함

□ **문 정부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를 위한 대책**

- 문재인 정부 동안 주택 공시가격이 70% 상승하여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가 속출하였음
- 집 한 채 가지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책 마련을 촉구함

□ **과도한 복제약 가격 인하를 위한 정책제언**

- 개발투자비용 없이 생산되는 복제약의 국내가격이 해외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복제약 약가의 상한이 오리지널의 53.55%라는 높은 수준으로 고정된 것에 기인함
- 소비자와 건보재정, 산업성장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복제약 약가제도 재설계를 통한 시장경쟁 도입 등 약가 인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함

□ **의료급여 확대 및 개편방안**

- 같은 위기가구이자 빈곤층이지만 부양자 의무기준 또는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150만여명의 빈곤층이 의료급여 혜택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의료급여 대상자를 최대한 늘려 빈곤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되,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면서 1종(의료급여)를 줄이고 2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함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

## 4대강 보해체·탈원전 및 MBC부당노동행위·불법파업조장법 등 文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주요 내용

**□ (환경)조작·편향·위법으로 결정된 4대강 보해체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

- 文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4대강 보해체 결정과 관련한 위원회를 편향적으로 구성
-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15명 중 8명은 민간위원, 이중 7명은 4대강 반대 활동하던 인사
- 결정과정에서 지표로 사용한 COD는 이미 5년전 법적 평가지표에서 제외된 항목

**□ (환경)文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 지적**

- 지난 정부에서 현실성 없는 탈원전 기조하에 과도한 재생에너지목표 수립
- 태양광 사업 비리와 같은 불법행위를 촉발
- 윤석열 정부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원전을 정상 추진하면서 2030 NDC 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목표 수립할 것을 촉구

**□ (노동)MBC 부당노동행위 신속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실시**

- MBC 경영진은 2017년 MBC 언론노조(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MBC 3노조 및 비노조기자 88명을 취재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지속적인 보복성 인사를 자행하여, 피해자들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장기간 지연
-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여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발표

**□ (노동)'노동조합법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 적극 대응, 반대 입장 이슈화**

- 야당은 노동조합법(2조, 3조)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선정하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면책 ▲하청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및 파업권 인정 등을 추진
- 법 개정안은 헌법과 법 원칙에 반하며, 선진국 사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노조 불법행위의 문제점, 우리 노사관계 불안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임을 집중 부각

김형동 의원

## 문재인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의 실정을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정책 국감 실현

###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공고화의 문제점 부각,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 대전환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정립**

- 소득주도성장,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몰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 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정책 실정 질타
- 조선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 촉구
- 산재보험료 감면 등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안전관리에 등한시하여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낸 SPC 등 연이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산안전보건감독 강화 촉구
- 노동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통해 노동심판기구의 신뢰성 제고 촉구

**□ 물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 촉구, 낙동강 수계 주민들의 권익 보호**

- 수 십년을 끌어온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 지자체, 국회의 적극적인 행정 촉구
- 낙동강 수계 주민들의 맑은 물 마실 권리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촉구
- 사후 처리 방식 고민없이 추진한 종이 빨대 문제 지적
- 국가하천·지방하천 기본계획 정비와 보수·유지 강화 통해 자연재난 대비 촉구

**□ 국정감사 통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

- 퀵서비스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 촉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사합의를 통한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 가치 존중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관계법령 개정 추진 등 정책 국정감사의 사후관리 실시**

- 「낙동강수계법」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사업비 한도와 사용처 확대 추진
-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채용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 건설현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박대수 의원

#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환경 정책 실종, 내사람 챙기기 총망라

##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지적

- 文정부는 포퓰리즘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탕진하였고,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의 수지차는 적자 전환 됨. 이에 고용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에게 3년간 5조원을 더 걷어 적자를 메꿨음이 드러남. 게다가 쏟은 기금 예산에 비해 실업정책의 성과는 전혀 없었고, 5년간 부정수급액 3,200억원이 발생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을 지적
- 文정부 핵심과제인 산업재해 사고사망 절반 감축의 이행을 위한 안전공단의 '사망사고 절반감축 6대 실행과제'가 모두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해 산업재해 예방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을 확인

### □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온상. MBC 특별근로감독 강력 촉구

- MBC는 제1노조 파업('17.9.4.~11.15.) 미참여를 이유로 제3노조 조합원 및 비조합원 기자 80여명을 기자 업무에서 배제하며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을 자행했음을 드러냄
- 고용노동부의 MBC 부당노동행위 고발 건에 대한 조사가 평균 사건처리 기간 이상(20개월)으로 걸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국의 소극행정, 직무유기를 질타
-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강력 촉구

### □ 위원 구성부터 결론까지 편향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 전원, 전문위원 42명 중 25명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라는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는 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된 것을 지적
- 제1차 기획위원회 안건 상 금강, 영산강 모두 보가 있을 경우 물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질·생태에서는 보가 있건 없건 차이가 크지 않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단 50일 만에 보 해체 및 상시개방으로 결론 지은 것을 비판
- 문재인 정권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중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임명된 위원 12명이 17건(25억 원)의 연구용역 수행한 것, 그중 1명을 연봉 2억 3천만 원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 등의 대가성 의혹 문제제기

### □ 논란만 자초한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민주당 前 의원)

- 신창현 琄 사장은 文정부 대표적 '낙하산 인사'로 임기 2년이나 남았지만, 직원 갑질 논란 및 수도권 폐기물 정책 관련 유언비어 조장 등 분란 야기한 점 강력 비판
- 폐기물 정책에 어떠한 결정권도 없는 산하기관장이 ▲소각장 설치 반대 지자체 폐기물 거부 ▲2030년까지 매립 연장 ▲매립지 내 소각장 설치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정부 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킨 점 지적

이주환 의원

# 설계부터 과정·결론까지 짜고 친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文정권 MBC 블랙리스트 피해,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이끌어내

## ▌주요 내용

### □ 설계부터 과정·결론까지 짜고 친 '4대강 보 해체' 밝혀

- 4대강 보 해체, 反4대강 활동 인사들에 의해 결론나... 보 해체 추진 셀프용역도 실시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 文 정부 수력발전 현황 점검 결과 보 개방에 따른 전력 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6%, 534억원 감소. 수력발전 감소로 18만t 규모의 탄소감축 효과도 증발
- 보 개방에 따른 피해사실 은폐 의혹 드러나, 지하수 수위 저하와 오염 등으로 총 16억 배상

### □ 대구MBC, 야당, 시민단체의 터무니 없는 낙동강 '수돗물 녹조 독소' 검출 선동에 정면 반박

- 낙동강 권역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 검출됐다는 야당·시민단체·대구MBC 공세에 시료의 객관성 문제, 공인받지 않은 검사 방식 문제, 실험결과 왜곡 보도 문제 등 과학적 맥락으로 반박, 낙동강 권역 수돗물의 안전성 입증

### □ 文정권 'MBC 블랙리스트 피해' 특별근로감독 이끌어내

-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자행한 보복성 인사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 최승호 전 사장 및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강력 촉구해 관철(10.26 고용부, MBC 특근 계획 발표)

### □ 환경·노동부 산하기관 전수조사 결과 전문성 없는 文정권 캠코더인사 39명 포진, 출마 지역구 관리에만 열중하는 文정권 낙하산 인사의 민낯 공개

- 폴리텍대학 조재희 이사장 임기 중 출마 지역구 관리 열중, 학교 경영 방치(11.02 고용부, 폴리텍대학 감사 착수)

### □ 2400만원 보조금 받고 바로 되팔면 1천만원 차익,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문제 개선 및 전기화물차 지원정책 재검토 필요성 지적

- 생계형 차주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화물차 실질적 보조금 예산 확대 필요성 강조

### □ 文지시에 따라 인공강우로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 한다더니 발사 시늉만 한 사실 밝혀

지성호 의원

## 사회적 논의 없는 노동현안 관련 개별법 개정 무의미 지적

### 주요 내용

□ **불법파업 등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 없이 개별법 개정 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함**

- 2003년 한진중공업 불법 파업부터 올해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 불법 파업까지 지난 20여 년간 사업장 불법 점거와 손배소 반복되고 있음
- 불법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10~'20년) 근로손실일수는 38.1일, 최근 5년간('17~'22년) 경제적 손실은 6조 5,460억 원에 달함
- 불법 파업과 이에 따른 손배소 등의 노동문제는 환노위에서의 개별법 개정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손배소는 법무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기재부·산업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사회적 파급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함

□ **개별기업 노조에서 노사간 협의 중 교섭 결렬이 되면 상급단체나 화물연대 같은 유사 단체가 교섭에 참가하는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일례로 올해 대우조선 불법파업 건을 보면 금속노조가 같이 참여했는데 교섭 종료 후 하청 노동자지회에만 손배소를 묻게 됐음
- 관련 단체의 교섭 참여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안이나, 교섭 종료 후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은 기업별 노조가 전부 부담 지는 구조는 불합리함
- 따라서 산별 노조 불법파업 참여에 대한 책임 분산이 요구됨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

# 국토·교통 관련, 불공정·비상식의 정상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촉구!

## 주요 내용

### □ 건설·부동산 현장에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상식의 정상화 필요성 강조

- 업무방해, 협박, 폭행, 성추행 등 도 넘은 건설노조의 갑질 불법행위 지적
  적발 '21년 82건, 국토부 차원에서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함 강조
- 최근 3년간 직방, 네이버 등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2만여 건 발생, 위반 의심 건수도 점차 증가,
  허위 매물 피해 방지 방안 마련 필요성 강조

### □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

- 재난,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이재민에게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공급의 비율 상향 및 기준 완화 필요성 강조
- LH 임대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집 1,091곳 중 284곳(26%) 운영자를 찾지못해 비워져있는 상황
  지적, 시행령 개정 등 통해 예산 낭비 방지대책 촉구
- 설치 이후 9배 이상 급증한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등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필요성 강조

### □ 교통 분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촉구

- 최근 5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 화재 건수도 23배 증가,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 정책 필요성 강조 및 대책 마련 촉구
- 10대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최근 5년간 46배 급증! 무면허 운행 방조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의 행태 지적, 대책 마련 촉구

###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 퍼진 불공정과 비상식의 정상화 필요성 강조

- SR, 신용카드 혜택 노린 악성환불 최근 5년간 832건, 286억원 발생,
  제도 악용하는 악성환불자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및 처벌 촉구
- 한국도로공사, 매출의 약 1%인 휴게소 매출 감소가 성과급 영향 준다고 국토부의 혁신 서비스안
  거부한 조직 이기주의 지적, 진정성 있는 혁신안 주문
- LH, 사내대출제도의 특혜 지적, 기재부의 관련 지침 이행 촉구
- 국립항공박물관, 셀프 취업, 임용 특례, 사내 괴롭힘, 성추행 등 각종 인사 문제 지적, 개선 및 대책 마련 촉구

강대식 의원

# 문재인 정권의 3대 민낯

## 주요 내용

###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부진의 문제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새만금 권역에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구상하며,
  전체 재생에너지(3.0GW) 중 70%를 수상태양광사업을 통해 생산하겠다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2022년 4월 준공 목표였으나, 송·변설비 건설사업 문제로
  2024년 말로 지연되었으며, 2단계 사업 역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한수원이 재정악화로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이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 선도와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허구임이 증명되었음

### □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문제

- 문재인 정부 기간 중(2018~2021)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산재 비율은 무기계약직 대비 약 7배,
  일반정규직 대비 약 10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들은 발목 절단 사고를 당한 비정규직 직원을 '회사 이미지 실추'를 사유로
  징계하였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았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위험의 외주화 민낯을 대변하고 있음

### □ HUG 사장 신용등급 조작 지시 문제

- 국토부 감사를 통해 HUG 사장의 특정업체 신용등급 상향 지시가 확인됨
-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용평가등급이 3단계 이상 상향된 건설사가 120개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HUG 직원들로 구성된 등급조정위원회 운영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

김선교 의원

# 국민 눈높이에서 文정부의 잘못된 집행, 방만운영을 바로잡았습니다

## 주요 내용

**□ 이재명, 은수미 성남시장 재임시, 판교택지 초과이익 환수 업무가 10년 넘게 중단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후속 절차를 개시하도록 촉구**

- 성남 판교개발사업은 공영택지개발에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한 최초 사업으로 성남시는 최대 3조5,539억원 개발이익을 추정했으나, 2012년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 중단 이후 현재까지 공식협의 없음. 역대 성남시장의 직무유기 및 국토부 조정역할 부재 문제 지적하고 환수절차 진행을 요청

**□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시가 2020년부터 지하철(1~8호선) 역사 내 196억 들여 공기청정기 4천여대를 설치했지만 공기질은 더 나빠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 및 책임자 문책을 촉구**

**□ 서울시 1,722억원 쏟아부은 태양광 설비의 노후로 연간 12억여원 추가 비용 불가피한 점 지적하며,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

- 박원순 前시장 재임시 태양광 사업으로 1,511억원 투입했으나, 사업성 미흡, 보조금 먹튀, 주민갈등, 안전사고를 야기한 문제 지적하며, 연간 전력생산량은 원전 1기의 4.4% 불과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허구성 지적

**□ 이외, 국민 눈높이에서 지난 정부의 실정을 되짚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

- 철도입찰, 현장실사 부재, 납품실적 조건누락 문제, 입찰제도개선 촉구
- 4,567원짜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고비용 운영유지 전면재검토 촉구
-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 직영포함 개편 요구
- 철도매장, 과도한 임대료산정, 보증금 이중요구 문제, 운영제도 개선 요구
- 대기업 다음, JDC 등 각종 지원받고 먹튀, 입주기업 먹튀방지책 요구
- LH, 수요에 안맞는 공급계획으로 착공지연, 장기공실, 청약양극화 야기
- 하루 일하고 6개월치 퇴직금 받는 건설기술교육원 퇴직금 규정 개정요구
- 전세사기 문제,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 통합시스템 구축 제안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및 내국인 규제 역차별 문제 관련 대책 촉구

김학용 의원

# 그들만의 카르텔, 文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진실

## 주요 내용

**□ 한국도로공사 퇴직 임직원의 낙하산 맛집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도로공사서비스로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4명의 임직원을 재취업시킴
- 재취업한 임직원 중 30명은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이직 후 정년이 1년 연장되었으며, 이직 후 연봉도 2,000만 원 증가

**□ 정권의 낙하산 창구로 전락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들**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임원의 인사 원칙은 단 두 가지,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이거나 공사 퇴직자의 낙하산임
- 인천공항시설관리(주) 대표는 민주당 출신 前 국회의장 비서실장, 상임감사는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상임감사는 노무현재단 본부장,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개혁 자문위원임
-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 KAC공항서비스(주) 대표는 민주당 송파구청장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선후보 정무특보단장 역임, 남부공항서비스(주) 대표는 민주당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 항공보안파트너스(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냄

**□ 매일 반나절만 근무한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주)**

- 코레일테크 경기도 차량사업소 공무직 6인은 약 5년 동안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09~18시 근로를 무단으로 어기고 오전 조와 오후 조로 나눠 근무하고 정상 급여를 지급 받음
- 코레일테크(주) 상임이사는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산시 예비후보, 비상임감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 사무처장 역임

김희국 의원

#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들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요구

## 주요 내용

### □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요구

-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각종 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주택시장 급랭에 따라 공시가격이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개선을 요구함

### □ 한국도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사업협약 개선 요구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로 민자휴게소 운영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토지사용료 조정 등 지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사용료 제도 등 도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사업협약의 개선을 요구함

### □ 안전점검·진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요구

- 최근 5년간 발주된 안전점검·진단의 86.6%가 비용산정기준 대비 70%이하의 저가로 계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가계약으로 인한 부실 점검·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함

### □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요구

- 국토부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하면서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 하였으나,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경과조치 때문에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함

### □ 기술형입찰 유찰사태 관련 제도개선 요구

- 자재가격, 인건비 등의 폭등으로 국토부 소관의 도로·철도 등 기술형입찰 사업이 무더기로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 하는 표준시장가격 제도의 폐지를 요구함

박정하 의원

#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내실 있는 민생·정책 국감 실시

## 주요 내용

### □ 벌떼입찰 총정리 및 국토부의 강력 대응 요구

- 文정부 기간 동안 편법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싹쓸이한 업체들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이익 및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
- 이를 통해 야기된 호남건설사들의 언론사 매입, 건설 시장 혼란 등 부작용 지적,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 요구

### □ 경기도 백현동사업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거짓말 여부 팩트 체크

- 2021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현동사업과 관련하여 증언했던 내용이 거짓임을 주장
-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주고 받은 공문을 최초 공개하고 관련 내용 설명 및 질의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입증

- 文정부 동안 장기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의 증가 결과를 데이터로 입증하고, 입지 선정, 주택 유형 등 정부의 세밀한 설계 필요성 지적
- 주택청약제도 내 만 30세 미만 무주택 기간 불인정에 대한 근거 확인 및 개선 요청

### □ 택시 대란 대책 마련 촉구

- 국토부, 서울시가 각각 택시 대책 발표하면서 가중된 국민 혼란 지적 및 협조체계 구축 요구
- 관련 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 전용 서비스 90% 배차 보장, 승객 화이트리스트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국민 편익 증진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개선 요청

### □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시스템 문제 지적 및 개선 요구

- 문재인정부에서 설립한 공기업 자회사 시스템 한계 및 문제점 지적, 자회사 근로자 처우 개선 요구
- 부정채용, 고용세습 등 공기업들의 부적절한 채용 행태 점검 및 시정 요구

서범수 의원

# 무분별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등

## 주요 내용

### □ 세월호 예산으로 자녀들과 수영장 딸린 펜션여행, 요트탄 시민단체 적발

- 세월호 예산 6년간 110억 지원, 다 어디로 갔나?
-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시장후보 조직관리에 돈 뿌려(25개 동 96개 단체에 100만원~500만원씩)
- 세월호 예산 받아 자녀들과 여름에 수영장 딸린 펜션여행, 요트타고, 가죽가방 제작에 1천만원 사용, 남편회사에 인쇄 맡기고 부수 속여 돈 횡령 등 세월호 예산 횡령한 시민단체 감사 필요

### □ 문재인 정권 비호받은 (사)제주올레(서명숙 이사장), 기부금품법 위반

- 文전대통령 퇴임후 첫 여름휴가 제주도서 (사)제주올레 서명숙이사장과 함께 보낸 이유는? 서명숙은 文정권에서 훈장받고 대통령 표창받고 한국관광공사사외이사(연봉3천)까지 임명,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하여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박근혜와 다르다'고 함
- 한 해 약 40억의 기부금 및 보조금을 모집함에 따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모집자로 등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법위반 확인(행안부 및 제주도청 공문으로 확인 받음)
- LH공사에서 청년일자리 명분으로 6억4천만 원 받은 돈으로 횡령의혹 - (예)1억 받아 154만원 단기알바 3개월간 청년 3명 열정페이시키고, 나머지 약 8천만원은 시민단체 등 자기들 호주머니로

###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민단체 밀어주기 위해 평가점수 조작의혹

- 6억4천만원 예산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특정심사위원 짬짜미 평가보고서 공개하여 국토부 감사 요구함
- 민주당 제주도지사 2번 출마한 문대림 전 사장이 주도하여 시민단체 지원
- JDC도 文정권 출범이후 (사)제주올레에 2억3천만원 지원 밝혀져

서일준 의원

# 알박기와 무책임 그리고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부

## 주요 내용

### □ 신정부 출범 1년 이전 임명된 기관장 문제, 제도개선 필요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이전(21년 말~22년 3월까지)에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임원은 기관장 포함 23개 기관 총54명임
-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 경영책임은 윤석열 정부 몫이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과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 발생
- 따라서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 임명된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 재신임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개선 필요

### □ HUG 전세사고 피해 산정 및 대책마련 필요

-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금액은 5,790억이고 올해는 8월까지 5,368억이 발생하였음
- 또한 2021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금액이 51조 5,508억인데 최근 5년간의 평균 사고율 2%를 가정하여, 2년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에는 연 1조원의 전세보증금반환 사고금액이 예상됨
-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해왔던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한 나쁜임대인 대책 필요

### □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 선정 입찰 비리, 문재인 정부 실세 개입 의혹

-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과정에서 인천지검이 수사단계에서 인천공항 임직원의 '배임'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업무방해죄'의 무혐의 처리한 것을 최근 검찰(대검,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을 인천지검에 내렸음
- 인국공과 스카이72 골프장의 낙찰 업체는 매출이 0원이면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손해만 보는 엉터리 입찰이 있었고 이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음
- 이러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였던 '이상직 前 의원'의 개입 의혹이 있으며, 국토위 차원의 검찰고발 및 수사 적극 요청

유경준 의원

# 文정부 부동산정책과 불공정 실태를 파헤치고 실패를 고발하다

## ▌주요 내용

### □ 文정부 엉터리 부동산 정책

- 文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사실상 증세 목적임을 지적, 국토부 장관도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 현실화율 계획 재검토 요구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고분양가 갈등이 커지자 文정부가 사실상 폐지함을 비판, 공급 재개 필요성을 지적
- LH의 수요예측 실패로 공공분양주택 청약 미달율 30%달성 비판
- 대위변제금 급등에 따른 HUG의 기금 고갈 우려 지적, 대안 제시
- 보증보험 사기 실태 비판, 국토부·HUG에 형사고발 및 대책 마련 요구

### □ 文정부 불공정 실태 고발

- 文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위해 설립된 도로공사 자회사에 여전히 비정규직(960명)이 존재함을 지적, 내부 갈등·비리가 만연함을 지적
- LH 감정평가사 선정시 내부직원평가 점수 몰아주기로 전관예우 실태 지적
- 한국부동산원이 택지비를 인위적으로 하락·조정시키는 구조 지적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결재 전 인사명령안 유출·변경 감사 요구
- 한국공항공사 사장,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연루되어 수사 중임을 밝힘
- 文정부 보유세 정책이 공항공사 경영여건에 악영향을 미친 것을 지적
- 文정부 '남북 평화쇼' 위해 철도 착공식에서 혈세 8억이 낭비됨 지적
- 서울시 친일논란 전시물 기획업체, 박원순 前시장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 □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 마련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과도함을 지적, 국토부 지침 수정 및 재지정 요구
-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의 예약발매 시스템 DR센터 부재 지적
-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회사 인수에 대해 관리·감독 필요성 지적
- 안전점검업체 무작위 지정으로 인한 점검비 갑질 사태 비판
- 공동주택공시가격 부실조사·산정기초자료의 미흡함 지적
- KTX 설계결함으로 인한 승차감, 핸드폰 충전, 열차 지연 문제를 지적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혼잡도 공공데이터 활용이 부족함 지적
- 외국인 렌터카 이용객들의 과태료 미납 문제 지적, 대안 제시

이종배 의원

# 현실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매몰돼 실패한 일자리 정책·부동산 정책·기관 방만 운영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의 문제점 지적

## ▌주요 내용

###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민낯

-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당초 계획인원 9.6만명 대비 109.7% 수준인 10.5만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기여했다 자평
- 그러나 실상은 자회사 설립 후 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등 실적채우기용이었음 ▲ 공공기관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18.7%로 '16년 9.6%보다 8.1%p 증가 ▲ 공기업 정규직 신규채용은 '19년 1만 1,238명 채용에서 '21년 5,917년 채용으로 반토막 ▲ 비정규직 채용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임원 자리에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임명 ▲ 자회사 총 36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230%에 육박
- 전환 직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극 기용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촉구

### □ LH 사전청약제도 실패

- 현재까지 본청약이 이루어진 8개 필지 모두 입주예정시기 지연. 유관 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공급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해 졸속으로 주택공급 추진한 결과
- 사전청약에 당첨된 입주예정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입주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그 기간 동안 전세나 월세집을 떠돌며 금전적 피해를 감수해야 함
- '희망 고문'으로 전락한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청약 포기시 발생하는 청약 자격 제한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할 것 촉구

### □ HUG 출장 제도 방만 운영 실태 지적

- 기관 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참고하여 마련해야함에도 공무원에 비해 출장비 높게 책정. 임원들의 출장이 매우 잦고 대부분 주말, 공휴일 앞뒤에 몰려있어 출장 목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에도 사유를 명확하게 결제받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음
- 여비 규정을 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국토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출장 사유 확인 필요성 지적

정동만 의원

##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인적쇄신 및 구태청산 필요

### 주요 내용

□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피해는 청년세대에 전가

-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 추세로 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부동산 시장은 원활한 공급정책,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반박
- 문재인정부 시절 3명의 장관을 거치고 부동산정책을 24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억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을 지적
- 문재인정부 기간동안 혼인율과 출산율은 곤두박질. 부동산정책 실패 피해는 결국 청년세대에 전가됨을 지적.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적정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 문재인정부 코드인사 강력 규탄

- 그동안 문제되었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문재인정부 코드인사 기관장, 임원 등이 여전히 버티고 있음을 지적
-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 자체가 다른 문재인정부 코드인사들이 공공기관의 혁신은 물론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코드인사들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
-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실상은 자회사를 만들어 기관장과 임원 등에 문재인정부의 코드인사를 앉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도 실패했음을 지적

□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방안과 실천 의지 필요

- LH토지주택대학의 LH고위급 퇴직자였던 주요 교원들이 강의과정이나 시간에 비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음을 지적
- 2019년 도입된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의 특정업체와의 결탁 의혹을 지적하며 자체 감사가 필요함을 강조
- 2030세대 퇴직자가 많은 부분을 지적하며, LH내부의 자정 노력으로 이미지 쇄신 및 젊은 직원들의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



# 제3부

## 상임위 국회의원별 주요 성과

#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의원

## 여가부 발전적 해체 환영, 정책역량 키워 전문성 있는 부처로 거듭날 것 당부 '가족' 정의 규정 삭제로 사회 근간 흔들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확답 받아내

### 주요 내용

**□ 여가부 발전적 해체, 고유 역할 재정비 위해 전문성 있는 부처로 거듭날 것을 촉구**

- 여가부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임을 지적(윤미향·박원순·오거돈 사건 옹호 및 방임·더불어민주당 공약개발 등). 여당 간사로서 정부조직안 개편을 반대하는 야당 논리 반박. 정부측에 소모적 논쟁 종식시키고 정책역량 키워 전문성 갖춘 신생 본부로 발전시킬 것을 당부

**□ 정부 지원금으로 정치편향 활동하는 단체 적발, 엄정조치 요구**

-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 청소년 사업 지원을 받고 있었음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 마찬가지로 특정 사업에 지원되어야 할 여가부 예산도 몇몇 정치적 선동 집회를 주최하는 좌파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했음을 지적. 지원사업의 경우 목적 외 부정사용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조 및 부정사용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요구

**□ 사회 혼란과 분열 부추기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확답 받아내**

- 야당이 추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우리 법률이 정한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가치중립성을 띤 학문적 법률적 용어인 '건강가족'을 차별적 개념으로 호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1차적 구성단위인 가족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
- 또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후일 차별금지 조항 등과 결합해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법제화될 수 있음을 비판하며 여가부 장관에게 우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가족의 정의 규정을 현행대로 따르겠다는 답변 받아냄

김선교 의원

## 국민 눈높이에서 국가기관의 잘못된 집행, 방만운영을 바로잡았습니다.

### 주요 내용

**□ 위기청소년 상담 위탁업체, 여가부 보조금 7억원 빼돌린 부정수급 밝혀**

- 여가부 국고보조사업 '청소년모바일상담' 운영법인, 126회 부정수급·횡령으로 6년간 7억여원 챙기며,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이 일개 법인에 잇따른 격려방문 배경에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이 설립한 시민단체임을 밝힘. 정치세력에 기댄 국고보조금을 빼먹는 문제 지적.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및 지자체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 부정수급문제 엄단 촉구함

**□ 여가부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5년간 12억원, 반환명령에도 93%가 회수 안돼, 철저한 환수조치 주문**

- 잘못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여가부의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위탁기관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 뿐 아니라 제재부가금, 가산금, 재판 등 강제징수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환수할 것을 강조함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후속대책 점검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필요성**

-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스토킹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보호시설 확보 문제가 시급하나, 서울시 한곳 외에는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이 없는 문제를 지적함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예산 확보 및 증액 필요성 검토해, 서울 외에도 보호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
- 스토킹 피해자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미비해 관련 법률 제정 필요. 스토킹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내용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잠정조치 기간 연장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외, 국민 눈높이에서 지난 정부의 실정을 되짚고, 후속 대책을 점검함**

전주혜 의원

# 여성가족부 폐지와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

## 주요 내용

### □ 여성가족부 폐지와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 강조

-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로 이관 필요
-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적인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 통합적 추진체계로 변화 필요
- 문재인 정권 당시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장관 망언 예 등, 그동안 여가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지적

### □ 보조금 불법 사용 환수 및 전수조사 필요

-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주최를 예고한 단체에 여성가족부 보조금 지원 사실이 있음 지적
- 정치적 색깔을 띤 단체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 부적격임을 지적하고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 필요
- 정대협 보조금 부정수급 및 미환수 문제 등 여성가족부 보조금 사업 관리 부실 지적
- 여성가족부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 필요

### □ 양육비 이행 강화 강조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 등 개정된 양육비 이행강화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로 이행 소송 절차 지연 발생
- 양육비 송달 특례 신설 등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 조속 논의 촉구
  ※ 2021.6.9.「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최연숙 의원

# 여성가족부 기능 개편,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후속조치 강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정과제 이행 촉구

## 주요 내용

### □ 여성가족부 기능 변화는 시대적 소명,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민에 대한 약속

- 여가부 출범 후 호주제 폐지 등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성범죄·정의연 사건 등에서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 이어져
- 여가부 폐지 및 복지부·고용부로의 기능 이관을 통해 돌봄·고용 등의 분야에서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업무들이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 가능
-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포함 9개국만이 여성 정책을 단독 부처에서 소관, 여성 정책 복지·고용 분야와 접목할 때 업무 효과 높아

###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미흡, 여가부 후속 조치도 미흡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최근 2년간 D, E등급 총 7개소, C등급 총 55개소나 받아, C등급은 지적 사항을 보완·보수한다는 전제로 부여하는 등급임에도 추후 관리 부재
- 점검 후 조치에 대한 2018~2020년 데이터 미존재. 2021년 점검 결과, 미조치율 32%, 조치중이거나 미조치건에 대한 후속조치 안 함. 과태료·시정명령 처리 건도 파악 못 해
- 청소년 안전을 위해 데이터 취합, 후속조치 결과 파악 등 점검과 개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대선 공약 이행해야

- 디지털 성범죄 매년 증가, 특히 최근 2년간 10~20대 피해자가 증가해 전체 피해의 40% 이상 차지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요원 고용·영상물 삭제 지원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있어
- 디지털 성범죄지역특화상담소 전 지자체로 확대 및 예산 확보해야

2022

#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발 행 일** 2022년 11월
**발 행 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우)07238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국민의힘
02) 6288-0200